

주요국 예산안 2021

2021. 4

주요국 예산안 2021

2021. 4

연구진

연구책임자

윤 성 주 재정지출분석센터장
송 경 호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강민채 · 박신아 · 장준희 (국제기구)
김정은 (일 본)
엄동욱 (독 일)
이정인 (프랑스)
한혜란 (영 국)
서동규 (호 주)
배소민 (캐나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PART

1

총 론

I. 세계 재정정책 흐름	3
1. 세계 거시경제 전망	3
가. 세계 경제 전망	3
나. 주요 국가별 경제 전망	7
2. 세계 재정 전망	13
가. 세계 재정에 대한 전반적 전망	13
나. 주요 국가별 재정 전망	15
3. 주요국의 경제 및 재정정책	19
가. 통화정책	19
나. 재정정책	20

PART

2

각국 예산안 분석

I. 일 본	25
1. 경제 및 재정 전망	28
가. 경제 전망	28
나. 재정 전망	31
2. 예산기준	33

3. 예산안 내용	36
가. 세입	36
나. 세출	39
4. 주요 재정정책	46
가. 경제성장	46
나. 안전·재해 예방 및 사회보장	47
다. 지역 발전·창생	48
라. 예산 효율화 및 질 향상	49
II. 독일	53
1. 경제 및 재정 전망	55
가. 경제 전망	55
나. 재정 전망	58
2. 예산기조	59
3. 예산안	62
가. 재정수입	62
나. 재정지출	64
4. 주요 재정정책	69
가. 코로나19 피해 복구	69
나. 재정건전화	76
다. 에너지 및 기후보호 정책	78
라. 디지털 인프라	79
III. 프랑스	81
1. 경제 및 재정 전망	84
가. 경제 전망	84
나. 재정 전망	85
2. 예산기조	91

3. 예산안 주요 내용(PLF 2021)	92
가. 세입	92
나. 세출	93
4. 주요 재정정책	95
가. 프랑스 활성화(Plan de relance)	95
나. 공공재정 관리 개선	99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101
IV. 영국	103
1. 경제 및 재정 전망	106
가. 경제 전망	106
나. 재정 전망	108
2. 예산기조 및 정책 방향	110
3. 예산안 주요 내용	112
가. 수입 및 지출 규모 전망	112
나. 2021 예산안의 주요 정책 결정	116
4. 주요 재정정책	127
가. 예산안의 중기 경제·재정 전략	127
나. 성장을 위한 투자 계획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growth’	129
다. 재정준칙	133
V. 호주	137
1. 경제 및 재정 전망	139
가. 경제 전망	139
나. 재정 전망	141
2. 예산기조	144
3. 예산안 내용	148
가. 수입	148
나. 지출	152

4. 주요 재정정책	158
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158
나. 복지	160
다. 재정건전화	162
VI. 캐나다	165
1. 경제 및 재정 전망	167
가. 경제 전망	167
나. 재정 전망	168
다. 정책기조	169
2. 2020년 예산안 및 경제·재정 정책	171
가. 세입	171
나. 세출	173
3. 주요 경제 및 재정정책	176
가. 코로나19 대응(Fighting 코로나19)	176
나. 대유행 기간 자국민 지원(Supporting Canadians through the Pandemic) ...	179
다. 더 나은 기반 구축: 코로나19 경기 침체 극복 계획(Building Back Better : A Plan to Conquer the COVID-19 Recession)	183
라. 신중한 재정계획(A Prudent Fiscal Plan)	187
4. 코로나19 대응	191
가. 코로나19 현황	191
나. 코로나19 지원 현황	191

표 목차

PART 1 총론

〈표 I-1〉 세계 경제 전망	3
〈표 I-2〉 WEO 세계 경제 전망(GDP 성장률)	4
〈표 I-3〉 EU의 경제 전망	7
〈표 I-4〉 EU의 국가별 경제 전망	12
〈표 I-5〉 OECD의 재정 전망	13
〈표 I-6〉 EU의 재정 전망	15
〈표 I-7〉 OECD의 주요국 재정 전망	17
〈표 I-8〉 EU의 국가별 재정 전망	18

PART 2 각국 예산안 분석

〈표 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29
〈표 I-2〉 FY2020 주요 재정지표(일반회계)	32
〈표 I-3〉 FY2021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37
〈표 I-4〉 FY2021 일반회계 조세 및 인지수입	38
〈표 I-5〉 FY2021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임시·특별조치분 제외)	40
〈표 II-1〉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56
〈표 II-2〉 기술적 가정	56
〈표 II-3〉 FY2021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58

〈표 II-4〉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채무 전망	59
〈표 II-5〉 항목별 연방조세수입	62
〈표 II-6〉 2019~2024년 주요 분야별 연방지출 전망	67
〈표 II-7〉 부처별 재정지출	68
〈표 II-8〉 FY2020 제1차 추경예산안	70
〈표 II-9〉 독일 제1차 경기부양 재량 조치	71
〈표 II-10〉 FY2020 제2차 추경예산안	75
〈표 II-11〉 2020~2024년 에너지 및 기후보호 특별기금 계획	78
〈표 II-12〉 2021년 디지털 특별펀드 계획	79
〈표 III-1〉 거시경제 전망	85
〈표 III-2〉 2021년 예산법안	87
〈표 III-3〉 FY2021 일반정부 재정수지 전망	89
〈표 III-4〉 2021년 예산법안 미션별 세출 내역	94
〈표 IV-1〉 주요 경제 전망	106
〈표 IV-2〉 주요 재정 총량 전망	109
〈표 IV-3〉 경상수입 전망	113
〈표 IV-4〉 예산안의 총관리지출(TME) 계획	116
〈표 IV-5〉 2021 예산안 주요 정책의 재정적 영향	117
〈표 IV-6〉 예산책임청의 재정준칙 달성 여부 평가(2021년 3월 전망 기준)	134
〈표 IV-7〉 주요 목표 재정 지표	136
〈표 V-1〉 주요 경제변수 전망	140
〈표 V-2〉 예산 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142
〈표 V-3〉 저·중소득층 세금 감면	144
〈표 V-4〉 주요 지출 계획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146
〈표 V-5〉 주요 수입 계획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147
〈표 V-6〉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수입 전망 변화 비교	149

〈표 V-7〉 2020-21년 예산안 재정수입 규모	150
〈표 V-8〉 2020-21년 예산안 세목별 재정수입 규모	151
〈표 V-9〉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전망 변화 비교	154
〈표 V-10〉 2020-21년 예산안 기능별 지출	154
〈표 V-11〉 2020-21년 상위 20개 지출 프로그램	156
〈표 VI-1〉 캐나다 경제 전망	168
〈표 VI-2〉 캐나다 재정 전망	169
〈표 VI-3〉 세입 전망	172
〈표 VI-4〉 프로그램 지출 전망	175
〈표 VI-5〉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지출 전망	178
〈표 VI-6〉 직접지원 지출 전망	182
〈표 VI-7〉 간접지원 지출 전망	183
〈표 VI-8〉 ‘더 나은 기반 구축’ 지출 전망	186
〈표 VI-9〉 ‘신중한 재정계획’ 지출 전망	189
〈표 VI-10〉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190

그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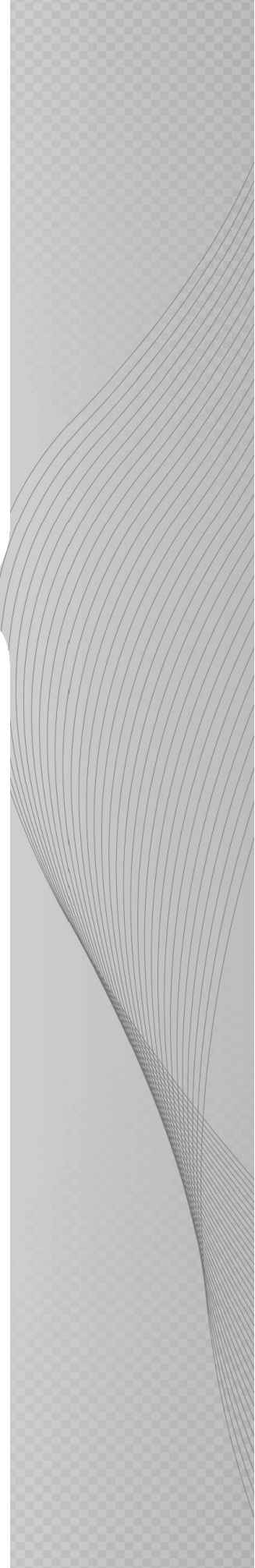
PART

2

각국 예산안 분석

[그림 I-1] 일반회계 주요 경비 추이	41
[그림 I-2] FY2021 일반회계 세출·세입 구성	41
[그림 II-1] 2021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 비중	66
[그림 II-2]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추이	77
[그림 III-1] 재정지출 증가율 추이 및 전망	86
[그림 III-2] 프랑스의 재정적자	89
[그림 III-3] 사회보장 부문 총재정수지 추이	102
[그림 IV-1] 공공부문 순차입 전망	109
[그림 IV-2] 공공부문 순채무 전망	109
[그림 IV-3] 재정 기조(fiscal stance)	110
[그림 IV-4] FY2021-22 공공부문 경상수입	112
[그림 IV-5] GDP 대비 총관리지출(TME) 비율 추이	114
[그림 IV-6] FY2021-22 공공부문 기능별 지출(총관리지출 기준)	115
[그림 V-1] 예산안 예측치 및 실질GDP 성장률	141
[그림 V-2] 정책 요인파 기타 변수에 따른 예산수지 추정량	143
[그림 V-3] 2020-21년 예산안 기능별 지출	155
[그림 V-4] 순채무 전망	163
[그림 V-5] 총채무 전망	163
[그림 VI-1] 채무비용 변화(1870~2026년)	187
[그림 VI-2]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확진자 및 사망자 수	191

제 1 부
총론



I. 세계 재정정책 흐름

1 세계 거시경제 전망

가. 세계 경제 전망

〈표 I-1〉 세계 경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구분	실질GDP(IMF 전망)				실질GDP(OECD 전망 ¹⁾)				실질GDP(EU 전망 ²⁾)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미국	2.2	-3.5	6.4	3.5	2.2	-3.5	6.5	4.0	-4.6	3.7	2.5
유로지역	1.3	-6.6	4.4	3.8	1.3	-6.8	3.9	3.8	-7.8 (-6.8)	4.2 (3.8)	3.0 (3.8)
일본	0.3	-4.8	3.3	2.5	0.7	-4.8	2.7	1.8	-5.5	2.7	0.9
중국	5.8	2.3	8.4	5.6	6.1	2.3	7.8	4.9	2.1	7.3	5.6
세계	2.8	-3.3	6.0	4.4	2.7	-3.4	5.6	4.0	-4.3	4.6	3.6

주: 1) OECD 전망에서 2019년 수치는 *OECD Economic Outlook*의 수치이고, 2020~2022년 수치는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의 수치임

2) EU 전망에서 유로지역의 괄호 안 숫자는 2021년 겨울 중간 전망(2021.2.) 기준이며, 그 외에는 2020년 가을 전망(2020.11.) 기준 전망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1*, 2021, Table A1; Table A4.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0.12.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2021.3.9., p.4.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20*, 2020.11, Table 1.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21(Interim)*, 2021.2, Table 1.

□ (IMF 전망¹⁾) 세계 경제는 2020년 -3.3%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1년 6.0%, 2022년 4.4% 성장할 전망

- 2020년 하반기 성장률이 대부분 지역에서 예상보다 높았던 점을 반영해 2020년 성장률이 2020년 10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대비 1.1%p 상향 조정됨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1*, 2021.

- 2021년과 2022년 성장률 역시 일부 주요국의 추가 재정지원과 백신에 따른 하반기 회복 기대를 반영해 각각 0.8%p, 0.2%p 상향 조정됨
-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정책 대응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중이나 국가 간, 국가 내 회복 격차가 나타남
 - 신흥시장 및 저소득 국가는 선진국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고 관광 또는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거나 정책 여력이 부족한 국가도 GDP 손실이 컸음
 - 국가 내에서는 청년, 여성, 저학력, 비공식 노동자들이 더 큰 피해를 받았음
- 높은 불확실성이 세계 전망을 둘러싼 가운데, 단기적으로 위험이 상·하방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상방 위험이 우세
 - 변종 코로나 확산 혹은 백신 유효성 여부, 정책 조치 효과, 금융 여건 및 원자재 가격 변동, 국제 협력 등이 요인으로 작용

〈표 I-2〉 WEO 세계 경제 전망(GDP 성장률)

(단위: 전년 대비, %)

구분	2020년 6월 WEO Update		2020년 10월 WEO		2021년 1월 WEO Update			2021년 4월 WEO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2	2021	2022
	세계 경제	-4.9	5.4	-4.4	5.2	-3.5	5.5	4.2	6.0
선진국	-8.0	4.8	-5.8	3.9	-4.9	4.3	3.1	5.1	3.6
미국	-8.0	4.5	-4.3	3.1	-3.4	5.1	2.5	6.4	3.5
유로지역	-10.2	6.0	-8.3	5.2	-7.2	4.2	3.6	4.4	3.8
일본	-5.8	2.4	-5.3	2.3	-5.1	3.1	2.4	3.3	2.5
그 외 선진국 ¹⁾	-4.8	4.2	-3.8	3.6	-2.5	3.6	3.1	4.4	3.4
신흥국 및 개도국	-3.0	5.9	-3.3	6.0	-2.4	6.3	5.0	6.7	5.0
아시아	-0.8	7.4	-1.7	8.0	-1.1	8.3	5.9	8.6	6.0
중국	1.0	8.2	1.9	8.2	2.3	8.1	5.6	8.4	5.6
인도 ²⁾	-4.5	6.0	-10.3	8.8	-8.0	11.5	6.8	12.5	6.9
아세안-5 ³⁾	-2.0	6.2	-3.4	6.2	-3.7	5.2	6.0	4.9	6.1

주: 1) G7 국가들(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과 유로지역 국가들 제외

2) 실적/전망치 데이터는 회계연도를 기초, 2011년부터 FY 2011-12를 기준 연도로 한 시장가격 기준 GDP

3)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ne 2020*, 2020.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0*, 2020.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1*, 2021.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1*, 2021을 편집

- (OECD 전망²⁾) 2020년 하반기 경기회복 추세, 백신효과, 주요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등을 고려하여 2021년 및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각각 5.6%, 4.0%*로 전망
- * 2021년 및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0년 12월 전망 대비 각각 1.4%p, 0.3%p 상향 조정됨
 - 각 국가들의 분기별 GDP는 2021년 중반부터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 간 혹은 지역 간의 차별화된 경기회복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간 경제 전망 결과는 2022년 4사분기 전 세계 GDP가 코로나19 직전(2019년 11월)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 주요 고려사항으로 백신의 생산 및 보급 속도, 인플레이션 상승, 금융시장 취약성 지속 등에 대해 언급
- (EU 전망³⁾) 작년 가을 이후 코로나19 변종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봉쇄 조치를 강화하여 2021년 EU 경제성장률은 가을 전망에 비해 약세를 보였으나, 백신접종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완화로 올해 하반기에는 민간소비 위주의 경제성장 전망
- (경제성장률) 2021년 2월 전망 기준, 2021년 EU 경제성장률 전망은 3.7%, 2022년 3.9%로 2020년 11월 가을 전망 대비 2021년 -0.4%p, 2022년 +0.9%p 변동 전망
 - 유로지역은 두 해 모두 3.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2020년 가을 전망 대비 각각 2021년 0.4%p 하향 조정되었고, 2022년은 0.8%p 개선 전망
 - 회원국별 회복 속도에 큰 차이가 있으나,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강한 모멘텀으로 인해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가을 전망에 비해 빠를 것으로 전망
 - 경제 회복 속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피해 정도와 관광업 의존 정도 등에 따라 EU 전체적으로 국가별로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됨
 - 일부 회원국들은 2021년 말 혹은 2022년 초에 위기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다른 국가들은 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

2)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Strengthening the recovery: The need for speed*, 2021,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34bfd999-en.pdf?expires=1616054603&id=id&accname=ocid72023593&checksum=37927692913203A74A7D8188BC170278>

3)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21(Interim)*, 202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2월 제1호, 2021.2.

- 억눌린 수요의 폭발 이후에도 축적된 가계소득 및 저축, 소비심리 확대, 저금리 금융 여건 등으로 민간소비의 지속적인 강세 여건이 조성됨
- (물가) 2021년 EU와 유로지역의 물가 상승률은 각각 1.5%, 1.4%로 가을 전망 대비 0.2%p, 0.3%p 상승했으며, 2022년에는 가을 전망과 동일한 1.5%, 1.3%로 전망
 - 2021년 2분기 경기 회복 전망이 지연되면서 총수요 측면의 가격 상승 압력의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11월 초 이후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4% 절상되면서 석유를 포함한 수입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2022년에는 공급이 조정되고 기저효과가 줄어들면서 유로지역 물가 상승률은 1.3%로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상
- (노동) 2020년 11월 가을 경제 전망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은 고용 유지 정책(SURE)으로 다소 완화되었으나, 내년 경기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2022년에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2020년 8.3%에서 2021년 9.4%, 2022년 8.9%로 전망
 -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노동부문 간 이동에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2021년에는 고용 지수가 소폭 감소한 후 2022년에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리스크) 팬데믹 상황의 진전과 백신접종의 효율성·효과성에 따라 경제 전망에 관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여전히 높음
 - (가을 전망과 비교) 하방 리스크가 감소하고 상방 리스크가 실현되면서 리스크는 더욱 더 균형을 이루게 됨
 - 백신접종과 코로나19 위기 이후 낙관주의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팬데믹 상황이 보다 길어지거나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혹은 장기화된 위기로 경제·사회 구조에 영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남을 수 있음
 - (상방 리스크) 백신접종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보다 일찍 완화되거나, 위기 후 낙관주의가 반영되어 억눌린 수요와 혁신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촉발할 수 있음

4)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20*, 2020.11.5.,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european-economic-forecast-autumn-2020_en

- (하방 리스크) 팬데믹이 더 지속적이거나,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대되는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파산 및 장기 실업, 더 높은 불평등 등을 통해 유럽 경제 및 사회 구조에 이력을 남길 수 있음
- (중요점) 회복·복구수단을 포함한 Next Generation EU 프로그램이 신속하게 실행되어 유럽 경제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I-3〉 EU의 경제 전망

(단위: %)

구분	전망시점	실질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유로 지역	2020년 11월 전망	-7.8	4.2	3.0	0.3	1.1	1.3	8.3	9.4	8.9
	2021년 2월 전망	-6.8	3.8	3.8	0.3	1.4	1.3	-	-	-
EU	2020년 11월 전망	-7.4	4.1	3.0	0.7	1.3	1.5	7.7	8.6	8.0
	2021년 2월 전망	-6.3	3.7	3.9	0.7	1.5	1.5	-	-	-

주: 1. EU의 겨울 중간 경제 전망(2021년 2월 전망)은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만 발표
 자료: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20*, 2020.11., Table 1.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21(Interim)*, 2021.2., Table 1.

나. 주요 국가별 경제 전망

□ IMF의 주요국 경제 전망⁵⁾

- (선진국) 취약층 백신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대면 활동이 재개되고 보상적 소비에 힘입어 2021년 5.1%로 성장세가 크게 강화될 전망
 - 미국(6.4%), 일본(3.3%), 독일(3.6%), 프랑스(5.8%) 영국(5.3%) 등 주요 선진국들이 2021년 양(+)의 성장률로 반등할 전망
 - 그러나 회복 경로는 국가별로 상이해 미국은 2021년 상반기, 일본은 2021년 하반기에 2019년 말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나, 유로지역과 영국은 2022년까지도 2019년 말 수준을 밑돌 전망

5)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1*, 2021.

-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인구 대부분이 2021년 내 백신접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1년 6.7%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선진국에 비해 2021년과 2022년에 이동제한 및 확산방지 조치가 더 자주 요구될 수 있어 이들 국가의 잠재 생산량에 중기적 상흔이 남을 수 있음
 - 효과적인 확산방지 조치, 강력한 공공투자 대응, 중앙은행 유동성 지원에 힘입어 강한 회복을 촉진한 중국과 다른 국가들 간에 상당한 차이가 전망되며, 특히 관광업 기반 국가들의 전망이 어두움
 - 주요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들이 2021년 양(+)의 성장률로 반등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8.4%), 인도(12.5%)가 높은 성장을 보일 전망

□ OECD의 주요국 경제 전망⁶⁾

- (현황) 전 세계 GDP가 팬데믹 이전 대비 1% 하회하는 수준까지 회복했으나 국가별 또는 부문별 경기회복 속도의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미국) 대규모 경기부양책 및 금융 상황이 개선되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
 - (주요 유럽 국가) 신종바이러스 확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남
 - (호주·일본·한국) 효과적인 봉쇄 조치, 정부 재정지원, 제조업의 회복 등으로 경제 성장률은 팬데믹 이전보다 소폭 낮은 수준임
 - (중국·인도·터키)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준재정 조치, 제조업과 건설업의 회복 등으로 인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어 경제성장률은 팬데믹 직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 (전망) 각 국가들의 분기별 GDP는 2021년 중반부터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차별화된 경기회복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미국)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에 따른 수요 증대가 경기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유럽 국가) 2021년까지 지속된 봉쇄 조치와 주요국 대비 제한적인 재정정책(유로지역의 재정지출은 GDP의 1% 수준) 등을 고려하여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

6)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2021.3.;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3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 효과적인 방역 조치, 중국의 경기 반등, 일본 및 인도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정책 등의 영향으로 견조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중남미 및 아프리카) 바이러스 재확산, 백신 확보 지연, 재정정책 여력 부족 등으로 경기회복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

□ EU의 주요국 경제 전망

○ EU 국가⁷⁾

- (독일) 2021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5%에서 3.2%로 반등하여 2021년 말 위기 이전의 경제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⁸⁾ 2022년에는 하반기의 성장 모멘텀에 힘입어 3.1%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전망
 - 생산 주문의 증가로 산업심리(sentiment in industry)가 높고, 수출이 다시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정부의 기업지원으로 채무불이행을 막고 고용성장 재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누적된 저축이 소비 회복을 촉진하고 투자도 증가할 전망
- (프랑스) 엄격한 이동제한 조치의 해제 및 국가회복계획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3분기부터 경제활동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2021년 성장률은 5.5%, 2022년 4.4%로 전망(2020년 경제성장률은 -8.3%)
 - 국가회복계획은 2021년 GDP의 1.6% 규모로 이 중 0.7%p는 회복 · 복구수단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100억유로(GDP 대비 0.4%) 규모의 생산세⁹⁾ 영구 감면이 포함됨
 - 민간소비의 회복 기여도가 높으며, 순수출도 성장에 크게 기여할 전망

7)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21(Interim)*, 2021.2.

8)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가 2021년 2월 2일 발표한 연례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이 위기 이전 경제수준으로 회복하는 시기를 2022년 중반으로 전망하고 있어 EU 경제 전망과 약간의 예측 차이가 있음(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 <https://www.bmwi.de/Redaktion/DE/Publikationen/Wirtschaft/jahreswirtschaftsbericht-2021.html>)

9) 프랑스 생산세는 15.7%로 EU 국가 평균 12.9%보다 높으며 GDP 비율 3.2%를 차지하여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비중(외교부, 「프랑스 코로나19 관련 경제 동향(2020.10.12.~10.16.)」,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7/dwn.do?brd_id=8886&seq=1332210&data_tp=A&file_seq=1, 검색일자: 2021.4.5.)

- (스페인) 민간소비와 투자가 2021년 2분기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과 불확실성 감소로 투자가 반등세로 돌아설 전망
 - 관광업이 약하게 회복되면 수입보다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순수출이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2021년 경제성장률은 5.6% 전망
 - 2022년에는 관광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대부분의 경제활동 제약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억눌린 수요의 증가가 재흡수되면서 내수 증가세는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성장률은 5.3%로 전망
- (이탈리아) 이동제한 조치로 대면 위주의 서비스업 타격이 컸으며, 2020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세가 이어져 2021년 경제성장률은 3.4%로 전망되며, 2022년 말까지 2019년 경제수준의 회복은 어려울 전망(2020년 성장률은 -8.8%)
 - 2022년 경제성장률은 3.5%로 전망되나, Next Generation EU 지원이 전망 가정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경제성장률 전망에 상방 리스크가 있음
- 비EU 국가¹⁰⁾
 - (영국) 2020년 11월 가을 전망에 따르면, 코로나19로 2020년 GDP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2021년에 민간소비가 반등세를 나타낼 것이나, EU-영국 교역관계로 회복세는 약할 것으로 전망(2020년 GDP -10.3%, 2021년 3.3%, 2022년 2.1%)
 - 2021년 1월부터 EU와 영국이 WTO의 최혜국 원칙에 따라 무역관계를 맺을 것으로 가정할 경우 2021년 경기 회복세는 꺾일 전망
 - 2021년 경제 반등은 민간소비가 주도하나,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과 EU와의 덜 유익한 새 무역관계에 적응해야 하므로 기업투자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
 - (미국) 2020년 11월 가을 전망 기준 2020년 경제성장률은 -4.6%, 2021년 3.7%, 2022년 2.5%로 전망
 - 민간수요 증가, 노동시장 개선, 완화적 통화정책과 대규모 재정 부양책으로 4~5월 충격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르게 회복

10)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20*, 2020.11.

- 경제는 더딘 속도이지만 향후 계속 회복되어 2022년 초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나, 고용 회복에는 더 오랜 기간이 필요
- (일본) 2020년 GDP 성장률은 -5.5%이고, 2021년은 2.7%로 8.2%p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2022년은 전년 대비 1.8%p 감소한 0.9%로 전망
 - 2020년 하반기 경제는 대규모 재정부양책, 다소 성공적인 봉쇄정책, 대외수요 회복으로 반등이 전망
 - 2021년에는 억눌린 민간소비 수요가 살아나고, 도쿄올림픽이 2021년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경기부양책이 유지될 전망
 - 2022년에는 재정·통화 정책 여력의 축소, 대면에서 디지털 형태로의 전환과 관련된 과제,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편,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 수입 등으로 전년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중국) 서비스 분야의 활동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경제성장률은 2.1% 성장하고, 2021년에는 7.3%, 2022년에는 5.6%로 전망
 - 코로나19 조기 대응 및 강력한 통제, 정책지원, 대외수요의 증가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및 기술의 디커플링¹¹⁾을 추진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음

11) 탈동조화 현상, 글로벌 경제사슬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연관성을 낮추거나 단절

〈표 I-4〉 EU의 국가별 경제 전망

(단위: %)

구분	전망시점	실질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독일	2020년 11월 가을 전망	-5.6	3.5	2.6	0.4	1.4	1.3	4.0	4.0	3.8
	2021년 2월 겨울 전망	-5.0	3.2	3.1	0.4	2.3	1.3	-	-	-
프랑스	2020년 11월 가을 전망	-9.4	5.8	3.1	0.5	0.9	1.5	8.5	10.7	10.0
	2021년 2월 겨울 전망	-8.3	5.5	4.4	0.5	1.1	1.5	-	-	-
스페인	2020년 11월 가을 전망	-12.4	5.4	4.8	-0.2	0.9	1.0	16.7	17.9	17.3
	2021년 2월 겨울 전망	-11.0	5.6	5.3	-0.3	0.8	1.1	-	-	-
이탈리아	2020년 11월 가을 전망	-9.9	4.1	2.8	-0.1	0.7	1.0	9.9	11.6	11.1
	2021년 2월 겨울 전망	-8.8	3.4	3.5	-0.1	0.8	0.9	-	-	-
영국	2020년 11월 가을 전망	-10.3	3.3	2.1	0.9	2.3	2.9	5.0	7.3	6.2
	2021년 2월 겨울 전망	-	-	-	-	-	-	-	-	-
미국	2020년 11월 가을 전망	-4.6	3.7	2.5	1.1	1.6	1.8	7.7	6.2	5.4
	2021년 2월 겨울 전망	-	-	-	-	-	-	-	-	-
일본	2020년 11월 가을 전망	-5.5	2.7	0.9	0.1	0.1	0.3	3.1	2.9	2.7
	2021년 2월 겨울 전망	-	-	-	-	-	-	-	-	-
중국	2020년 11월 가을 전망	2.1	7.3	5.6	-	-	-	-	-	-
	2021년 2월 겨울 전망	-	-	-	-	-	-	-	-	-

주: EU의 겨울 중간 경제 전망(2021년 2월)은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만 발표하며 전망 대상 국가는 EU 회원국에 한정되므로 영국, 미국, 일본, 중국의 전망치를 포함하지 않음

자료: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20*, 2020.11,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21(Interim)*, 2021.2.

2 세계 재정 전망

가. 세계 재정에 대한 전반적 전망

□ IMF 전망¹²⁾

- (재정수지) 일부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2021년 만료·중단되나 대규모 조치가 2021년 이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여 2021년 세계 경제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1.6%p 개선된 9.2%의 적자를 보일 전망
 - 선진국의 2021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1.3%p 개선된 -10.4%, 신흥국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2.1%p 개선된 -7.7%, 저소득 개도국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0.6%p 개선된 -4.9%로 전망됨
- (채무) 세계 경제의 일반정부 총채무는 2020년 GDP 대비 97.3%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21년 98.9%, 2026년 99.3%로 예상되는 등 중기적으로 안정적일 전망
 - 선진국의 2021년 GDP 대비 총채무는 전년 대비 2.4%p 증가한 122.5%, 신흥국 총채무는 전년 대비 0.7%p 증가한 65.1%로 전망되는 반면, 저소득개도국 총채무는 전년 대비 0.9%p 감소한 48.6%로 전망됨

□ OECD 전망

- (재정수지)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0년 -11.5%, 2021년 -8.4%로 전망¹³⁾

〈표 I-5〉 OECD의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3~2019 평균	2019	2020	2021	2022
재정수지	-3.2	-3.0	-11.5	-8.4	-5.7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0.12., p.13.

12) IMF, *Fiscal Monitor*, April 2021, 2021.

13)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0.12.

-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있음¹⁴⁾
 - (선진국)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의 경우 최근 발표한 추가 재량적 재정지원 정책이 2021년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따른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될 경우 향후 1년간 GDP 성장률(3~4%) 제고, 고용 증가(225~300만명), 주요 교역 상대국 간의 성장 제고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신흥국) 중국 등 일부 신흥국가는 2021년 중 재정정책을 축소할 가능성이 보임
- (EU 전망¹⁵⁾) 2020년 유로지역의 재정정책 기조¹⁶⁾는 강한 확장 기조이며, 코로나19 긴급 조치를 제외하더라도 2021년 확장 기조 전망
 - (재정수지¹⁷⁾) 2020년 유로지역의 재정적자 전망은 GDP 대비 8.8%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완화와 자동안정화 장치로 적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2021년은 6.4% 전망
 - (2020년) 2019년에는 루마니아만 GDP 대비 3%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불가리아¹⁸⁾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 GDP 대비 3%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 (2021년) 경제활동의 반등과 코로나19 관련 비상 조치들의 완화를 반영하여 2021년 유로지역 재정적자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재정기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재정 조치로 인해 2020년 상당 규모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예상되며, 2021년에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 긴급 조치¹⁹⁾는 EU 평균 GDP 대비 약 4.5%로 봄 전망에 비해 1.2%p 증가(스페인 GDP 대비 약 1%에서 리투아니아 7% 수준선)

14)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2021.3.;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3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15)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20*, 2020.11.

16) 구조적 재정수지 변화로 측정된 재정 기조(fiscal stance)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11월 제1호, 2020.

18) 불가리아는 2015년 GDP 대비 재정적자 1.7%를 기록한 후 재정건전화 조치(에너지 소비세 인상, 조세 징수 시스템 개선, 자본 및 기타 경상 지출의 감소 등)를 통해 4년간 재정흑자(2016년 GDP 대비 재정수지 0.1%, 2017년 1.1%, 2018년 2.0%, 2019년 2.1%)를 유지하여 건전한 재정상태에서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2020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3.0%, 2021년 3.0%, 2022년 1.4%로 전망

19) 세금납부 유예 및 정부보증 등은 제외

- (정부채무) 유로지역과 EU 모두 일반정부 GDP 대비 채무비율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세였으나, 2020년 채무비율이 15%p 이상 증가하여 유로지역 101.7%, EU 93.9%로 전망되고, 2021년은 유로지역 102.3%, EU는 94.6%로 전망
- 가을 전망 기준 2020년 모든 회원국들의 채무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2022년에 회원국 중 1/3 국가들의 채무가 감소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
- 2022년에도 GDP 대비 채무비율이 15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은 그리스, 이탈리아이고, 120% 이상은 포르투갈, 스페인, 100% 이상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벨기에 키프로스, 프랑스가 해당

〈표 I-6〉 EU의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일반정부 기준)

구분	재정수지			총채무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유로지역	-4.8	-4.3	-3.7	101.7	102.3	102.6
EU 27개국	-4.8	-4.2	-3.5	93.9	94.6	94.9

주: 재정수지는 일반정부 재정수지 기준

자료: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20*, 2020.11.

나. 주요 국가별 재정 전망

□ IMF의 주요국 재정 전망²⁰⁾

- (선진국) 많은 선진국은 2021년에도 상당한 규모의 지출 및 수입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높은 부채에도 저금리로 인해 이자비용이 낮은 편임
- (미국) 2021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0.8%p 개선된 -15.0%로 전망되며, 총채무는 전년 대비 5.7%p 증가한 132.8%로 전망됨
- (유로지역) 2021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0.9%p 개선된 -6.7%로 전망되며, 총채무는 전년 대비 1.3%p 증가한 98.2%로 전망됨

20) IMF, *Fiscal Monitor*, April 2021, 2021.

- (일본) 2021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3.2%p 개선된 -9.4%로 전망되며, 총채무는 전년 대비 0.3%p 증가한 256.5%로 전망됨
-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선진국과 대비해 상대적으로 신흥국 및 저소득 개도국의 지원 규모는 소규모이고 상당수 만료되었으며, 특히 저소득 개도국은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어 대 규모 적자 유지가 어려움
- (중국) 2021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1.8%p 개선된 -9.6%로 전망되며, 총채무는 전년 대비 2.8%p 증가한 69.6%로 전망됨

□ OECD의 주요국 재정 전망²¹⁾

- (미국)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 속에서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재정수지는 2021년 -11.6%, 2022년 -8.3%로 전망
- (일본) GDP 대비 0.5% 규모의 추가 재정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며 추가 재정지원이 실시될 경우 국가부채 규모가 GDP의 2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영국) 정부순융자(government net lending)는 2020년 GDP 대비 16.7%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총채무(gross public debt)는 2022년에 GDP 대비 16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프랑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118.5%까지 증가하고, 재정수지는 2021년 -7.4%, 2022년 -5.6%로 전망
- (독일) 재정수지는 2021년 -4.4%, 2022년 -1.8%로 전망되나 2021년과 2022년(GDP의 2% 미만) 재량적 재정지원이 조기 철회될 경우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국) 경기 회복을 위해 꾸준히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1년 -6.2%, 2022년 -5.2%로 전망
- (한국) 정부부채를 GDP의 60%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된다면 재정여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수지는 2021년 -3.8%, 2022년 -3.0%로 전망

21)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0.12.; 재정지출분석센터,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 No.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표 I-7〉 OECD의 주요국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재정수지					
미국	-6.3	-6.7	-15.4	-11.6	-8.3
일본	-2.3	-2.6	-10.5	-5.5	-3.5
영국	-2.2	-2.4	-16.7	-13.3	-8.8
프랑스	-2.3	-3.0	-9.5	-7.4	-5.6
독일	1.8	1.5	-6.3	-4.4	-1.8
중국	-3.0	-3.7	-6.9	-6.2	-5.2
한국	3.0	0.9	-4.2	-3.8	-3.0
국가채무					
미국	106.6	108.4	128.0	134.2	136.3
일본	224.2	225.3	241.6	243.3	243.9
영국	113.9	117.3	145.3	157.4	160.5
프랑스	98.0	98.1	115.7	116.8	118.5
독일	61.7	59.5	73.9	76.2	75.8
중국	-	-	-	-	-
한국	41.9	40.9	43.9	46.3	48.1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0.12., Ch.3의 국가별 경제 및 재정 전망 표 재구성

□ EU의 주요국 재정 전망²²⁾

○ EU 국가

— (독일) 2019년 GDP 대비 재정흑자 1.5%를 기록한 이후 2020년 -6.0%, 2021년 -4%, 2022년 -2.5%로 전망되며, GDP 대비 정부채무는 2019년에 2002년 이래로 처음 60% 이하를 기록했으나, 2020년 71%, 2022년 69%로 증가 전망²³⁾

- 정부채무의 증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안정화 장치와 재정조치, 철도 및 항공 관련 투자로 인한
- 독일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조치는 자영업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실직 방지를 위한 지원 및 보건 지출 등이 취해졌으며, 2020년 GDP 대비 4.7%, 2021년 2.1% 규모

22)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20*, 2020.11.

23) 회복·복구 수단의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조치들을 이번 전망 가정에 포함하지 않음

- (프랑스) 2019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3%에서 2020년 10.5%로 증가하고, 2021년 긴급조치의 완화, 자동안정화 장치의 영향으로 8.25%로 줄어든 후 2022년 지출의 상대적 감소로 재정적자는 6%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정부채무는 2019년 98.1%에서 2020년 116%로 증가하고, 2021년 117.8%, 2022년 119.4%로 전망
- 비EU 국가
 - (영국) 2020년 3월 예산안 발표 이후 GDP 대비 약 10%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재정 조치를 발표했으며, FY2019-2020²⁴⁾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8%에서 FY2020-2021 14.75%로 증가한 후 FY2021-2022에 7.25%로 감소 전망²⁵⁾
 - (미국) 2020년 가을 전망에 따르면, 2020년 통화정책 지원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정책 지원은 2020년 상반기 이후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일반정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20년 15%를 상회할 예정이며, 정부채무는 2019년에 비해 약 20%p 가까이 증가하고, 2021년에는 130%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
 - (일본)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9년 3.25%에서 2020년 14%로 증가하고, GDP 대비 채무비율은 2020년에 265.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추가적인 부양책이 없다면 재정적자는 2022년 3.5%로 감소할 전망
 - 2020년 4월과 5월 두 차례의 추경예산(GDP 대비 약 11%) 재정지원으로 반등을 촉진할 예정이나, 공급 측면의 병목현상과 집행의 비효율성, 인구 관련 과제 등으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적을 가능성이 높음

〈표 I-8〉 EU의 국가별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일반정부 기준)

구분	재정수지			총채무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독일	-6.0	-4.0	-2.5	71.2	70.1	69.0
프랑스	-10.5	-8.3	-6.1	115.9	117.8	119.4
영국	-13.4	-9.0	-7.6	104.4	111.0	113.7
미국	-15.3	-6.9	-4.7	127.9	128.7	128.7
일본	-13.9	-5.6	-3.5	265.5	263.4	263.5

주: 재정수지는 일반정부 재정수지 기준

자료: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20*, 2020.11.

24) 영국의 회계연도(Fiscal year)는 매년 4월~그다음 해 3월을 기준으로 함

25) 회계연도 기준의 전망치이므로 '〈표 I-8〉 EU의 국가별 재정 전망'의 전망치와 차이가 있음

3 주요국의 경제 및 재정정책

가. 통화정책

□ IMF의 통화정책 권고²⁶⁾

- 대유행이 지속되는 동안은 수용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금융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
-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은 단순히 자국 통화 조정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의 대외 금융 여건과 자본 흐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명확한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forward guidance) 및 의사소통이 특히 중요
- 신흥시장 경제는 환율정책, 자본흐름 관리, 거시건전성 정책 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실효금리 하한(effective lower bound)에 처한 국가는 자산 매입,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 마이너스 금리 등 지속적인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정책 여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OECD의 통화정책 권고²⁷⁾

-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함
 - 각 국가들은 경기회복 속도나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정책을 마련하고 금융자산 및 주택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거시건전성 조치를 고려해야 함
 - 인플레이션 상승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기조 변화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경우 수요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운 통화정책인 ‘평균물가안정 목표제(average inflation-targeting framework)’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상회하더라도 즉각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음

26)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1*, 2021.

27)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2021.3.;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3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나. 재정정책

□ IMF의 재정정책 권고²⁸⁾

-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신중한 정책 우선순위 정립이 필요
 - 자영업자와 비공식 노동자 등 실업보험 대상을 확대해 사회보호를 강화
 - 보건의료, 유아 발달 프로그램,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대한 적절한 지원 보장
 - 탄소 의존도 감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
- 국가별로 유행 단계, 회복 강도, 경제구조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 대응이 필요
 - 대유행이 지속되는 동안은 보건위기 대응, 보건의료 지출을 우선시해야 하며 잘 선별된(well-targeted) 재정지원이 필요
 - 경제 회복이 진행되면 지원이 갑작스럽게 종료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생산 능력을 높이고 생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
 -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이 필요
- 신흥국 또는 저소득개도국과 선진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국제 협력이 필수적임
 -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에 대한 충분한 자금지원을 포함해 전 세계적 백신 생산과 보편적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금융 제약을 겪는 국가들이 국제 유동성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
 - 또한 기후 변화 완화, 무역 및 기술 분쟁 등 경제 문제 해결, 국제 조세정책 공조를 위해 긴밀히 노력해야 함

□ OECD의 재정 및 기타 정책권고²⁹⁾

- 경기회복, 바이러스 확산 억제, 팬데믹에 따른 장기비용 축소를 위해 전 세계 백신보급 가속화, 적극적인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

28)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1*, 2021.

29)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2021.3.;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3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백신 생산 및 보급 가속화가 시급함
 - 전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해 국가 간 협력, 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시스템(검사·추적·격리)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각 국 정부는 소득 및 일자리 지원 등 적극적 재정지원을 지속해야 하며 최근 결정된 추가적 경기부양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재정지원 방식은 경기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보편적 지원에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부문 및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함
- 코로나19는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부문 간 불평등 확대, 산업구조 재편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 2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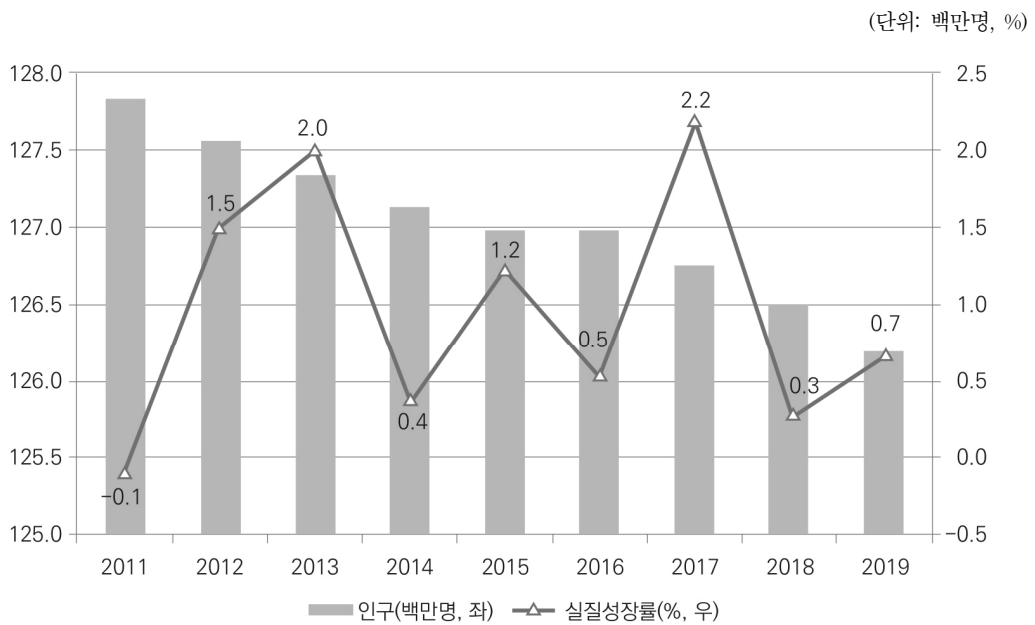
각국 예산안 분석



I. 일 본

- FY2021: 2021년 4월 1일 ~ 2022년 3월 31일
- FY2021 예산편성 일지
 - 2020.7.21. FY2021 예산의 개산요구 기준 발표
 - 2020.10.7. FY2021 일반회계 개산요구액 및 요망액 발표
 - 2020.12.8. FY2021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발표
 - 2020.12.8.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 경제대책 발표
 - 2020.12.15. FY2020 제3차 추경예산안 발표
 - 2020.12.21. FY2021 예산 정부안 발표
 - 2021.1.18. FY2021 예산 정부안 관련 추가 발표(특별회계 등)
 - 2021.1.18. FY2021 경제 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방침 각의 결정
- 출처
 - 「令和3年度予算の概算要求の具体的な方針について」(令和2年7月21日閣議 財務大臣発言要旨)(2020.7.21.)
 - 令和3年度一般会計概算要求・要望等(2020.10.7.)
 - 令和3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令和2年12月8日閣議決定)(2020.12.8.)
 - 国民の命と暮らしを守る安心と希望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2020.12.8.)
 - 令和2年度補正予算(第3号)案(2020.12.15.)
 - 令和3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2020.1.18.)

- 令和3年度予算政府案(2020.12.21.)
- 令和3年度予算政府案関連追加公表(2021.1.18.)
- 환율: 100엔 = 약 0,904달러(2019년도 평균)³⁰⁾
- 경제규모: 2019년 경상GDP 5조 3,591억달러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2018년 기준 36.8%
- 인구: 1억 2,614만명(2019년 기준)
- GDP 및 인구 추이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0, 검색일자: 2021.1.26.

30) 자료: OECD stat., Exchange rates (USD monthly averages)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종합경제대책 및 FY2020 제3차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한 지원책 등에 의한 각종 지원책 효과와 해외경제 개선에 힘입어 회복될 전망
- (재정수지) 2021년도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112.5% 증가한 20.4조엔으로 전망
- (국가채무) 2021년도 국채잔고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990.3조엔을 나타낼 전망이며, 국채의존도는 전년 대비 9.2%p 증가한 40.9%로 전망됨

□ 예산기조

- FY2020 3차 추경과 함께 이른바 ‘15개월 예산’을 통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며, 중장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 예산안 내용

- (세입) 2021년도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57.4조엔, GDP 대비 비중은 10.3%로 전망됨
- (세출) 2021년도 일반회계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106.6조엔으로 전망되며, 국채비를 제외한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82.9조엔으로 전망됨
 - (종합경제대책)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책 및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을 통하여 총재정지출 40조엔을 추가 편성
 - (3차 추경)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2차 확산에 의한 경제대책을 위한 필요경비 편성을 위해 15개월 예산의 일환으로 총세출 15.4조엔을 편성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 디지털청 신설을 통한 디지털 사회,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사회 실현을 위해 혁신적 대응
- (재정건전화) 국가사업의 재검토를 통해 세출의 중점화·효율화 달성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³¹⁾

- (총평)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이하 종합경제대책)³²⁾」의 원만한 실행 및 FY2020 제3차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한 지원책 등에 의한 각종 지원 효과와 해외경제 개선에 힘입어 회복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 (성장률) 2021년도 실질GDP 성장률은 4.0%, 명목GDP 성장률은 4.4%로 전망
 - 종합경제대책의 원활하고 착실한 실시에 의해 공적 지출에 의한 경제 뒷받침과, 민간수요의 환기 및 자율적인 회복이 예상되어 FY2021에는 경제가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 (민간최종소비지출) 감염 확대 방지와 사회경제 활동의 양립에 의해 고용·소득환경의 개선 및 종합경제대책의 효과로 전년 대비 3.9% 정도 증가
 - － (민간주택투자) 임대주택 착공이 감염증 영향에 의해 감소하였지만,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1.8% 증가
 - － (민간기업설비투자) 침체에서 회복 및 종합경제대책의 효과, 디지털·그린화 촉진 등에 의해 전년 대비 2.9% 정도 증가
 - － (정부지출) 종합경제대책에 따른 정부지출 및 사회보장 관련 비용 증가 등에 의해 전년 대비 3.3% 정도 증가
 - － (해외수요) 세계 경제의 회복에 따라 증가할 전망(실질 경제성장률에 대한 해외수요의 기여도 전년 대비 0.7% 정도 전망)
- (노동·고용) 감염 확대 방지와 종합대책의 효과에 의해 고용환경 회복세가 계속됨과 동시에, 여성 및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 참가 확대의 영향에 의해 고용자 수는 증가(전년 대비 0.7% 정도 증가)하고, 완전실업률은 2.7%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31) 본 경제 전망은 「2021년도 경제재정운영의 기본방침」에 기재된 경제재정운영을 전제로 함

32)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를 회복시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열어 내년도 중에는 국가 경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민간수요 주도의 성장궤도를 돌리기 위한 시책(자료: 일본 내각부, 「国民の命と暮らしを守る安心と希望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 2020.12.8.)

- (광공업 생산) 국내 수요와 수출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9.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 물가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수급을 견인하여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0.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
 - GDP디플레이터 역시 전년 대비 0.3% 상승 전망
- (국제수지) 소득수지 흑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회복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경상수지 대비 명목GDP 비율 3.4%)

〈표 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년 대비 %, 조엔)

구분	2019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가율					
	실적	추정	전망	2019		2020		2021	
	(명목)	(명목)	(명목)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국내총생산(조엔)	559.7	536.1	559.5	0.5	-0.3	-4.2	-5.2	4.4	4.0
민간최종소비지출	304.2	285.9	297.2	-0.3	-0.9	-6.0	-6.0	4.0	3.9
민간주택투자	21.4	20.0	20.6	4.1	2.5	-6.3	-6.7	2.7	1.8
민간기업설비투자	91.6	83.7	86.4	-0.2	-0.6	-8.6	-8.1	3.2	2.9
민간재고변동(기여도) ¹⁾	2.0	1.4	1.1	(-0.1)	(-0.1)	(-0.1)	(-0.0)	(-0.1)	(-0.1)
정부지출	141.0	146.4	151.7	2.6	1.9	3.9	3.7	3.6	3.3
정부최종소비지출	111.7	115.4	119.5	2.4	2.0	3.3	3.2	3.5	3.3
공적고정자본형성	29.3	30.9	32.2	3.1	1.5	5.7	5.4	4.1	3.3
재화·서비스 수출	95.5	80.2	90.2	-5.8	-2.6	-16.0	-13.7	12.5	11.4
(공제) 재화·서비스 수입	96.0	81.5	87.5	-5.6	-1.2	-15.1	-6.4	7.4	6.7
내수기여도	/			0.5	-1.2	-4.1	-4.0	3.6	3.3
민간수요기여도				-0.1	-0.1	-5.0	-4.9	2.6	2.4
공적수요기여도				0.6	-0.6	1.0	0.9	1.0	0.9
외수기여도				-0.0	-0.2	-0.1	-1.2	0.7	0.7
국민총소득(GNI)	581.5	556.7	578.0	0.5	-0.1	-4.3	-4.1	3.8	3.6

〈표 I-1〉의 계속

(단위: 전년 대비 %, 조엔)

구분	2019	2020	2021	전년 대비 증가율					
	실적	추정	전망	2019		2020		2021	
	(명목)	(명목)	(명목)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노동·고용									
노동력인구	6,895	6,861	6,882		0.7		-0.5		0.3
취업자 수	6,733	6,652	6,693		0.8		-1.2		0.6
고용자 수	6,020	5,945	5,984		0.0		-1.2		0.7
완전실업률(%)	2.3	3.1	2.7						
생산(%)									
광공업생산지수(증감률)	-3.8	-11.0	9.4						
물가(%)									
생산자물가지수(변화율)	0.1	-1.8	0.7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	0.5	-0.6	0.4						
GDP디플레이터(변화율)	0.9	1.0	0.3						
국제수지(조엔)									
무역·서비스수지	0.2	-1.1	2.6						
무역수지	0.7	0.9	3.8						
수출	74.9	65.1	72.1		-6.7		-13.1		10.7
수입	74.3	64.3	68.3		-6.7		-13.5		6.2
경상수지	20.1	15.3	18.3						
명목GDP 대비 경상수지(%)	3.6	2.8	3.4						

주: 1. 2019년 10월에 실시된 소비세율 인상이 2020년도 물가 상승률에 미친 영향을 기계적으로 시산하면, 소비자물가(종합) 0.5%p 정도, GDP디플레이터는 0.4%p 정도로 전망됨. 또한 소비세율 인상세 수반하여 실시되는 교육 무상화에 의한 소비자물가(종합)의 영향을 기계적으로 시산하면 유아교육·보육 무상화는 -0.3%p 정도, 고등교육 무상화는 -0.1%p 정도로 전망됨. GoTo 캠페인 사업의 소비자물가(종합) 영향은 2020년에 -0.3%p 정도, 2021년에 0.2%p 정도로 전망됨

1) () 안의 수치는 GDP 성장 기여도를 의미

자료: 내각부, 「令和3年 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營の基本的態度」, p.5 재구성, 2021.1.18.

나. 재정 전망

- (재정수지) 2021년도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112.5% 증가한 20.4조엔을 나타낼 전망
 - (세입) 2021년도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57.4조엔, GDP 대비 비중은 10.3%로 전망되며, GDP 대비 세수 및 기타수입의 비중은 전년 대비 0.6%p 증가한 14.8%로 전망
 - (세출) 2021년도 일반회계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106.6조엔(GDP 대비 19.1%)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세출 중 국채비를 제외한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82.9조엔(GDP 대비 14.8%)으로 전망
- (국가채무) 2021년도 국채잔고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990.3조엔을 나타낼 전망이며, 국채의존도는 전년 대비 9.2%p 증가한 40.9%로 전망
 - GDP 대비 국채잔고는 전년 대비 18%p 증가한 177%로 전망되며, GDP 대비 국가 및 지방의 장기채무잔고는 전년 대비 8%p 감소한 216% 규모로 전망

〈표 I-2〉 FY2020 주요 재정지표(일반회계)

(단위: 조엔, %)

구분	FY2015	FY2016	FY2017	FY2018	FY2019	FY2020	FY2021 (정부안)
일반세출 ²⁾	57.4	57.8	58.4	58.9	62.0	63.5	66.9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 ³⁾	72.9	73.1	73.9	74.4	77.9	79.3	82.3
GDP 대비 %	13.7	13.6	13.5	13.5	14.0	13.9	14.7
일반회계세출 총액	96.3	96.7	97.5	97.7	101.5	102.7	106.6
GDP 대비 %	18.1	18.0	17.8	17.7	18.2	18.0	19.1
조세 및 인지수입 ⁴⁾	54.5 (6.2)	57.6 (6.3)	57.7 (6.3)	59.1 (6.4)	62.5 (7.9)	63.5 (10.2)	57.4 (9.5)
GDP 대비 %	10.2	10.7	10.5	10.7	11.2	11.1	10.3
국채발행 수입	36.9	34.4	34.4	33.7	32.7	32.6	43.6
국채잔고	805.4	830.6	853.2	880.2	898	906	990.3
GDP 대비 %	151.1	154.7	155.9	159.3	161	159	177
국가 및 지방 장기채무잔고	1,032.7	1,056.1	1076.6	1,104.6	1,106	1,201	1,209
GDP 대비 %	194	197	197	200	198	224	216
기초재정수지 ⁵⁾	-13.4	-10.8	-10.8	-10.4	-9.46	-9.62	-20.4
국채의존도 ⁶⁾	38.3	35.6	35.3	34.5	32.2	31.7	40.9

주: 1) 당초예산기준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세출 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3)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는 일반회계세출 총액에서 국채비를 제외한 것을 의미

4) () 안의 수치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의미(국세 부분)

5) 일반회계기초재정수지=조세 및 인지수입+기타수입-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

6)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일반회계세출 총액

자료: 재무성, 「令和3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0.12.

재무성, 「我が国の財政事情(令和3年度予算政府案)」, 2020.12.

2 예산기조

□ FY2021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2020.12.8.)³³⁾

- FY2021 예산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와 사회경제 활동의 양립을 도모 하며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사회 실현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성장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
 - － 감염증 확대 방지, 디지털청 신설 등 디지털화 촉진, 2025년 탈탄소화를 목표로 필요한 예산 조치를 강구하면서도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는 유연한 예산 편성을 목표로 함
 - － 아울러 FY2020 제3차 추경예산 및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을 포함한 예산 일체화로 이른바 「15개월 예산*」하에, 기동적이며 만전의 대책을 강구할 예정
 - * 경제 대책 등을 위해 공공사업비 등을 조기에 담은 해당 연도의 추경예산과 다음 연도 예산을 통해 총 15개월간 끊어짐 없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방재·감재(減災) 및 국토 강인화를 위해 「방재·감재(減災), 국토 강인화를 위한 5개년 가속화 대책(가칭)」을 2025년까지 5년간 집중적으로 실시
 - － 극심한 풍수해나 지진 등에 대한 대책 및 예방·보전을 위해 노후화 대책의 가속화, 디지털화 등의 추진에 관련된 대책이며, 첫년도는 FY2020 제3차 추경으로 조치
- FY2021 예산은 「경제재정운용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이하 기본방침)」³⁴⁾에 기반하여 경제·재정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감안하여 신속적으로 세출·세입 모두 개혁을 추진할 예정
- 차세대형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보 시스템이나 데이터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거버먼트의 조기 실현을 도모

33) 내각부, 「令和3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 2020.12.8.,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20/r3_yosanhensei.pdf

34) 약칭 골태방침(骨太方針). 일본정부가 작성하는 재정이나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 운영방침의 통칭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이 2001년 처음 작성. 정식명칭은 「경제재정운용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경제재정운용과 개혁의 기본방침」 등 시기와 정권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 민주당 정권시기(2009~2012년)에는 중지되었으나, 2013년 제2차 아베내각 이후 매년 발표

- 행정사업 리뷰를 철저히 실시하며, 근거기반정책입안(Evidence-based Policy making: EBPM)을 추진하여 예산의 질 향상 및 효과 검증을 꾀함
 - 정책효과가 높은 세출로 전환하는 와이즈 스펀딩(Wise Spending) 구조를 강화하고, 민간 내수 주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실현으로 이어지는 시책을 환기
 - 국민 각층의 의식개혁이나 행동변용으로 이어지는 가시화, 선진·우량 사례를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인센티브 개혁 등의 대응을 EBPM과 일체적으로 추진

□ FY2021 예산의 주요 내용(2020.12.21.)³⁵⁾

- FY2021 예산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디지털 사회·그린 사회, 활력 있는 지방, 저출산 대책 등의 전 세대형 사회보장제도 등 중장기적인 과제에도 대응하는 예산을 목표로 함
- (감염 확대 방지) 예기치 못한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FY2020에 코로나예비비 5조엔을 확보하였으며, FY2021에도 코로나예비비 5조엔을 조치
 - 제3차 추경예산으로 병상·숙박 요양시설 확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접종 체제 정비·접종 등을 조치하여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
 - 감염증 위기관리 체제·보건소 체제 정비
 - 감염증 대책을 위한 진료수가의 임시 조치
 - 의료기기 국내 생산능력 증강
- (디지털·그린 사회 실현) 2021년 9월 강력한 종합 조정기능을 가진 디지털청을 설치하고, 그린 사회 실현을 위해 성과 연동형의 저리 대출 제도 창설 등 혁신 기술 개발 등을 지원
 - 민관 전문 인재를 결집한 500명 규모의 디지털청 설치
 - 정부 전체의 정보시스템 일괄 관리(3천억엔)
 - 마이 넘버 카드³⁶⁾와 운전면허증 일체화 추진

35) 재무성, 「令和3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0.12.21., https://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1/sEIFUAN2021/01.pdf를 정리하여 작성

36)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IC 칩 내장 카드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앞면은 사진, 주소, 생년월일, 성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개인 번호가 기재되어 세금·사회보장·재해대책법령에서 정한 절차

-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기업에 성과 연동형 저리 대출제도 창설(향후 3년간 1조엔 대출 규모)
- 재생에너지 절약 등 연구개발 및 도입 지원
- (활력 있는 지방) 지역 활성화의 자주적이고 선도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지방 창생 추진 교부금」 사업 확충과 동시에 기업과 자치단체의 매칭을 지원하는 「지방 창생 텔레워크 추진사업」 등으로 지방으로 인재와 일자리 흐름을 확대
- (전 세대 사회보장제도 구축) 후기 고령자 의료의 자기부담 비율 재검토 등 제도개혁과 함께 육아세대 등의 희망 실현을 위한 저출산 대책, 불임치료 비용 조성 등
 - 「신 육아 안심 플랜」에 기반한 보육 수용체계 정비(602억엔)
 - 불육증 검사·암 치료에 따른 불임 관련 지원(23억엔)
- (세출개혁) 「기본방침(骨太の方針)」하에 세출개혁을 지속하여 목표를 달성하며 예산의 질 향상
 - 사회보장관계비: +1,507억엔(의료비 동향을 감안하여 전년도 기반 실질 성장은 +3,500억엔 정도)
 - 비사회보장관계비: +330억엔(지금까지의 개혁 계속)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FY2021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3.8% 증가한 106조 6,097억엔으로 전망됨
 - (조세 및 인지수입)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9.54% 감소한 57조 4,480억엔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조세 및 인지수입의 비중은 10.3%로 전망
 - 모든 세목이 전년 당초예산 대비 감소하였으며, 가장 감소 폭이 큰 항목은 국제관광여객세로 전년 대비 44.4% 감소하였으며, 석유가스세(-33.3%), 항공기연료세(-31.5%), 법인세(-25.4%), 인지수입(-14.3%), 관세(-10.6%), 톤세(-10.0%), 석유석탄세(-7.5%), 주세(-7.0%), 소비세(-6.6%), 휘발유세(-6.1%), 소득세(-4.4%), 상속세(-4.8%), 전원개발촉진세(-3.2%), 자동차중량세(-2.8%), 담배세(-0.2%) 순으로 감소³⁷⁾
 - (기타수입) 기타수입은 일반회계 통상분 기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5.5% 감소한 5조 5,647억엔으로 전망
 - (국채발행액) 국채발행액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33.9% 증가한 43조 5,970억엔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채의존도도 전년 대비 9.2%p 증가한 40.9%로 전망

37) 재무성, 「令和3年度租税及び印紙収入概算」, 2020.12.21.

〈표 I-3〉 FY2021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단위: 억엔, %)

구 분		FY2020 당초(A)	FY2021 정부안(B) ¹⁾	증감액 (B-A)	증감율 (B/A-1)	
세 입	1. 조세 및 인지도입	635,130	574,480	-60,650	-9.5	
	2. 기타 수입	65,888	55,647	-10,241	-15.5	
	3. 공채금(세출과 세수 등과의 차이)	325,562	435,970	110,408	33.9	
	(1) 채무상환비 상당분 (교부 국채분 제외)	145,394	147,317	1,923	1.3	
	(2) 이자지급비용 상당분	83,904	85,036	1,132	1.3	
	(3) 정책적 지출에 의한 적자(기초적 재정수지적자) 상당분	96,264	203,617	107,353	111.5	
합계		1,026,580	1,066,097	39,517	3.8	
세 출	1. 일반세출	617,184	669,080	51,896	8.4	
	(1) 사회보장관계비	356,914	358,421	1,507	0.4	
	(2) 사회보장관계비 외	260,269	260,599	330	0.1	
	(3)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예비비	-	50,000	50,000	순증	
	2.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58,093	159,489	1,396	0.9	
	3. 국채비	233,515	237,588	4,073	1.7	
	(1) 중 채무상환비(교부 국채 제외)	145,394	147,317	1,923	1.3	
	(2) 중 이자지급비용	83,904	85,036	1,132	1.3	
	소계		1,008,791	1,066,097	57,306	5.7
	4. 임시·특별 조치에 의한 일반세출	17,788	-	-17,788	순감	
합계		1,026,580	1,066,097	39,517	3.8	

주: 1. 계수는 반올림하여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공채금 분류는 기초적재정수지 및 재정수지 관점으로 분류한 것으로, 공채금에 의한 수입이 직접 채무상환비 및 이자지급비용에 충당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분'으로 표현

3. 현행 특례공채법은 5년간 특례공채 발행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2020년도 말에 기한이므로, 5년간 더 연장을 위한 특례공채 발행 근거법안을 제출하는 방향을 모색 중

1) '사회보장관계비', '사회보장관계비 외'의 FY2020예산은 FY2021 예산과의 비교 대조를 위해 재계산

자료: 재무성, 「令和3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0.12.21.

〈표 I-4〉 FY2021 일반회계 조세 및 인지수입

(단위: 억엔, %)

구분 세목 (일반회계)	FY2020		FY2021	전년 대비			
	(당초)예산 (A)	추경후 (B)	예산안 (C)	(당초)예산 대비 (C-A)	증감률	추경 후 예산 대비 (C-B)	증감률
원천소득세	162,090	155,910	157,440	-4,650	-2.9	1,530	1.0
신고소득세	33,200	29,050	29,230	-3,970	-12.0	180	0.6
(소득세 계)	(195,290)	(184,960)	(186,670)	(-8,620)	(-4.4)	(1,710)	(0.9)
법인세	120,650	80,410	89,970	-30,680	-25.4	9,560	11.9
상속세	23,410	22,310	22,290	-1,120	-4.8	-20	-0.1
소비세	217,190	192,730	202,840	-14,350	-6.6	10,110	5.2
주세	12,650	11,430	11,760	-890	-7.0	330	2.9
담배세	9,140	8,620	9,120	-20	-0.2	500	5.8
휘발유세	22,040	20,470	20,700	-1,340	-6.1	230	1.1
석유가스세	60	60	40	-20	-33.3	-20	-33.3
항공기연료세	540	110	370	-170	-31.5	260	236.4
석유석탄세	6,550	5,990	6,060	-490	-7.5	70	1.2
전원개발촉진세	3,150	3,150	3,050	-100	-3.2	-100	-3.2
자동차중량세	3,930	3,930	3,820	-110	-2.8	-110	-2.8
국제관광여행객세	540	30	300	-240	-44.4	270	900.0
관세	9,460	8,250	8,460	-1,000	-10.6	210	2.5
톤세 ¹⁾	100	100	90	-10	-10.0	-10	-10.0
인지수입	10,430	8,700	8,940	-1,490	-14.3	240	2.8
합 계	635,130	551,250	574,480	-60,650	-9.5	23,230	4.2

주: 1) 외국무역선 입항 시 무역선의 톤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으로 납부
 자료: 재무성, 「令和2年度租税及び印紙収入概算」, 2019.12.20.

나. 세출^{38), 39)}

- FY2021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통상분 기준 전년 당초예산 대비 5.7% 증가한 106조 6,097억엔으로 책정됨(FY2020의 임시·특별조치 제외 계산분)
 - (일반세출) 전년 대비 8.4% 증가한 66조 9,080억엔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FY2020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예비비를 제외하면 0.3% 증가한 61조 9,080억엔
 - (국채비) 전년 대비 1.7% 증가한 23조 7,588억엔을 편성
 - (지방교부세교부금) 전년 당초예산 대비 0.9% 증가한 15조 9,489억엔을 편성
 - (특별회계)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493.7조엔이며, 회계 간 이전을 제외한 순계액은 245.3조엔
 - 세출 순계액의 대부분은 국채상환비, 사회보장급부비, 재정융자자금으로 이전(재투채를 통한 자금조달),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이며, 이를 제외하면 7.4조엔, 동일본대지진 부흥이라는 특수 요인인 부흥경비 0.8조엔을 제외하면 총 6.6조엔
 - 6.6억엔 중 50%는 보험사업, 20%는 에너지대책에 쓰이며 그 외 식품안정공급 등에 지출될 예정
- FY2021 분야별 세출
 - (사회보장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33.6%를 차지하는 사회보장관계비는 전년 대비 1,057억엔(0.4%) 증가한 35조 8,421억엔 규모
 - (공공사업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5.7%를 차지하는 공공사업관계비는 전년 대비 26억엔 증가한 6조 695억엔 규모
 - (문교 및 과학진흥비) 일반회계 세출 중 5.1%를 차지하는 문교 및 과학진흥비는 전년 대비 57억엔 증가한 5조 3,969억엔으로 편성, 이 중 과학기술진흥비는 전년 대비 108억엔(0.8%) 증가한 1조 3,673억엔 규모

38) 재무성, 「令和3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0.12.21.

39) 재무성, 「令和3年度予算及び財政投融资計画の説明」, 2021.1.18.

- (방위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5.0%를 차지하는 방위관계비는 전년 대비 610억엔(1.2%) 증가한 5조 3,235억엔 규모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예비비) 예기치 못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FY2021에도 코로나예비비 5조엔을 조치

〈표 I-5〉 FY2021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임시·특별조치분 제외)

(단위: 억엔, %)

구분	FY20201 (A)	FY2021 (B)	증감액 (B-A)	증감률 (%)
일반세출²⁾	617,184	669,020	51,836	8.4
사회보장관계비	356,914	358,421	1,507	0.4
문교 및 과학진흥비	53,912	53,969	57	0.1
(과학기술진흥비)	13,565	13,673	108	0.8
연금관계비	1,750	1,451	-299	-17.1
방위관계비	52,625	53,235	610	1.2
공공사업관계비	60,669	60,695	26	0.0
경제협력비	5,116	5,108	-8	-0.2
ODA	5,610	5,680	69	1.2
중소기업대책비	1,723	1,745	22	1.3
에너지대책비	9,008	8,891	-117	-1.3
식품안정공급관계비	12,862	12,773	-90	-0.7
기타 경비	57,605	57,732	127	0.2
예비비	5,000	5,000	-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예비비		50,000	50,000	100.0
국채비	233,515	237,588	4,073	1.7
지방교부세교부금	158,093	159,489	1,396	0.9
합계³⁾	1,008,791	1,066,097	57,306	5.7

주: 1) FY2020 예산은 임시·특별조치를 제외하였음. 또한 FY2021 예산과의 비교 대조를 위해 재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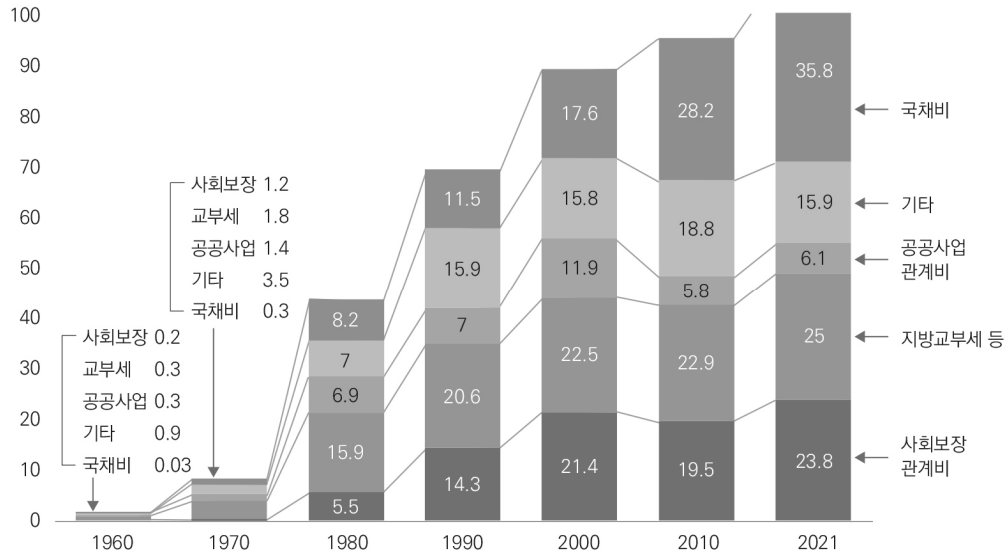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세출 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3) 계수는 반올림하여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무성, 「令和3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0.12.21.

[그림 I-1] 일반회계 주요 경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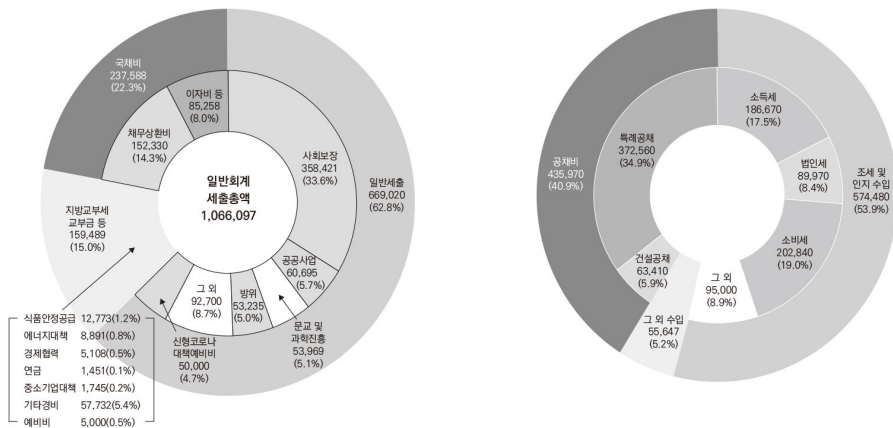
(단위: 조엔)



주: 2010년까지는 결산, 2021년은 정부안
 자료: 재무성, 「我が国の財政事情(令和3年度予算政府案)」, 2020.12.21.

[그림 I-2] FY2021 일반회계 세출·세입 구성

(단위: 억엔, %)



자료: 재무성, 「令和3年度予算のポイント」, p.9, 2020.12.21.

〈참고 I-1〉 FY2020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 (목적) 일본 정부는 임시 각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를 회복시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한 강력한 경제대책으로 2021년 내에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경제대책을 발표(2020.12.8.)⁴⁰⁾
- (내용 및 규모) 총 재정지출 40조엔, 총 사업규모 73.6조엔
 - (재원)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FY2020 제3차 추경예산과 FY2021 당초 예산안에 계상될 예정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 방지책) 감염 확대에 대해 국민이 하나가 되어 다시 한번 기본적인 감염증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병상 확보를 비롯한 만전의 의료제공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방지책
 -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포괄지원교부금(의료, 돌봄, 장애복지, 아동복지)
 - － 국립병원기구의 의료제공체제 정비
 - － PCR 검사·항원 검사 실시 및 키트 매입
 -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방 창생 임시 교부금 확충
 - － 원격의료설비 정비사업
 -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역학조사
 -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 체제의 정비
 - － 백신생산 체제 등 긴급정비기금의 확충 및 백신의 안전성 확보 등
 -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경제구조 전환) 행정 디지털화의 지연, 신형 코로나 감염증을 계기로 부각된 과제에 대처, 디지털·그린을 비롯한 성장 분야에 민간투자를 유도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 상승을 촉진하여 소득 확대 및 성장력 강화로 이어지는 시책에 집중 지원
 - － 디지털 거버넌스 확립 및 디지털청 신설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혁신적인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기금 창설
 - 지방에 대한 인재의 흐름 촉진 등 활력 있는 지방 만들기
 - 기업의 탈탄소화 투자를 추진하는 세제 추진 등
 -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안전 확보) 2021년부터 시작되는 2025년의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를 위한 5개년 가속화대책(가칭)」을 위한 추진(사업규모 15조엔 정도),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재해 복구, 노후화 대책 등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비비의 적시 집행) 예기치 못한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의 신속·적시 집행을 위한 필요 경비로 예비비를 계상
- (기대 효과) 본 대책의 효과로 실질GDP의 약 3.6%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경제대책에 의한 고용 유지 및 창출 효과는 2021년 대략 60만명 정도로 예상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사업규모 및 재정지출 내역〉

(단위: 조엔)

구분	재정지출			사업규모
	합계	국·지방 세출	재정투융자	
I.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 방지책	5.9	4.5	1.4	6.0
II.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경제구조 전환	18.4	13.4	5.0	51.7
III.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안전 확보	5.6	4.4	1.3	5.9
IV.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비비 적시 집행	FY2020	5.0	-	5.0
	FY2021	5.0	-	5.0
합계	40.0	32.3¹⁾	7.7²⁾	73.6

주: 1) 국비는 30.6조엔이며, 이 중 FY2020 제3차 추경예산은 20.1조엔(일반회계 19.2조엔, 특별회계 1.0조엔)임

2) FY2020 제3차 추경 추가액은 1.4조엔임

자료: 내각부, 「国民の命と暮らしを守る安心と希望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令和2年12月8日閣議決定)」, (令和2年12月8日), pp.50~51 재구성

40) 내각부, 「国民の命と暮らしを守る安心と希望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令和2年12月8日閣議決定)」, 2020.12.8.

〈참고 I-2〉 FY2020 제3차 추경예산

- FY2020 제3차 추경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경비 계상 및 이를 위한 세출 기본경비 감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2020.12.15.)⁴¹⁾
- (세출) 일반회계 세출은 경제대책에 의한 추가 경비 19조 1,761억엔에 그 외 기정경비 감액 및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예비비 감액 등으로 총세출은 15조 4,271억엔을 계상
 - (세입)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국채 22조 3,950억엔 발행 및 전년도 잉여금 수입 6,904억엔에 세입 감소분 8조 3,889억엔을 제외한 15조 4,271억엔으로 집계됨
 - (특별회계) 그 외 노동보험특별회계, 에너지대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소요보정이 있을 예정
 - (재정 투융자 계획) 1조 4,341억엔이 추가되어 총 64조 2,671억엔이 됨(이 중 재정융자 121억엔, 산업투자 200억엔, 정부보증 20억엔)

〈FY2020 제3차 추경예산 개요〉

구분	내용
1.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대책 (43,581억엔)	(1) 의료제공체제 확보와 의료기관 등에 지원: 16,447억엔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포괄지원교부금(병상 및 숙박요양시설 등의 확보 등)(13,011억엔) · 진료·검사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기관 등의 감염 확대 방지 등의 지원(1,071억엔) · 의료기관 등 자금 융통 지원(1,037억엔) · 소아과 등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진료보수 지원(71억엔) 등
	(2) 검사체제 확보, 백신접종체제 등의 정비: 8,204억엔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접종체제의 정비·접종 실시(5,736억엔) · PCR검사·항체검사 실시 등(672억엔) 등
	(3) 철저한 감염방지대책 기반 조성: 17,487억엔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방창생임시교부금(15,000억엔) ·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연기에 의한 감염증 대책 사업(959억엔) 등
	(4) 감염증 수습을 위한 국제협력: 1,444억엔 ·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국제기관 등을 통한 지원(792억엔) 등

구분	내용
2.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경제구조 전환 (116,766억엔)	<p>(1) 디지털 개혁·그린 사회 실현: 28,256억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단체의 디지털기반개혁 지원(1,788억엔) · 마이넘버카드 보급 추진(1,336억엔) · 포스트 5G, Beyond5G(6G) 연구개발지원(1,400억엔) ·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적 기술개발지원 기금 창설(20,000억엔) · 그린주택 포인트 제도 창설(1,094억엔) 등 <p>(2) 경제구조 전환·이노베이션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 23,959억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중소기업 경영전환 지원(사업재구조조보금)(11,485억엔) · 대학펀드(5,000억엔) · 지속화급부금 등(2,300억엔) · 국내외 서플라이체인 강인화 지원(2,225억엔) · 지역공공교통 유지·활성화에 중점적인 지원(150억엔) 등 <p>(3) 지역·사회·고용에 의한 민간수요 주도의 선순환 실현: 64,551억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소규모사업 등에 자금융통 지원(32,049억엔) · 지방창생임시교부금(재게시) · Go To 트래블(10,311억엔), Go To 잇(515억엔) · 고용조성보조금 특례조치(5,430억엔) · 긴급 소규모 자금 등 특례조치(4,199억엔) · 관광(인바운드 부활을 향한 기반 조성)(650억엔) · 불임치료 관련 조성 조치 확충(370억엔) · 수전의 발지화·범용화·대 구획화 등에 의한 교수익화 추진(700억엔)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세이프티넷 강화교부금(저소득자·자살대책 등)(140억엔) 등
3.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안전 확보 (31,414억엔)	<p>(1)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추진: 20,936억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추진(공공사업) 16,532억엔 「자연재해 복구·부흥 가속」 등에 정리되어 있는 사업을 포함한 강인화 예산 전체 22,604억엔을 확보함 <p>(2) 자연재해 복구·부흥 가속: 6,337억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복구 등 사업비(6,057억엔) · 재해폐기물처리(106억엔) 등 <p>(3) 국민안전·안심 확보: 4,141억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위대의 안정적인 운용태세 확보(3,017억엔) 등
추경예산 추가 세출 계: 191,761억엔	
<p>주: 1. 제3차 추경에는 경제대책 집행과 관련된 국비 및 국제분담금 등의 추가 재정수요(252억엔) 등을 계상 2. 상기 외에 노동보험 특별회계에서 9,320억엔, 에너지대책특별회계에서 169억엔의 세출 추가 등을 계상 자료: 재무성, 「令和2年度補正予算(第3号)の概要」, 2020.12.15.</p>	

41) 재무성, 「令和2年度補正予算(第3号)案」, 2010.12.15.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성장

- (기업)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인재 대책, 자금유통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
 -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산학관연계에 의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사업승계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지속지원센터」와 「사업승계네트워크」의 통합,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인재발굴, 확보 등을 위해 지원
 - 자금유통 대책으로 공적 신용보완 기반 강화에 필요한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에 대한 출자금 및 자금공급 업무 원활화에 필요한 자금 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용보증과 관련된 전국신용보증협회 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 (에너지·환경)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2018년 7월 3일 각의 결정)」의 실현을 위해 철저한 에너지 절약 추진 및 재생 에너지의 도입을 비롯해 에너지의 안정 공급 확보 및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확보 등에 대응
 - 재생가능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개발·설비 등의 도입, 석유·천연가스 등 자원 채굴·개발, 석유 생산·유통 합리화 등을 추진
- (농림수산) 강한 농림수산업 실현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의 관점에서 예산 편성
 -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5조엔 목표 실현을 향해서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확대 실행 전략」에 근거해, 수출 중점 품목에 대해 산지 육성, 수출 장벽 해소, 해외 판로 개척을 추진
 - 보조금 신청을 포함한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와 농지의 현지정보 통합 등 농림수산 행정의 디지털화 추진
 - 녹색사회 실현을 위해 온실효과 가스의 흡수원이 되는 삼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목재제품 이용 확대 추진

- (교육·과학기술) 교육환경 정비와 대학 개혁, 안전한 학교시설 정비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기반을 충실히 다지며 혁신을 촉진
 - 「교육의 디지털화」 관점에서 디지털 교과서 보급(22억엔) 및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전국에 보급(7억엔)할 예정
 - 2021년도부터 5년 간 초등학교 학급당 35명 이하를 실현하기 위해 「공립의무교육제학교의 학급편제 및 교직원 정원 표준에 대한 법률」 개정
 - 박사 후 과정 학생의 처우 향상과 경력 확보를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펠로우십」 사업을 창설하여, 장래의 학술연구를 담당하는 신진 연구자 지원(23억엔)

나. 안전·재해 예방 및 사회보장

- (외교·방위) 안전 보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따라 조달의 효율화 및 우주와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을 포함한 방위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아갈 예정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제적인 수습을 위해 보건 분야 ODA를 확충
 - 여권의 전자 신청 등 디지털화 추진을 시작으로 외교·영사 실시 체제를 강화
 - 중기 방위력정비 대상 경비에 대해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을 바탕으로 +1.1% 증액을 확보하고, 우주·사이버·전자과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능력 강화 등 다원 통합방위력 구축을 추진
- (경찰·해상보안)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대책 외에 테러 방지 및 테러 대처체제 강화를 위한 대응 추진
 -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 개최 시 치안 확보 및 테러 방지 등을 위한 기자재 정비 등 경비체제를 확충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적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치관리 업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디지털 리모트화 등 감염 리스크 절감 환경정비 장치 도입 추진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일환으로 교정시설 정비 추진
- 센카쿠·야마토퇴(大和堆)에 대응하기 위한 대형 순시선 중심으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
- (사회보장)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을 계속하며, 의료비 동향 등을 반영하여 「기본방침」에 근거한 세출 개혁을 지속할 예정
 - 직원의 처우 개선을 배려한 간호 보수 개정(+0.70%, 196억엔), 장애복지 서비스 등 보수 개정(+0.56%, 86억엔)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
 - 약제비 개정을 매년 실시하여 실제 가격의 하락을 반영해 국민 부담을 경감(-1,001억엔) 하여, 사회보장 관계비의 실질적인 증가를 “고령화에 의한 증가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침을 달성(〈참고 1-3〉 참고)
 - 후기 고령자 의료의 자기부담 비율 재검토 등 제도개혁과 함께 육아 세대 등의 희망 실현을 위한 저출산 대책 추진
 - 「신 육아 안심 플랜」에 기반한 보육 수용인원 정비(602억엔)
 - 불육증 검사·암 치료에 따른 불임 관련 지원(23억엔) 등
 -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증세분을 활용하여 연금생활자지원금부금을 지급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지와 사회경제 활동 양립을 목표로 고용조정조성금 특례 조치에 의한 고용 유지 및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한 이직자를 시범 고용하는 사업주에 조성금 지원, 남성 육아휴직 촉진 등 노동·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다. 지역 발전·창생

- (공공사업)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일체화한 방재·감재 대책과 국토 강인화 추진에 중점을 두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
 - 공공사업관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6조 695억엔)하여, 유역 전체의 치수대책과 신기술을 활용한 노후화 대책 등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에 대한 중점화 추진

- 국고 채무 부담 행위(2개년 국채, 제로 국채)를 활용하여 공공공사 시공시기를 평준화하며, 대규모 직할 토목공사 설계의 3차원 디지털화를 원칙화하여 건설 업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

□ 활력 있는 지방 만들기

- 지역 활성화의 자주적·선도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지방창생추진교부금(1천억엔)」의 이주지원사업을 확충하고, 기업·지자체를 매칭 지원하는 「지방창생 텔레워크 추진사업(1.2억엔)」 등을 통해 지방으로 인재 및 일의 흐름을 확대
- 「인바운드 소비 2030년 15조엔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관광여객세를 활용하여 자연·문화를 살린 고부가가치 콘텐츠의 창출, 호텔·여관의 서비스 향상
- 얼굴 인증 결제 활용 등 「관광 디지털화」 및 업무 추진

□ 지방재정

- 국세 및 지방세의 세수 감소에 대해 지방의 일반 재원 총액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지방을 최대한 배려하여 2018년 수준을 밑돌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동 수준을 확보

□ (부흥) 「제2기 부흥·창생 기간⁴²⁾」의 첫해로, 단계에 따라 꾸준히 복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동일본대지진부흥 특별회계 총액을 약 9,300억엔 계상

- 지진·해일 피해지역 내 심리치료 등 이재민 지원과 원자력 재해 피해지역 내 중간저장시설 정비와 함께 귀환·이주 촉진 등 본격적인 복구·재생을 위한 방안 추진

라. 예산 효율화 및 질 향상

□ 수직관계 행정 타파 및 부처 간 연계 추진

- 유역치수대책을 활용한 부처 간 연계(국토교통성의 방재·안전교부금 8,540억엔 외에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등의 관련 사업)

42)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기본방침」을 기본으로, ‘재해지역의 자립으로 이어져 지방창생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부흥을 실현해 나간다’는 ‘제1기 복구·창생기간(2016~2020년)’의 이념을 계승해 실현을 위한 노력을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에서 2021년도부터 5년간을 ‘제2기 부흥·교정 기간’으로 규정

- 하천 관리자, 도도부현·시읍면 관계자가 협동하여 유역지수프로젝트(토지 이용과 마을 만들기를 포함한 종합적인 치수대책)를 추진
- 제방·하수도·농업수리시설·논, 학교시설, 복지시설, 국유지 등의 기능 연계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 직접사업 및 지자체·민간기업용 교부금·보조금을 중점 배분
- 목질 바이오매스 연료 등의 안정적·효율적인 공급 및 이용 시스템 구축(경제산업성·농림수산성: 12.5억엔)
-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에 연구회를 발족하여 목질 바이오매스 발전 과제를 정리. 양 성이 연계하여 바이오매스 연료 등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조·수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증 사업 등을 창설

□ 방위력 정비의 효율화 및 합리화

- 방위제품 전반에 걸쳐, 중요도가 하락한 장비의 운용정지나 장기계약의 활용, 원가 정밀 조사, 조달 최적화 등을 도모하여 -4,168억엔의 효율화 및 합리화 효과를 실현

□ 인구 1인당 인프라 유지 갱신비용 증가 억제

- 인프라 노후화 대책과 관련한 자치단체 전용 보조금 및 교부금에 대해, 시설의 집약·철거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구체적 방침을 제시할 것을 요건화하며, 신기술 활용 등에 의한 코스트 절감이 높은 사업을 우선 채택
- 각종 보조금(도로 2,223억엔, 하천 15억엔, 항만 12억엔) 외 방재·안전 교부금을 대상으로 하며, 시책효과가 높은 사업에 국비를 중점 투자할 예정

□ 중소기업지원 중점화

- 중소기업이라도 대기업 자회사 및 과세소득이 일정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보조 대상 외 또는 대기업과 동률의 보조율을 적용해 지원을 중점화

□ 장학금 업무 시스템 쇄신에 의한 신청·심사의 효율화 등

- 독립행정법인 일본 학생 지원 기구의 운영비 교부금에 대해서, 장학금 업무 시스템을 쇄신하여 신청 수속을 간략화하고, 심사를 신속화하며, 시스템 보수비용 및 심사비용을 삭감(2021년부터 10년간 -28억엔 삭감효과)

〈참고 I-3〉 매년도 약제비 개정 실현

- 의약품 거래가격(시장 실제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상환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 멈춰 있으면, 환자 부담, 보험료 부담, 공공부담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됨
 - 이를 위해, 지금까지 2년에 한 번 실시한 약제비 개정을 2021년도부터 매년 실시하여, 시장가격을 약제비에 반영
 - 2021년 약제비 개정은 매년도 약제비 개정 첫해이며, 평균 괴리율 8.0%의 0.625배인 괴리율 5%를 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함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특례」로서 약제비 삭감 폭을 0.8%만큼 완화
 - － 2020년 약제비 조사 결과 평균 괴리율은 8.0%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정 반년 후에 실시한 2018년 약제비 조사의 평균 괴리율을 0.8% 상회한 것으로, 이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영향으로 간주하여 반영
 - 이에 의해, 약 7%의 품목에서 약제비 삭감 -4,315억엔(국비 -1,001억엔)을 실현하여 국민 부담 경감 예정

II. 독일

□ FY2020: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출처(독일 연방재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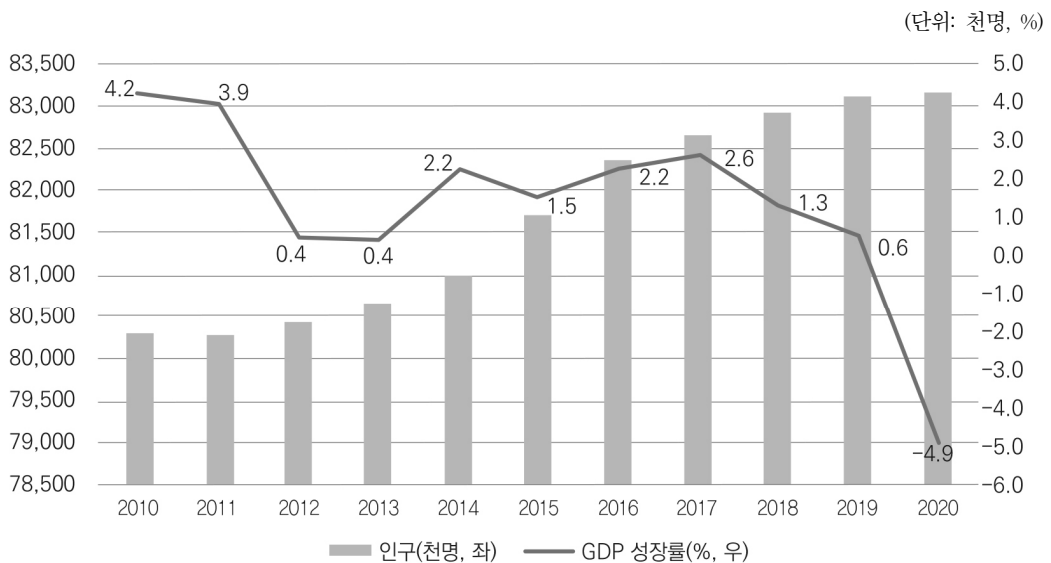
- Haushaltsgesetz 2021, 2020.11.
- Finanzplan des Bundes 2020 bis 2024, 2020.9.
- Finanzbericht 2021, 2020.10.
-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1, 2020.10.

□ 환율: 1유로 = 약 1,347.15원(2020년도 1~11월 평균, 매매기준율)

□ 경제규모: 2019년 경상 GDP 3조 4,491억유로(2019년 기준, OECD)

□ 인구: 8,309만명(2019년 기준, OECD)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21.3.30.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성장) 연방정부의 2020년 중간 전망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동안 경제활동 급감에 따라 2020년 독일의 GDP 성장률을 -5.8%, 2021년 4.4%로 전망함. 이는 금년 3월, 4월과 같은 봉쇄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재정 전망) 확장적 재정정책 및 세수 감소로 인해 2020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6.25% 적자를 기록할 전망

□ (예산기조) 미래를 위한 투자 및 혁신, 사회통합에 우선순위 설정

□ 예산안 내용

- (세입) 2021년 연방정부 재정수입은 2020년 대비 18.7% 감소한 4,134억유로로 편성
- (지출) 연방정부의 지출은 2020년 5,085억유로에서 2024년 3,933억유로까지 하락할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제1차 경기부양책) 연방내각은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 패키지 1,225억유로 규모의 추경을 편성
- (제2차 경기부양책) 부가가치세 인하, 지방정부 지원, 가족 및 미래기술 보조금 지급 등 57개의 조치를 포함한 1,3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 채택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연방정부의 2020년 중간 전망에 따르면 상반기 경제활동 급감의 영향으로 2020년 독일의 GDP 성장률을 -5.8%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금년 3월, 4월과 같은 봉쇄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음⁴³⁾
 - (수입) 2020년 국내 수요 및 해외 중간재 수요 감소에 따라 -8.1%의 수입 감소를 전망하나 경제부양책 효과로 수출(-12.1%)만큼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 전망
 - (설비투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제조업 불황과 불확실성 증가로 2020년 설비투자는 -16.5%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며, 2021년에는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12.0%의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건설투자) 지속되는 저금리 환경과 유동성 증가에 따라 건설투자 수요는 2020년 3.8% 증가할 전망이나 2021년 2.4%로 증가 폭이 하락할 전망
 - (고용) 2020년 고용은 38만명 감소할 전망이며 실업률은 연평균 약 5.9%까지 도달할 전망이나 2021년 고용은 19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43) 연방경제에너지부, Pressemitteilungen, Interimsprojektion der Bundesregierung: Deutliche Erholung nach historischem Einbruch, 2020.9.1.,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0/09/20200901-interimsprojektion-der-bundesregierung.html>

〈표 II-1〉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단위: 백만명, %)

구분	2019	2020	2021
실질GDP 성장률	0.6	-5.8	4.4
가계최종소비 증가율	1.6	-6.9	4.7
정부최종소비 증가율	2.7	4.8	-0.4
총투자 증가율	2.5	-3.7	5.2
설비투자	0.5	-16.5	12.0
건설투자	3.8	3.8	2.4
국내 수요	1.2	-3.6	3.6
수출 증가율	1.0	-12.1	8.8
수입 증가율	2.6	-8.1	7.5
민간소비	1.3	0.5	1.2
고용인구(백만명)	45.3	44.9	45.1
실업인구(백만명)	2.27	2.69	2.58

주: 2020년 계절조정 성장률은 -6.1%, 연간성장률은 -4.9%, 비영리단체 포함
 자료: 경제에너지부, Frühjahrsprojektion 2020,9,1.

〈표 II-2〉 기술적 가정

구분	2019	2020	2021
단기 이자율(연평균)(%)	0.00	0.00	0.00
장기 이자율(연평균)(%)	-0.22	-0.22	0.11
달러/유로 환율	1.12	1.13	1.17
내수시장성장(%)	1.9	-12	8.75
유가(USD달러)	58.7	44	48

자료: 연방재무부,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1, 2020,10., p.16.

〈참고 II-1〉 2020년 가을 경제 전망(Herbstprojektion)

- 독일의 GDP 성장률은 상반기 역사적인 경제침체로 실질GDP 성장률은 2020년 -5.5%, 2021년 4.4%로 전망
- 전 세계 수요의 부정적 전망으로 독일의 수출은 -10.3% 감소할 전망
 - 장비투자는 외국인 수요 약화와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2020년 -15.8% 감소할 전망인 반면 건설투자는 저금리 기조 지속 및 유동성 증가에 기인하여 3.1% 증가할 전망
 - 한편, 알트마이어(Altmaier)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위기극복의 결연한 대응으로 코로나 1차 유행 기간 동안 당초 우려보다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제1차 경기부양책을 평가함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단위: %, 백만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실질GDP 성장률	0.6	-5.5	4.4	2.5
가계최종소비 증가율	1.6	-6.9	4.5	3.4
정부최종소비 증가율	2.6	4.7	0.8	-0.4
총고정자본형성	2.5	-3.8	4.8	3.0
설비투자	0.5	-15.8	11.9	4.3
건설투자	3.8	3.1	1.8	2.3
내수	1.2	-3.8	3.7	2.4
수출 증가율	1.0	-10.3	7.1	5.4
수입 증가율	2.6	-7.1	6.0	5.4
고용인구(백만명)	45.3	44.9	45.0	45.3
실업인구(백만명)	2.3	2.7	2.6	2.41

자료: 경제에너지부, *Herbstprojektion*, 2020.10.30.,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0/10/20201030-altmaier-stellt-herbstprojektion-der-bundesregierung-vor.html> 검색일자: 2020.11.18.

나. 재정 전망

- 2020년 9월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확장적 재정정책 및 세수 감소로 인해 2020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6.25% 적자를 기록할 전망
 - (2021년 재정지출) 2021년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18.7% 감소한 4,134억유로 편성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투자, 사회통합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
 - (구조적 재정수지⁴⁴) 2020년 GDP 대비 -3.5%로 전망하며, 향후 EU 재정협약에 명시된 GDP의 구조적 적자 0.5%의 예산목표를 2023년에 달성할 전망
 - (국가채무) 독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9년 59.5%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마스트리히트 기준인 60% 수준을 달성하였지만,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대책에 따른 재정정책 확대로 2020년 71%로 급등할 전망
 - 향후 지속적인 저금리 환경, 경제성장 회복, 낮은 수준의 신규차입금 반환 등이 중기적으로 채무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여 2024년 채무비율은 GDP 대비 67%로 낮아질 전망

〈표 II-3〉 FY2021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단위: 억유로, %)

구분	2020	2021	중기재정계획		
			2022	2023	2024
재정지출	5,085	4,134	3,870	3,871	3,933
전년 대비 증감률(%)	+42.6	-48.7	-6.4	0.0	+1.6
재정수입	5,085	4,134	3,870	3,871	3,933
조세수입	2,644	2,920	3,084	3,252	3,385
신규차입	2,178	962	105	67	52
투자	713	552	480	480	480

자료: 연방재무부, *Bundshaushalt 2021 und Finanzplan bis 2024*, 2020.9.23.

44) 구조적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 혹은 세출 변화를 통제하는 것으로 경기 순환적 요인을 배제하고 재정기조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임(한중석 외, 『재정지표 보완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표 II-4〉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채무	71.0	70.25	70.0	69.0	67.5
총채무 비율 변화	11.5	-0.75	-0.5	-1.0	-1.5
재정수지	-6.25	-4.25	-	-	-
구조적 재정수지	-3.5	-3.5	-	-	-
기초 재정수지	5.25	3.75	1.5	0.25	-0.25
이자지출	0.75	0.75	0.5	0.5	0.5
기타 조정	5.25	-5.0	-2.5	-1.75	-1.75
내재이자율 ⁴⁵⁾	1.25	1.0	-	-	-

주: 마스트리히트 기준, 2020~2024년은 전망치
 자료: 연방재무부,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1, 2020, 10.*, p.13; p.21.

2 예산기조

- (재정지출) 연방정부의 지출은 2020년 5,085억유로에서 2024년 3,933억유로까지 하락할 전망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 및 혁신, 사회통합에 우선순위 설정
 - (미래를 위한 투자) 금년 제2차 추경에 포함된 1,050억유로 규모의 경제·미래 패키지에 340억유로 추가 지원 계획
 -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 지원을 위해 2021~2024년까지 매년 4억유로 지원
 -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2024년까지 20억유로 지원
 - 병원미래기금(Krankenhaus-Zukunftsfonds)에 30억유로 배정
 - 차량제조 및 공급업체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2024년까지 추가로 15억유로 배정

45) 리스 실행일 현재 리스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가치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및 리스 제공자의 리스개설 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함(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용어사전」, https://txsi.hometax.go.kr/docs_new/main.jsp에서 발췌)

-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2021년 5억유로 추가 지원
- 기후 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로 국가 수소전략에 2024년까지 68억유로 투자
- (사회통합)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사회적 지출비율은 2020년 50.2%에서 2021년 51%로 상승
- 사회보장기여금 안정을 위해 2021년 보건기금에 50억유로 추가 교부금 지원
- (국제개발협력) 2021년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은 전년 중기재정계획 대비 38억유로 증가한 190억유로를 지출할 계획이며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참고 II-2〉 FY2019 잠정결산

□ 연방재무부, FY2019 잠정결산 발표

- (재정지출) 2019년 재정지출은 3,436억유로로 기존 지출 목표 대비 128억유로 낮게 집계
- (재정수입) 소득세, 차량 보유세(Kfz-Steuer) 증가와 EU 자체재원이전(EU Eigenmittel abführungen) 감소로 2019년 재정수입은 목표치보다 7억유로 높은 3,571억유로로 집계
-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0.1% 흑자를 기록, 이는 채무제한법⁴⁶⁾ 대비 0.45%p 높은 수치임

〈FY2019 결산(잠정)〉

(단위: 억유로)

구분	2019(목표)	2019(잠정)	목표치 대비 차이
재정지출	3,564	3,436	-128
예비비충당금	0	135	+135
재정수입	3,564	3,571	+7
조세수입	3,225	3,290	+35
세외수입	254	281	+27
예비비인출	55	0	-55
신규차입	-	-	-

자료: 연방 재무부, Öffentliche Finanzen, 2020.1.13.

〈참고 II-3〉 FY2021년 예산안 편성과정

- 2021년 예산안은 아래와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산정
 - 2019년 12월 21일 2020년 회계연도의 연방예산법 채택
 - 2020년 3월 27일 202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채택
 - 2020년 3월 27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이용과 보호를 위한 법안 채택
 - 2020년 3월 2일 경제안정기금법 설립
 - 2020년 6월 29일 제2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조치 이행법 시행
 - 2020년 7월 14일 2020년 제2차 추경예산안 채택
 - 2020년 7월 17일 정부세법 초안 발표
 - 2020년 7월 29일 제2차 가족구제법 통과
 - 2020년 9월 10일 세수추계 결과 발표
 - 2020년 9월 16일 코로나19 대응 고용보호법 정부안 발표
 - 2020년 9월 17일 기본법 104a 및 지방재정구제법 개정
 - 2020년 9월 23일 2021년 예산안 및 2024년 중기재정계획안 발표
 - 2020년 10월 30일 경제에너지부 가을 경제 전망 발표
 - 2020년 11월 세수추계 결과 발표
 - 2020년 12월 2020년 회계연도의 연방예산법 채택

46) 채무제한법(Debt Brake): 연방의 신규 순채무를 2016년부터 GDP 대비 0.35%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부의 신규 순채무는 2020년부터 전적으로 금지

3 예산안

가. 재정수입

- 2021년 연방정부 재정수입은 2020년 대비 18.7% 감소한 4,134억유로로 편성
 - (조세수입) 급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크게 증가하여 2021년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2,952억유로 규모임
 - (신규차입) 두 차례 추경예산을 통해 2020년 신규차입 규모는 2,333억유로, 2021년은 전년 대비 55.8% 감소한 962억유로 규모를 기록할 전망

〈표 II-5〉 항목별 연방조세수입

(단위: 억유로, %)

세수항목	2020 (A)	2021 정부안 (B)	증감률 [(B-A)/A]
조세수입(Steuereinnahmen)	2,753	2,920	7.23
급여세(Lohnsteuer)	882	944	7.03
소득세(veranlagter Einkommensteuer)	227	243	7.04
원천징수 소득세(den nicht veranlagten Steuern vom Ertrag.)	100	88	-12.00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Bundesanteil an der Abgeltungsteuer auf Zins- und Veräußerungserträge)	28	27	-3.57
법인세(Körperschaftsteuer)	99	122	23.23
부가가치세 공동귀속분(Steuern vom Umsatz)	941	1171	24.44
연방과 주에 이전금액(Gewerbesteuerumlage)	15	18	20.00
연방세(Bundessteuern) ¹⁾	1,038	1,000	-3.66
EU기금(EU-Finanzierung)	-277	-379	36.82
지방분권기금(Regionalisierungsmittel)	-115	-93	-19.13
보충교부금(Ergänzungszuweisungen)	-85	-91	7.05
자동차세 손실보전금(Kompensation Kfz-Steuer)	-90	-90	0.00
재정안정보조금(Konsolidierungshilfen)	-11	-8	-27.27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변화	0	-33	-
세외수입	155	253	63.22
신규차입	2,333	962	-55.83
재정수입	5,085	4,134	-18.70

주: 1) 연방세는 세수가 연방정부에 귀속되는 세목으로 보험세, 담배세, 커피세, 증류주세, 와인세, 샴페인세, 주세, 전기세, 에너지세, 자동차세, 항공세, 연대세 등 대부분의 세목이 소비세입(송원근, 『주요국의 재정분권 추진 현황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18.8.)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1*, 2020.10., p.71, *Bundeshaushalt 2021 und Finanzplan bis 2024*, 2020.9.23.

〈참고 II-4〉 연방재무부, 제158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en) 결과 및 추계방식⁴⁷⁾

□ (세입) 2020년 총 세입은 7,177억유로로 전년 대비 -10.2% 감소되나, 2021년 7.7%로 증가할 전망

- 2021년 총세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200억유로 규모의 VAT 한시적 인하 및 40억유로의 자녀 보너스가 포함되어 5월 추계 대비 196억유로 감소한 7,729억유로를 전망

〈세수추계 결과¹⁾〉

(단위: 억유로,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방정부	3,291 (2.1)	2,753 (-16.3)	2,952 (7.2)	3,139 (6.3)	3,310 (5.4)	3,442 (4.0)
주정부	3,245 (3.3)	3,065 (-5.5)	3,218 (5.0)	3,380 (5.0)	3,518 (4.1)	3,674 (4.4)
기초자치단체	1,148 (3.2)	1,035 (-9.8)	1,130 (9.1)	1,163 (3.0)	1,214 (4.4)	1,276 (5.1)
EU ²⁾	309 (8.2)	323 (4.5)	428 (32.5)	422 (-1.3)	425 (0.5)	440 (3.6)
총 세입	7,993 (3.0)	7,177 (-10.2)	7,729 (7.7)	8,105 (4.9)	8,467 (4.5)	8,832 (4.3)

주: 1)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이며, 2020~2024년 해당 수치는 추정치

2)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일정분 등

자료: 연방재무부, Press Aktuelles 2020.9.10.

□ (추계방식) 독일의 세수추계는 8개 기관들의 독립적인 추계 결과를 기초로 작업반 회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방식임

- (작업반) 연방재무부, 연방경제에너지부, 5대 경제연구소,* 연방은행, 거시경제 자문위원회, 주정부의 재무부들, 기초자치단체 전국연합회가 참여

* 5대 경제연구소는 독일경제연구소(DIW), 뮌헨대학교 경제연구소(ifo), 쾰른대학 세계경제연구소(IWV), 할레 경제연구소(IWH), 라인-베스트팔렌 경제연구소(RWV)

- (세수추계) 작업반 구성 기관 중 5대 경제연구소, 연방은행, 거시경제 자문위원회, 연방재무부가 모두 독립적으로 각 세목에 대해 추정안을 제시

47) 연방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rgebnisse der 155. Sitzung des Arbeitskreises "Steuerschätzungen" vom 7. bis 9. Mai 2019 in Kiel., 2019. 5. 9.,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0/09/2020-09-10-PM-Ergebnisse-der-Steuerschaetzung.html>; 이명현, 『독일의 재정제도』, 2011.9, pp.81~82.

나. 재정지출

- 2021년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18.7% 감소한 4,134억유로 편성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투자, 사회통합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
 - (교육·연구) 연방교육연구부(BMBF) 예산은 전일제 학교·돌봄 프로그램, 디지털인프라 특별기금, 연구 및 혁신협약 등에 지원. 전년 대비 0.3% 감액된 202억유로 편성
 - － 초등학생 일일 교육 및 돌봄 확장을 위한 전일제 학교 돌봄 프로그램에 5억유로의 특별기금 배정
 - － 디지털스쿨(DigitalPakt Schule)의 구현을 위한 디지털인프라 특별기금⁴⁸⁾을 통해 지원될 계획
 - － 독일 연구재단 및 혁신협약(PIIV)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3% 증액되고, 비대학 연구기관들의 지원을 위해 4억유로, 의료연구활동 4.8억유로, 직업훈련 및 채용지원에 3.5억유로를 지원할 계획
 - (내무·국토건설) 연방내무부(BMI) 예산에 전년 대비 13.8% 증액된 182억유로로 배정되며 주거급여, 사회주택건설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
 - － 이주민, 소수민족 및 실향민 지원에 18억유로, 시민보호 및 재난구호를 위해 6억 8,500만유로 배정
 - － 2021년 온라인 접속법의 시행을 위해 14억유로, 2022년 13억유로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
 - －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4억유로 증액된 7.3억유로 수준을 지출할 계획
 - － 사회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2021~2024년까지 매년 10억유로 규모의 프로그램 기금을 계획
 - － 자녀가 있는 가정의 최초 주거용 부동산 취득 촉진을 위해 2021년 약 9억유로의 예산을 배정하였고, 2024년까지 연간 약 9억 7,000만유로를 지출할 계획
 - － 스마트시티 모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3억유로 규모의 프로그램 자금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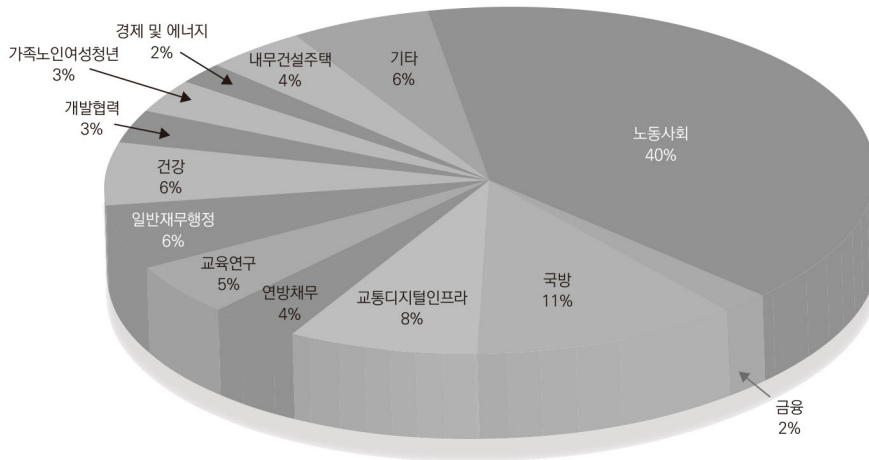
48) 디지털 인프라기금은 현대식 교육환경 구축과 농촌지역 등에 광대역 인프라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국방) 2021년 연방국방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 증액된 468억유로로 배정
 - 연방정부는 2020년 NATO, 유럽연합에 대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며 군비 창출 및 디지털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출을 지향함
 - 해외공관에 대한 기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계획
 - 독일·프랑스, 독일·노르웨이의 군축 협력, 유로파이터 트렌체 1형 전투기 교체, 토네이도 전투기의 후속 항공기인 PEGAUS의 프로젝트 등에 지원할 계획
- (경제협력) 경제협력개발부(BMZ), 외무청(AA)에 각각 124억유로, 60억 4천만유로 수준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외무성 예산에서의 인도주의적 원조지출은 약 19억 4천만유로로 배정함
 -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해 약 38억 5천만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 중 2021년 경제 및 위기관리 패키지에 15억 5천만유로가 추가적으로 포함됨
 - OECD의 잠정 추산에 따르면 독일은 2019년 개발협력 공적자금이 약 238억달러에 달해 국민총소득(국내 난민비용 제외) 대비 0.52%(국내 난민비용 포함 0.60%)를 지출하여 세계 2위의 기부국 달성
- (경제·에너지) 연방경제에너지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4.2% 감소한 101억유로로 배정하여 자동차산업 및 미래에너지산업에 투자할 계획
 - 차량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의 향후 투자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에 6억유로, 해양·조선 및 항공 부문 지원이 포함된 연방정부의 경제 및 미래패키지에 약 20억유로를 지원할 계획
 - 2021년에만 3.9억유로 규모의 수소전략 투자를 통해 해외 무역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
 - 코로나 관련 피해 업종 지원에 3.6억유로를 증액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경제발전 예산에 전년 대비 3억유로 증가, 석탄에너지 단계적 감축을 위해 관련 업종에 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보전 계획
- (교통·디지털인프라) 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7.3% 감소한 340억 유로로 배정

- 경제 및 미래 패키지로 기후 친화적인 철도 운행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며 고속 디지털 철도 프로그램의 경우 2020년에 1억유로, 2021년 4억유로를 지출할 계획
- (사회보장·고용) 연방노동사회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1,639억유로로 배정하여 노후기초소득, 보건기금 등에 지출할 계획
 -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과 사회보장을 위한 보건기금에 50억유로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회보장 기여도를 약 40%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
 - 연방보조금은 비보험 서비스에 대한 법정 건강보험 회사의 비용에 대한 고정 비율보상에 145억유로 지출
 - 금년 실업급여(SGB II)를 통한 간접급여는 전년 중기재정 대비 2021년 74억유로 증가한 344억유로로 편성되었으며, 주택과 난방비용을 전년 대비 25%p 증액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강화

[그림 II-1] 2021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 비중

(단위: %)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1*, 2020.10, p.21.

〈표 II-6〉 2019~2024년 주요 분야별 연방지출 전망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사회보장	176,542	275,233	211,290	199,362	206,405	213,142
국방	37,075	39,632	40,702	40,678	39,966	39,965
영양·농업·건강	1,920	2,782	3,319	2,684	2,678	2,487
경제·에너지	4,900	16,699	15,025	13,110	12,916	10,485
교통	27,353	15,530	17,152	16,270	16,064	15,893
건설 도시개발	3,028	2,375	2,896	3,150	3,303	3,396
교육·과학·연구	20,657	25,670	26,231	24,455	24,647	24,953
문화	2,772	4,252	3,050	2,953	2,951	2,945
환경보호	1,892	3,274	2,564	2,426	2,421	2,208
스포츠	220	472	282	287	272	253
내무·이민	7,875	8,645	9,442	9,284	8,962	8,857
경제협력개발	9,994	12,326	12,334	9,300	9,211	9,209
일반재무	21,769	19,457	19,581	21,941	22,532	22,838
특별기금	1,819	27,795	2,504	3,356	3,062	2,689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1*, 2020.10., pp.22~23.

〈표 II-7〉 부처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유로, %)

구분	2020 (A)	2021 정부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대통령실	44.69	44.08	-0.61	-1.4
연방하원	1,032.81	1,043.62	10.81	1.0
연방상원	39.45	41.19	1.74	4.4
총리실	4,385.17	3,383.22	-1,001.95	-22.8
외무부	6,623.86	6,041.66	-582.2	-8.8
내무부	15,668.29	18,295.98	2,627.69	13.8
법무부	919.73	952.17	32.44	3.5
재무부	7,916.45	8,368.44	451.99	5.7
경제에너지부	10,568.36	10,128.21	-440.15	-4.2
식품농업부	7,018.28	7,661.39	643.11	9.2
노동사회부	170,682.39	163,976.54	-6,705.85	-3.9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부	36,783.46	34,079.95	-2,703.51	-7.3
국방부	45,645.98	46,810.02	1,164.04	2.6
보건부	41,250.35	24,294.32	-16,956	-41.1
환경부	3,020.88	2,675.14	-345.74	-11.4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13,628.26	12,242.94	-1,385.32	-10.2
헌법재판소	35.87	37.03	1.16	3.3
회계감사원	163.14	168.88	5.74	3.5
자료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위원회	26.85	31.54	4.69	17.5
경제협력개발부	12,434.08	12,436.38	2.3	-
교육연구부	20,308.69	20,238.04	-70.65	-0.3
연방채무	16,732.03	14,654.80	-2,077.23	-12.4
일반조세행정	93,600.71	25,794.46	-67,806.3	-72.4
재정지출	508,529.76	413,400.00	-95,129.8	-18.7

자료: 연방재무부, *bundeshaushalt-2021-und-finanzplan-2024*, 2020.9. p.29.

4 주요 재정정책

가. 코로나19 피해 복구

1) 제1차 경기부양책

□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채택⁴⁹⁾

- (재정지출) 연방내각은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 패키지 1,225억유로 규모의 추경을 편성, 2020년 예산은 전년 대비 35.8% 증가한 4,845억유로로 집계됨
 - 중소기업, 자영업자, 영세상인을 위해 500억유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며, 도산위험이 있는 10인 이상 중소기업에 세 달간 최대 15,000유로 지원
 - 실업기금(Arbeitslosengeld II),⁵⁰⁾ 주거비용, 고령자에 대한 기초소득 지원에 77억유로 지출
 - 연방정부는 개인 보호장비의 중앙조달,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연방군이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독일 및 EU에 대한 지원 등 추가 조치를 위해 35억유로를 제공
 -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예비자금으로 550억유로를 제공하여 전염병의 추가적인 영향에 즉각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연방정부는 보증 및 유가증권 분야에서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제혼란을 막기 위해 59억 유로를 지원
- (조세수입)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GDP 성장률 감소로 2020년 예산에서 계획된 조세수입은 335억유로 감소할 전망
- (신규차입) 헌법상 채무규정에 의해 규정되는 차입금 상한선인 1,000억유로를 초과한 1,560억유로 규모의 신규차입 단행

49)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20.3.2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0/03/2020-03-23-pm-nachtragshaushalt.html>

50) 실업보험은 실업자들을 대신해 연금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하며 1단계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 중에는 실업직전 총소득의 80%를 기준으로 기여금이 납부됨. 1단계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연령 및 기여 연수에 따라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가 되며 이후, 자산조사적이며 더 낮은 비율이 지급되는 두 번째 유형의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II)로 넘어가게 됨(OECD, 2018)

- 연방정부는 기본법 제115조 제2항 6번째 문장에 따라 상환선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 비상 상황으로 간주함
-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보호막) 조업단축수당의 유연화와 기업유동성 개선을 위한 선택적 이연 등의 세금 조치 단행
- (KfW⁵¹) 특별 프로그램) 동 프로그램은 기업의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기업에 최대 300만유로의 대출과 낮은 이자율 및 간편화된 대출 심사 절차를 적용하여 지원할 계획⁵²)
- KfW는 은행과 저축은행이 대출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운용자본 및 투자에 최대 90%의 부채면제 비율을 적용
- 또한 독일재건은행(KfW)을 통해 3월 13일에 논의한 4,650억유로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3,570억유로 증액한 8,220억유로로 합의함

〈표 II-8〉 FY2020 제1차 추경예산안

(단위: 억유로, %)

구분	당초예산	제1차 추경안	2020년 예산
재정지출	3,620 (+1.5)	+1,225	4,845 (+35.8)
투자	429	+59	488
재정수입	3,620	+1,225	4,845
조세수입	3,250	-335	2,915
신규차입	-	+1,560	1,560

주: () 안은 증가율

자료: 연방재무부, *Nachtragshaushalt 2020*, 2020.3.23.

51) 독일재건은행(KfW)은 국책은행이면서 개발은행으로서 설립 초기 서독 경제 부흥과 지원에 필요한 장기자금 공급, 수출금융, 개도국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 1990년 통일 이후 대규모 자금을 독일지역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2000년 이후 중소기업 지원, 각종 인프라 지원, 수출금융 등 기능과 역할을 다양화함(김명식, 『독일재건은행의 역할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2012)

52) 연방재무부, Additional KfW Special Programme 2020 for the economy to be launched today, 2020.3.2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Pressemitteilungen/2020/2020-03-23-KfW-special-programme.html>

〈표 II-9〉 독일 제1차 경기부양 재량 조치

(단위: 억유로, GDP 대비 %)

구분	총액	재정수지 ¹⁾ (Finanzierungssaldo)	채무 ¹⁾ (Schuldenstand)
- 연방정부	1,558	-4.6	4.7
추가경정예산	1,223	-3.6	3.7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코로나 긴급지원	500	-1.5	1.5
기타 지원	550	-1.7	1.7
실업급여 및 주거 지원	75	-0.2	0.2
국내보증보상	16	-0.0	0.0
해외보증보상	43	-	0.1
기타	39	-1.0	1.0
조세 조치 및 세수 부족분 ²⁾	335	-1.0	1.0
- 경제재건펀드	2,000	-	6.0
자본수단의 취득 및 참여	1,000	-	3.0
해외 보증을 통한 독일재건은행 운송사업 보상 채용자	1,000	-	3.0
- 주정부	652	-1.6	2.0
예산 조치, 긴급지원, 유동성지원, 주식, 대출	311	-0.6	0.9
조세 조치 및 세수 부족분	341	-1.0	1.0
- 지방자치단체	170	-0.5	0.5
주거지원	21	-0.1	0.1
조세 조치 및 세수 부족분	149	-0.5	0.5
- 사회보험³⁾	153	-0.5	-
단기근로자보조금	41	-0.1	-
사회보장기여금 반환	60	-0.2	-
법정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추가 부담금	52	-0.2	-
합계	4,533	-7.2	13.2

주: 1) 명목GDP로 산정된 2020년 추경예산 기준

2) 양(+의 값은 줄어든 수입과 조세지원 대책을 의미함

3) 사회보험 지출은 적립금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채무에는 영향이 없음

자료: 연방 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20*, 2020.4.22.

2) 제2차 경기부양책

- 연방내각, 부가가치세 인하, 지방정부 지원, 가족 및 미래기술 보조금 지급 등 57개의 조치를 포함한 1,3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 채택⁵³⁾
 - (수요·고용회복 및 안정화) 부가가치세의 일시적 인하와 자녀양육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의 단기 원조 프로그램 포함
 - (부가가치세 인하)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기존 19%에서 16%로 인하하고 경감세율도 인하(7%→5%)하여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 회복
 - (자녀양육 지원)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300유로를 지원하는 것과 한부모가정에 600유로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에 각각 43억유로, 7.5억유로 지출
 - 지원금은 구직자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과 상쇄되지 않으며 소득이 높은 가구의 경우 자녀 세제수당과 상쇄됨
 - (구직자 기본소득) 구직자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은 상환능력 평가 없이 2020년 말까지 확대
 - (문화사업 지원) 문화 분야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문화 프로젝트 지원과 문화인프라 확충에 10억유로 재정지원
 - (비영리단체 안정화)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안정화를 위해 2021년까지 독일 재건은행을 통한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설립할 계획
 - (중소기업 지원) 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단기지원프로그램에 약 250억유로 규모를 배정할 계획
 - 동 지원은 물류회사, 박람회장, 레저, 여행사 및 기타 폐업 사업자 등 바이러스 피해 사업체에 적용
 - 프로그램 적격 사업자에게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고정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보조금을 제공

53) 연방재무부, Startseite, Themen, Top-Themen, Das Konjunkturpaket, 2020.6.1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Konjunkturpaket/2020-06-03-konjunkturpaket-beschlossen.html>

- 보조금지급 조건은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평균 60% 이상의 매출손실이 있어야 함
- (기업투자 촉진 및 지방정부 지원) 지방공동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감가상각규정 개선 및 손실이월액 등 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주거비용 지원) 지방정부의 주거비용 지원을 위해 40억유로를 지원할 계획
 - 지방정부가 급여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주거비용의 최대 75%(현재 50%)까지 부담
 - (무역세) 무역세(Gewerbesteuer) 세입 부족분이 2020년 120억유로 규모로 예상되며, 이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50대 50으로 충당할 계획
 - (대중교통 지원)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지역 대중교통에 약 25억유로 규모의 일회성 정부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
 - (감가상각) 과세연도 2020~2021년 동안 기계 등 동산자산에 대한 가속상각⁵⁴⁾ 옵션을 통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손실이월액) 손실이월액(steuerliche Verlustrücktrag)을 2020년과 2021년 최대 500만 유로로 확대
 - (법인세)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법인기관을 세무 목적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등의 법인세법 개정 계획
- (미래지향적 투자) 지속가능한 이동수단, 교통시스템 개선, 디지털 혁신, 친환경 에너지 지원, 의료 현대화, 교육·연구 지원에 투자
 - (친환경차 보조금) 최대 4만유로인 전기차를 구입할 때 지원되는 환경 보너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존 3천유로에서 6천유로로 한시적 확대 지급 계획
 - (그린인프라 구축) 최첨단 충전 인프라 구축과 전기차 및 배터리 셀 생산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에 25억유로를 추가 투입할 계획
 - (미래형산업 투자) 자동차산업 제조업체와 공급자 지원을 위한 보너스 프로그램 (Bonusprogramm)에 10억유로를 지출할 계획

54)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임

- (차량교체 프로그램) 전기차 촉진을 위해 임시 차량교체 프로그램이 시행되며 사회 복지 기관과 중소기업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
- (대형차 현대화) 버스 및 대형수송차량 현대화를 위해 전기버스 및 관련 차량 충전인프라 확충에 2021년까지 투자
- (철도기업 지원) 연방정부는 철도회사 도이체반에 지분 투자(50억유로)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지원뿐만 아니라 철도시스템 현대화, 철도 확장 및 전기화에 투자
- (수소에너지) 수소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에 착수했으며, 새로운 수출기술의 토대 마련
- (전기료 인하) 전기료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6.5센트/kWh, 2022년 6.0센트/kWh로 인하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 (탄소건물 재건축 프로그램) 동 프로그램 재원을 2020년과 2021년 각각 10억유로로 증액하여 총 25억유로를 지출할 계획
- (인공지능) 2025년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기존 30억유로에서 50억유로로 증액하여 유럽 AI 네트워크 개발에 지원
- (양자 컴퓨터) 연방정부는 두 대의 양자 컴퓨터 확보를 위한 컨소시엄 자금에 20억유로 지출
- (5세대 이동통신) 국영통신인프라 회사를 통해 2025년까지 5G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50억유로 배정
- (차세대 통신기술) 미래통신기술 분야에 독일이 선도적인 글로벌 공급자가 되겠다는 목표로 6G와 같은 미래통신기술에 투자
- (행정서비스 현대화) 공공행정의 자동화 지원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온라인 가용성 향상
- (공공보건서비스 강화) 공공보건서비스 협약을 채택하여 지역 보건당국의 기술 및 디지털 역량 구축과 인력 충원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
- (병원 현대화) 미래형 병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병원의 필요한 투자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
- (백신개발) CEPI(전염병예방혁신연합) 기부 및 바이러스 백신개발 지원

- (돌봄 지원) 종일학교와 종일돌봄 확대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을 가속화하며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정원 확충, 시설 확충·개축에 투자
 - (연구 세금공제) 연구 관련 세금공제는 회사당 기존 200만유로에서 400만유로로 한도 증액되며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소급 적용됨
 - o (국제적 책임) 연방정부는 아프리카 국가의 ODA 지원에 15.5억유로 배정
- 부가가치세 인하, 지방정부 지원, 가족 및 미래기술 보조금 지급 등의 조치가 포함된 1,030억 유로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⁵⁵⁾

〈표 II-10〉 FY2020 제2차 추경예산안

(단위: 억유로, %)

구분	당초예산	제1차 추경	제2차 추경
재정지출	3,620	4,845	5,093
투자	429	488	718
재정수입	3,620	4,845	5,093
조세수입	3,250	2,918	2,644
신규차입	-	1,560	2,185

자료: 연방재무부, *Nachtragshaushalt 2020*, 2020.6.17.

- 연방정부, 코로나19에 따른 부분 봉쇄*로 피해업체 추가 지원⁵⁶⁾
- *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2일부터 4주간 여가시설 이용을 중단하는 부분 봉쇄 도입에 합의함
 - o (긴급지원) 연방정부는 요식업, 문화, 레저산업 등 봉쇄 조치로 인한 피해 사업장의 매출 손실 지원을 목적으로 약 100억유로 지출

55)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20.6.1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0/06/2020-06-17-Nachtrag-HH.html>

56) 연방재무부, Themen, Schlaglichter, Corona-Schutzschild, 2020.11.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Corona-Schutzschild/2020-10-29-neue-corona-hilfen.html>

- (KfW 신속대출) 직원수 10명 미만의 기업은 2019년 매출액에 따라 신용위험 평가 없이 주거채 은행으로부터 최대 30만유로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실이 큰 자영업자, 프리랜서,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운용고정비 지원을 연장·개선할 계획⁵⁷⁾

나. 재정건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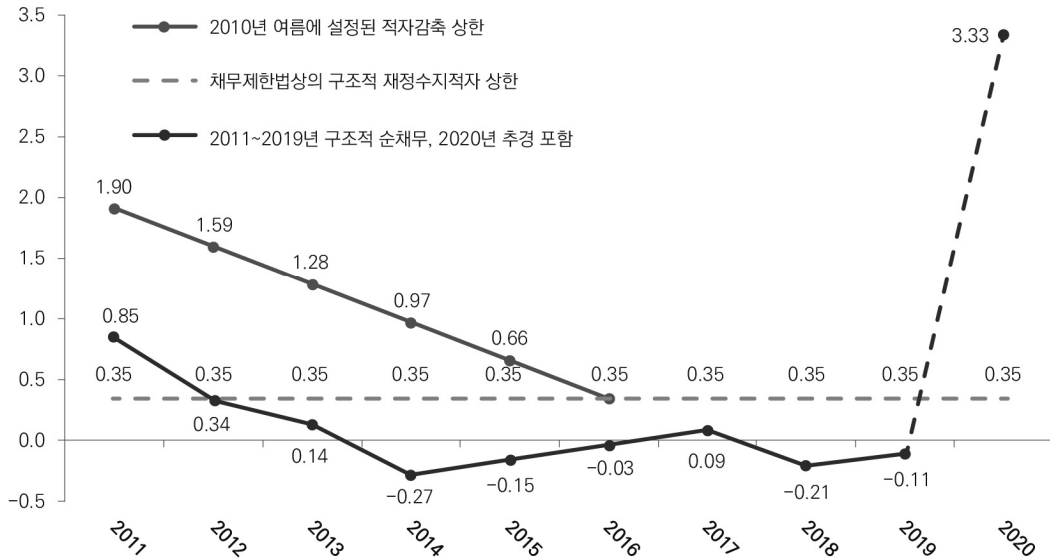
-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2020」(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20)⁵⁸⁾
 - * EU 회원국들은 안정성장협약에 따라 매년 4월 동 보고서를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와 경제재무이사회(ECOFIN)에 제출
 - (재정 전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규채무가 발생하여 2020년 독일의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3.33% 적자를 기록할 전망
 - 예외적 비상사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제한법상 명시된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상한인 GDP 대비 0.35%를 크게 상회함
 - (경제 전망) 2019년 독일의 실질GDP 성장률은 0.6%이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6%p 하락한 -6.0%로 전망
 - (재정정책) 연방정부는 국민건강, 일자리와 기업지원,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착수함
 -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예산자원 및 보건, 국민보호 기금 조성
 - 피해가 심한 업종과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 조세 조치, 기업차입을 단순화하기 위한 정부보증, 수출보증과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연체료 면제 포함
 - 일자리 및 소득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조업단축 지원금, 질병 및 실업수당 연장과 소득세 유예 등을 포함

57) 2020년 6월에 채택된 독일의 2차 경기부양책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단기지원프로그램에 약 250억유로를 지원한 바 있음. 프로그램 적격사업자에게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고정운용비를 충당할 수 있는 보조금을 제공하였고, 보조금지급 조건은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평균 60% 이상의 매출 손실이 있어야 함(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0)

58) 연방재무부, Themen, Öffentliche Finanzen, 2020, 4, 2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2020-04-17-stabilitaetsprogramm-2020.pdf?__blob=publicationFile&v=10

[그림 II-2]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추이

(단위: GDP 대비 %)



주: 음(-)은 재정수지 흑자를 의미함

자료: 연방 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20*, 2020.4.22.

□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 제21차 회의⁵⁹⁾)

- (경제) 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투자, 수출의 극심한 부진으로 금년 독일의 GDP가 6.3%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5월 세수추계에서 금년 예상 세수는 2019년 10월 추계 대비 약 1천억유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재정) 위원회는 금년 GDP 대비 5.5% 규모의 구조적 일반정부 재정적자를 전망하며 기본법 109조 제2항에서 따라 현재 상황을 자연재해 또는 예외적인 비상사태로 간주하여 적자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권고하지 않음

59)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0/06/2020-06-22-Stabilitaetsrat.html;jsessionid=1C9AABC47BC651B18353C8C9714F52AC.delivery2-replication>

다. 에너지 및 기후보호 정책

- 에너지 및 기후보호 특별기금을 통해 전기 모빌리티, 충전인프라 및 에너지 저장, 에너지 효율화 및 탈탄소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기술(70억유로), 지속가능한 모빌리티(60억유로), 에너지 효율적인 건설 국가(20억유로)에 투자
 - (수입) 탄소배출권 수입 증가 및 운송·난방 탄소가격제 도입에 따라 전년 대비 21.8% 증가한 426억유로로 전망
 - (지출) 2021년 프로그램 지출은 역대 최대 규모인 267억유로 수준이며 이 중 108억유로는 전기세 보조금⁶⁰⁾ 및 건물 리노베이션 프로그램(58억유로), 수소에너지(17억유로) 등에 지출

〈표 II-11〉 2020~2024년 에너지 및 기후보호 특별기금 계획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입	35.025	42.669	30.878	22.058	20.854
탄소배출권 수입	2.264	2.745	2.692	2.788	3.824
운송·난방 탄소가격제 ¹⁾	-	7.413	8.971	10.540	12.938
연방정부 지원금	26.503	2.454	3.306	3.012	2.639
준비금	6.237	30.057	15.910	5.718	1.453
지출	35.025	42.669	30.878	22.058	20.854
프로그램 지출	8.382	26.759	25.160	20.605	20.854
준비금	26.643	15.910	5.718	1.453	-

주: 1) 기후보호계획 이행을 위해 교통 및 난방 분야에 대한 탄소가격제를 2021년부터 시행 예정
 자료: 연방재무부, *bundeshaushalt-2021-und-finanzplan-2024*, 2020.9., p.22.

□ 그린 연방채권(Grüne Bundeswertpapiere) 발행⁶¹⁾

- 독일의 그린예산 지출을 투명하게 하는 동시에 금융 분야에 지속가능한 입지를 구축하고 친환경 운송시스템 촉진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목적으로 발행

60) 2021년 6.5센트/kWh, 2022년 6.0센트/kWh로 인하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61) 연방재무부, Pressemitteilungen, Finanzpolitik, 2020.8.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0/08/2020-08-24-PM-Bund-begibt-ab-2020-Gruene-Bundeswertpapiere.html>

- 운송, 국제협력, 연구·혁신 및 인식 개선, 에너지 및 산업, 농업·임학·자연경관 등 5개 항목을 그린지출로 구분하는 등 총 127억유로 지출
- 요르그 쿠키스 연방재무부 차관은 매년 녹색연방채권을 발행할 것이며,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시장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

라. 디지털 인프라

- 2021년 디지털 특별펀드 수입 및 지출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41.9억유로로 전망
 - (수입) 2018년 24억유로 규모로 조성된 디지털인프라 특별기금은 2025년까지 경기순환 및 위기관리법에 따라 50억유로까지 확대할 계획
 - (학교 디지털화 협약) 디지털 학습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주정부에 10억유로 지원
 - 학교 수업에 필요한 모바일 기기 장비에 5억유로, 교육 및 IT 관리인의 임시 자금지원에 5억유로 지원 합의

(표 II-12) 2021년 디지털 특별펀드 계획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19	2020	2021
총수입	2,748	4,230	4,191
주과수 수익	348	348	518
연방보조금	-	1,222	571
준비금 반출	2,400	2,660	3,106
총지출	2,748	4,230	4,191
셀룰러 통신망 확장 지원	-	-	266
기가비트(gigabit) 네트워크 확장 지원	20	480	435
주정부 재정지원	7	2,117	2,165
준비금 공급	2,721	1,631	1,328

자료: 연방재무부, *bundshaushalt-2021-und-finanzplan-2024*, 2020.9., p.23.

III. 프랑스

□ FY2021: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출처

- PLF 2021(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2020.9.28.
- Dossier de presse- Présenta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2021, 2020.9.28.
- Évaluations préalables deus articles du plf 2021, 2020.9.28.
-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2020.9.28.
- LFSS 2021(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1), 2020.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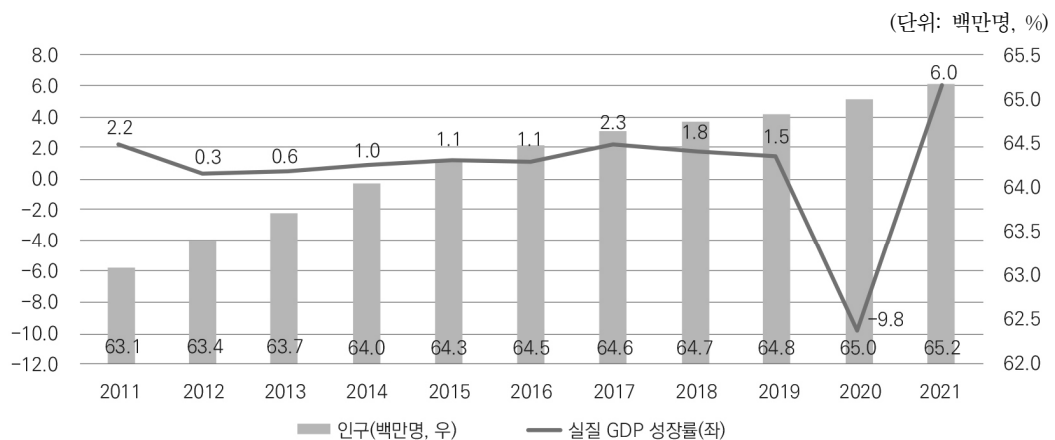
□ 환율: 1유로 = 약 1,347.15원(2020년도 1~11월 평균, 매매기준율)

□ 경제규모: 2020년 추정치 경상GDP 2조 5,514억달러(IMF)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2019년 기준 64.5%(World Bank)

□ 인구: 약 6,493만명(2020년 기준, IMF)

□ 실질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및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0, 검색일자: 2020.12.11.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성장)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프랑스의 2020년 경제성장률은 -10%를 기록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지원 조치로 2021년에는 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 전망) 거시경제 악화와 대규모 지원 조치로 인해 재정 전망은 크게 악화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20년 -10.2%를 기록하고, 2021년에는 다소 회복되어 -6.7%를 기록할 전망

□ 예산기조

- 2021년 예산법안은 코로나19와 2020년의 급격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 대응을 반영함
- 2020년 세 차례의 수정예산법안 편성으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했고, 2021년에는 프랑스 활성화(Plan de relance) 계획의 이행으로 경제 회복을 가속화함

□ 주요 재정정책

- 2021년 프랑스의 예산법안은 2022년까지 1천억유로 규모의 프랑스 활성화 계획을 담고 있음
 - 프랑스 경제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투자를 통해 수요를 빠르게 회복시킴
 - 사회적 포용성 강화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2020.3.18.	FY2020 수정예산법안(PLFR 2020) 발표
2020.4.15.	FY2020 제2차 수정예산법안(PLFR 2020-2) 발표
2020.4.15.	2020 안정화 프로그램(programme de stabilité) 발표
2020.5.2.	FY2019 결산보고서 발표
2020.6.10.	FY2020 제3차 수정예산법안(PLFR 2020-3) 발표
2020.9.3.	경기부양책 ‘프랑스 활성화(Plan de relance)’ 발표
2020.9.28.	FY2021 예산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PLF) 발표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프랑스의 2020년 경제성장률은 -10%를 기록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지원 조치로 2021년에는 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다소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고, 강력한 봉쇄 조치 해제 이후 경제활동과 소비는 빠르게 회복됨
 - 2020년 8월 프랑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GDP는 위기 이전 수준의 95% 정도 수준으로 회복함
 - 강력한 지원 조치로 가구 소득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음
 - 경기부양책으로 2021년 프랑스는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2022년에 위기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가계소비가 급격하게 하락(-8%)한 이후 2021년에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가계 구매력이 다시 상승하고 소비가 반등(6.2%)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부터 강세를 이어온 기업투자는 2020년 불확실성의 증가로 감소하다, 2021년 다시 성장을 기록할 전망
 - 유가 하락과 수요 감소로 인해 물가 상승률은 2020년 0.5%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2021년에는 0.7%로 증가할 전망

〈표 III-1〉 거시경제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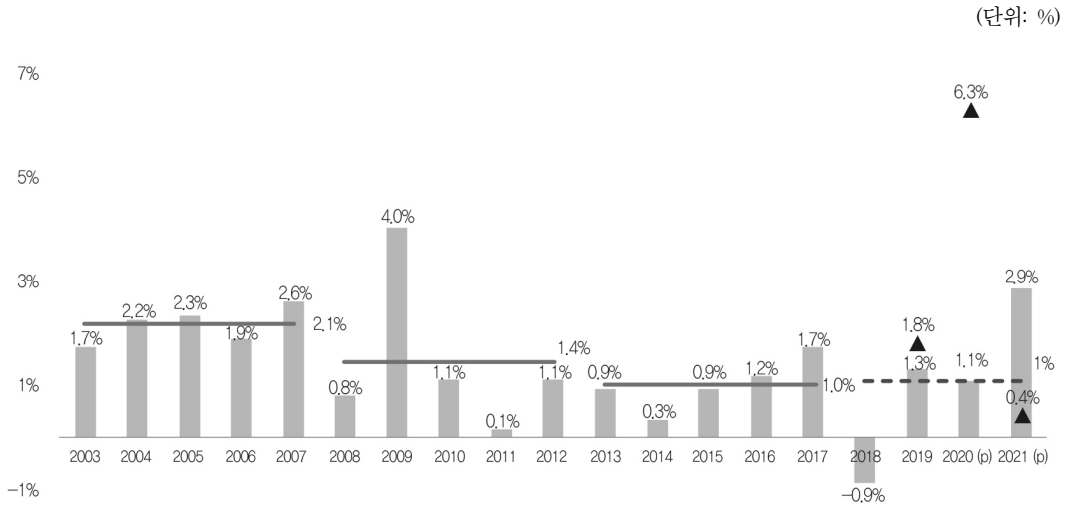
구 분	2020년 6월 예산정책심의 (Débat d'Orientation des Finances Publiques: DOFP)		2021년 예산안	
	2020	2021	2020	2021
GDP 성장률(Produit intérieur brut)	-11,0	8,0	-10,0	8,0
가계소비지출 (Dépense de consommation des ménages)	-10,0	8,0	-8,0	6,2
총고정자본형성 (Formation brute de capital fixe)	-19,3	-	-14,5	14,9
수입(Importations)	-15,5	-	-11,5	8,2
수출(Exportations)	-15,5	-	-18,5	12,6

자료: 프랑스 재무부, *Rapport économique · social et financier*, 2020, p.52.

나. 재정 전망

- (2020년 재정지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 조치로 2020년 세출은 본예산 대비 469억유로 증가한 3,846억유로로 전망됨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보건위기 대응 비상계획(Plan d'Urgence face à la crise sanitaire) 미션에 427억유로가 투입됨
 - 전년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 조치를 제외할 경우 1.1%이며, 포함할 경우 6.3%로 나타남
- (2021년 재정지출) 2021년 세출은 2020년보다 59억유로 감소한 3,787억유로로 전망됨
 - 2021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미션 지출인 프랑스 활성화 계획(Plan de relance)에 220억유로를 지원함

[그림 III-1] 재정지출 증가율 추이 및 전망



주: 코로나19 지원 조치와 프랑스 활성화 계획이 제외된 수치는 막대 그래프, 포함된 수치는 ▲로 나타내며, 실선은 5개년 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프랑스 재무부,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2020, p.89.

□ (2020년 재정수입) 2020년 세입은 2,468억유로로 2020년 본예산과 비교해 462억유로 감소할 전망

- 본예산 대비 2020년 법인세는 183억유로 감소, 부가가치세는 147억유로 감소, 소득세는 28억유로 감소할 전망
- 봉쇄기간 동안 에너지 소비의 급감으로 에너지제품 소비세(TICPE)는 본예산 대비 48억유로 감소할 전망

□ (2021년 재정수입) 2021년 세입은 2,712억유로로 2020년 대비 244억유로 증가할 전망

- 2020년과 비교해 2021년 소득세는 23억유로, 법인세는 79억유로 증가할 전망
- 에너지제품 소비세(TICPE)는 소비 반등으로 105억유로 증가할 전망

〈표 III-2〉 2021년 예산법안

(단위: 십억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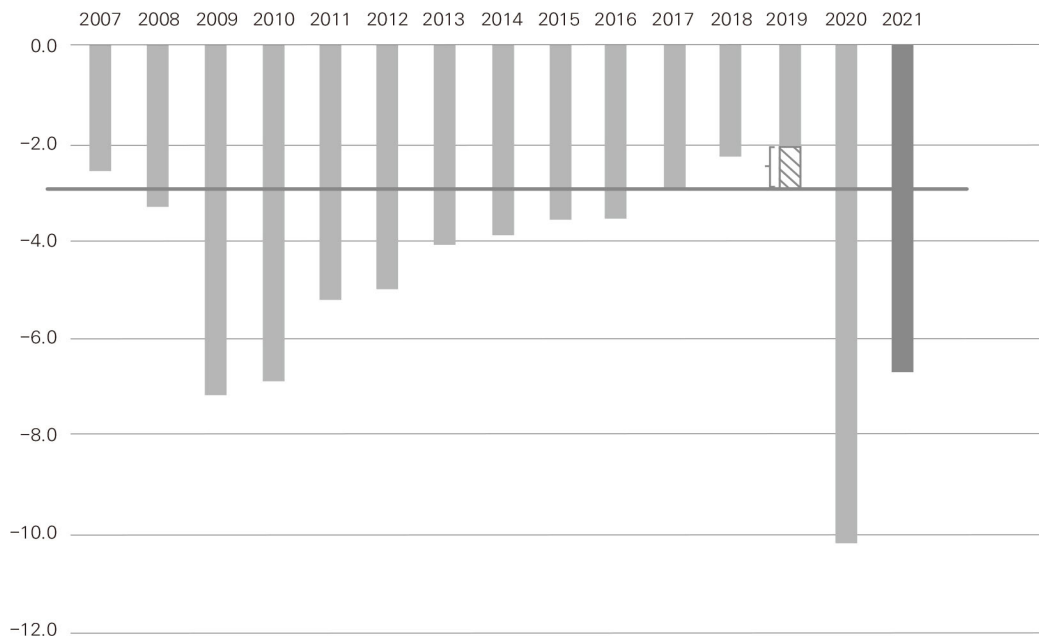
구 분	2020년 본예산	2020년 수정예산	2020년 전망	2021년 예산법안	2020~ 2021년 차이
재정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et PSR)	400.4	460.4	450.2	448.8	-1.4
세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337.7	394.7	384.6	378.7	-6.0
부처별 지출(Crédits des ministères)	253.2	259.8	259.8	270.6	10.8
미래를 위한 투자 미션 (Mission "Investissements d'avenir")	2.1	2.1	2.1	4.0	1.9
보건위기 대응 비상계획(Mission "Plan d'urgence face à la crise sanitaire")	0.0	52.4	42.7	0.0	-42.7
프랑스 활성화 계획(Mission "Plan de relance")	0.0	0.0	0.0	22.0	22.0
프랑스 개발청 자금 지원 (Renforcement des fonds propres de l'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0.0	0.0	0.0	1.0	1.0
부채비용(Charge de la dette (yc SNCF))	38.6	36.6	36.2	37.1	0.9
연금기여금액 (Contributions au CAS "Pensions")	43.8	43.8	43.8	44.0	0.2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62.7	65.7	65.5	70.1	4.6
지방정부보조금(Prélèvement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41.2	42.3	42.2	43.2	1.1
EU보조금(Prélè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	21.5	23.4	23.4	26.9	3.5
재정수입(Recettes de l'Etat)	307.4	242.6	263.1	296.1	33.0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nettes)	293.0	227.2	246.8	271.2	24.4
소득세(impôt net sur le revenu)	75.5	69.5	72.7	74.9	2.3
법인세(impôt net sur les sociétés)	48.2	15.7	29.9	37.8	7.9
에너지제품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	12.5	10.6	7.8	18.3	10.5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 nette)	126.0	106.2	111.3	89.0	-22.4
기타 세입(Autres recettes fiscales nettes)	30.8	25.1	25.1	51.2	26.1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14.4	15.4	16.3	24.9	8.7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 hors FMI)	-0.1	-7.1	-7.9	-0.1	7.9
부속예산(Solde des budgets annexes)	0.0	-0.2	-0.2	0.0	0.1
총재정수지(Solde État - hors FMI)	-93.1	-225.1	-195.2	-152.8	42.4

자료: 프랑스 재무부, PLF 2021.

- (재정수지) 거시경제 악화와 대규모 지원 조치로 인해 재정 전망은 크게 악화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20년 -10.2%를 기록하고, 2021년에는 다소 회복되어 -6.7%를 기록할 전망
 - 프랑스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2018년(-2.3%)과 2019년(-2.1%)에 GDP 대비 재정수지 -3% 이하를 달성하였으나, 2020년에는 경제활동 감소와 가계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돼 GDP 대비 -10.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재정적자는 1,952억유로로, 2020년 본예산 전망과 비교해 1,020억유로 악화될 전망
 - 2020년 7월 채택된 제3차 수정예산법과 비교하면 2020년 재정적자 전망은 299억유로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됨
 - 프랑스 활성화 등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으로 2021년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6.7%로 전망되며, 이는 2020년과 비교할 때 3.5%p 감소한 수준
 - 2021년 재정적자는 1,528억유로로 2020년 전망에 비해 424억유로 감소할 전망
-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0년 117.5%로 전년 대비 19.4%p 증가할 전망
 - 2021년에는 경제 회복으로 인해 116.2%로 감소할 전망

[그림 III-2] 프랑스의 재정적자

(단위: %)



주: 2019년의 빚금 영역은 경쟁력·고용을 위한 세액공제(CICE) 관련 비용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재정적자는 3.1%, 제외할 경우 2.3%

자료: 프랑스 재무부, 2021년 예산법안(PLF 2021: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2020, p.9.

<표 III-3> FY2021 일반정부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전망	2021년 전망
2021년 예산법안(2020.9.)			
구조적 수지(Solde structurel)	-2.2	-1.2	-3.6
경기조정치(Solde conjoncturel)	0.2	-6.5	-2.8
임시 및 특별 조치 (Mesures ponctuelles et temporaires)	-1.0	-2.6	-0.2
재정수지(Solde effectif)	-3.0	-10.2	-6.7

자료: 프랑스 재무부, PLF 2021: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2020.

〈참고 III-1〉 2020년 수정예산법안(Projet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2020: PLFR)

- FY2020 4차 수정예산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pour 2020-4: PLFR 4) 발표(2020.11.4.)^{1) 2)}
 - 2020년 1~3차 수정예산법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조치들을 포함한 반면, 4차 수정예산법안은 예산 관리를 지원하고 위기 대응의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됨
 - (경제 전망) 2020년 경제성장률은 2021년 예산법안 전망의 -10%보다 1%p 악화된 -11%로 제3차 수정예산법의 전망치와 동일함
 - * 2020년 본예산에서 전망한 수치는 1.3%
 - (재정 전망) 2020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1년 예산법안 전망의 10.2% 보다 1.1%p 악화된 11.3%로 전망됨
 - * 총재정수지는 -2,229억유로로 2021년 예산법안 전망보다 크게 악화될 전망
 - * 2020년 4차 수정예산법안(2020.11.4.)의 전망치는 2021년 예산법안(2020.9.28.) 발표 이후의 경제 상황을 반영함

〈2020년 4차 수정예산법안〉

(단위: 십억유로)

구 분	2020 본예산	2020 3차 수정예산	2020 4차 수정예산안	2021 예산법안
재정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et PSR)	400.4	460.4	478.5	448.8
세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337.7	394.7	431.1	378.7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62.7	65.7	65.4	70.1
재정수입(Recettes de l'Etat)	307.4	242.6	265.6	296.1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nettes)	293.0	227.2	249.3	271.2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14.4	15.4	16.3	24.9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 hors FMI)	-0.1	-7.1	-9.9	-0.1
부속예산(Solde des budgets annexes)	0.0	-0.2	-0.1	0.0
총재정수지(Solde État - hors FMI)	-93.1	-225.1	-222.9	-152.8

자료: 프랑스 재무부, PLFR 2020-4.

- 1) 프랑스 예산국,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LFR 4) pour 2020, 2020.11.4., https://www.budget.gouv.fr/files/uploads/extract/2020/PLFR4/PLFR_2020-4-W.pdf
- 2) 프랑스의 수정예산법안은 회계연도 말의 보완법으로 지출총량을 규정에 맞추고 초기예산법의 집행과 관련된 새로운 지출을 개시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김은경, 『프랑스의 재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10., p.36)

2 예산기조

- 2021년 예산법안은 코로나19와 2020년의 급격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 대응을 반영함
 - 2020년 세 차례의 수정예산법안 편성으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했고, 2021년에는 프랑스 활성화 계획(Plan de relance)의 이행으로 경제 회복을 가속화함
- 1천억유로 규모의 프랑스 활성화 계획은 프랑스 경제의 미래 과제에 대한 대응과 경기 회복을 지원함
 -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모델을 위해 투자함
 - 생태학적 전환(ecological transition) 가속화에 300억유로 투자
 - 공공 및 민간 건물의 에너지 혁신, 산업의 탈탄소화, 수소부문 발전 등에 투자
 -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함
 - 생산세(impôts de production)⁶²⁾ 인하 및 중소기업 수출 지원
 -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통합을 지원함

62) 기업부가가치 부담금, 산업 시설에 대한 부동산세, 기업토지세 등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본고 pp.97~98 “4장 주요 재정정책 가. 프랑스 활성화 2) 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을 참고

3 예산안 주요 내용(PLF 2021)

- 2021년 예산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s 2021: PLF 2021)은 2020년 9월 28일에 발표됨⁶³⁾

가. 세입

- 2021년 재정수입은 2,961억유로로 2020년 전망치 대비 330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조세수입은 2,712억유로로 경기회복을 반영해 전년 대비 244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회복에 따른 과세소득의 증가로 소득세는 22억유로 증가한 749억유로로 전망됨
 - 법인세율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세수 하락을 기업 수익 개선으로 인한 세수 증대가 상쇄하여 법인세는 79억유로 증가한 378억유로로 전망됨
 - 에너지제품 소비세(TICPE)는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105억유로 증가한 183억유로로 전망됨
 - 부가가치세는 소비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보다 주택세 단계적 폐지*에 대해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전한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223억유로 감소한 890억유로로 전망됨
 - * 주택세(taxe d'habitation)는 2018년부터 단계적 폐지가 시행되어 2023년까지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며, 주택세 폐지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는 부가가치세의 분배를 통해 일부 보전함
 - 2021년 세외수입은 2020년과 비교해 87억유로 증가한 249억유로로 전망됨

63)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2020.9.28., <https://www.economie.gouv.fr/projet-loi-de-finances-2021>
예산국, Présenta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2020.9.28., <https://www.budget.gouv.fr/reperes/budget/articles/presentation-du-projet-de-loi-de-finances-pour-2021>

나. 세출

- 2021년 조정가능 지출(dépenses pilotables)*은 2,901억유로로 2020년 제3차 수정예산법 대비 103억유로 증가할 전망

* 조정가능 지출은 일반 예산의 세출, 조정가능 특별회계의 세출 등 정부가 직접 통제 가능한 지출을 의미

- 2021년 예산법안의 미션 지출은 2020년 본예산 대비 354억유로(13.6%) 증가한 2,965억유로

- 국방(défense) 미션은 군전력증강법(Loi de Programmation Militaire: LPM)에 따라 2020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도 전년보다 17억유로 증가한 392억유로
- 학교교육(Enseignement scolaire) 미션은 16억유로 증가한 549억유로
 - 교육부문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
 -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교육 보조원 추가 채용을 통해 교육의 포용성 강화
- 공공투자를 통해 수요를 빠르게 회복하고 프랑스의 친환경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프랑스 활성화(Plan de relance) 미션이 신설되어 220억유로가 배정됨
- 회복 계획의 일환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issements d'avenir) 미션은 18억유로 증가한 40억유로가 배정됨
 - 프랑스가발청(French Agency for Development: AFD)의 자체 자금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포함
- 2020년 제1차 수정예산법에서 신설되어 제3차 수정예산법 기준 524억유로가 배정되었던 보건위기 대응 비상계획(Plan d'urgence face à la crise sanitaire) 미션은 2021년 예산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음

〈표 III-4〉 2021년 예산법안 미션별 세출 내역

(단위: 십억유로, %)

33개 미션 [지불예산(Credit de Paiement: CP)] ¹⁾	2020 본예산 (A)	2021 예산법안 (B)	B/A
외교(Action extérieure de l'Etat)	2.7	2.8	3.7
일반공공행정(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Etat)	3.2	3.5	9.4
농업·임업·수산업(Agriculture, alimentation, forêt et affaires rurales)	2.7	2.7	0.0
정부개발원조(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3.3	3.9	18.2
퇴역군인지원(Anciens combattants, mémoire et liens avec la nation)	2.2	2.1	-4.5
영토통일(Cohésion des territoires)	15.1	16.0	6.0
정부위원회 및 행정재판(Conseil et contrôle de l'Etat)	0.6	0.6	0.0
예비비(Crédits non répartis)	0.1	0.3	200.0
문화(Culture)	2.8	3.0	7.1
국방(Défense)	37.5	39.2	4.5
국가정책방향(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0.8	0.8	0.0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 (Ecologie, développement et mobilité durables)	17.7	19.2	8.5
경제(Economie)	2.1	2.4	14.3
정부재정관리·부채관리·국채발행 등 (Engagements financiers de l'Etat)	0.4	2.8	600.0
학교교육(Enseignement scolaire)	53.3	54.9	3.0
공공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예산 및 공공개혁 관련 정책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es ressources humaines)	7.6	7.5	-1.3
이민 및 통합정책(Immigration, asile et intégration)	1.8	1.8	0.0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issements d'avenir)	2.1	4.0	90.5
정의(Justice)	7.6	8.2	7.9
언론(Médias, livre et industries culturelles)	0.6	0.6	0.0
프랑스령 국가들에 대한 지원(Outre-mer)	2.3	2.4	4.3
의회·헌법위원회 등(Pouvoirs publics)	1.0	1.0	0.0
R&D 및 고등교육(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28.4	28.3	-0.4
복지 및 은퇴자 지원(Régimes sociaux et de retraite)	6.2	6.2	0.0
보건위기 대응 비상계획(Plan d'urgence face à la crise sanitaire)	0.0	0.0	-
프랑스 활성화(Plan de relance)	0.0	22.0	-
지방재정지원(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3.5	3.9	11.4
보건의료(Santé)	1.1	1.3	18.2
치안(Sécurités)	13.7	13.9	1.5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26.1	26.0	-0.4
체육 및 건강·청소년 지원(Sport, jeunesse et vie associative)	1.2	1.3	8.3
공공부문 개혁(Transformation et fonction publiques)	0.6	0.7	16.7
노동 및 고용(Travail et emploi)	12.8	13.2	3.1
미션별 합계	261.1	296.5	13.6

주: 1) 투입승인(AE)은 투자될 수 있는 예산지출 상한액이며, 지불예산(CP)은 투입승인의 한도 내에서 체결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동안 지출명령이 될 수 있거나 지불될 수 있는 지출 상한액을 의미(김은경, 『프랑스의 재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10., p.80)

자료: 프랑스 재무부, *Dossier de press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2020.9.28.

4 주요 재정정책

가. 프랑스 활성화(Plan de relance)

- 2021년 프랑스의 예산법안은 2022년까지 1천억유로 규모의 프랑스 활성화(Plan de relance) 계획을 담고 있음
 - 2020년 제3차 수정예산법의 150억유로를 포함해 2021년 예산법안의 860억유로가 회복 계획의 일환으로 투입될 예정
 - 프랑스 활성화 계획은 다음의 세 가지 우선순위로 이뤄짐
 - － 프랑스 경제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 － 사회적 포용성 강화

1) 녹색 성장 지원

- 공공 및 민간 건물의 에너지 혁신 가속화를 위해 지원
 - 민간부문에서는 에너지 전환 세액공제(Grèdit d'impôt pour la Transition Énergétique: CITE)⁶⁴를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Ma Prime Rénov’(my premium renovation)”⁶⁵로 전환하여 2021~2022년에 약 20억유로를 지원
 - 공공부문 건물의 열 효율 개선을 위해 40억유로를 지원
- 프랑스의 탈탄소화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적 전환의 조화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진행됨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2억유로를 투자해 산업 기업의 배출량 감소를 위해 지원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탄소 배출량이 적은 장비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장비보다 비싸고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 구입에 지원하여 탄소배출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함

64) 에너지효율 개선공사(지붕 단열공사, 보일러 교체 등) 비용의 30%를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

65) 주택의 단열 개선, 보일러 교체, 효율적 환기 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0 참고

- 농업부문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총 12억유로를 지원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생산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는 등 농업 및 식품 시스템의 생태학적 전환 가속화에 4억유로 지원
 - 도축장 현대화와 동물 보호소 지원 등 동물복지 강화에 2억 5천만유로 지원
 - 식물성 단백질 공급 확대에 1억유로 지원
 - 농업 장비 개선 및 개발에 2억 5천만유로 지원
 - 기후 변화에 대한 산림산업의 적응 및 산림 복원에 2억유로 지원
- 재생 가능한 저탄소·수소 부문의 개발은 경제 회복 계획의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으로 2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
 - 산업 온실가스 배출 감축, 수소차량 개발 지원, 연구 지원의 세 가지 우선순위로 이뤄짐
 - 경제 전체의 탈탄소화 및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의 확대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순환경제(Economie circulaire)를 위해 폐기물 생산을 제한하고 재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5억유로를 지원
 - 재활용 센터의 현대화, 바이오 에너지 개발 등을 지원
- 친환경 차량 구매 지원 강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개발 장려
 - 전기차 구입에 대한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지속
 - 오래되고 연비가 낮은 자동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구매자에 지급하는 전환 보조금 5천유로 신설
 - 전기차 구매자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6천유로에서 7천유로로 인상
 - 운송 분야의 친환경차 구입에 대한 재정 지원
 - 주거용 주차 공간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세금공제 도입

□ 철도 및 지하철·트램·버스 등의 대중교통 개발 지원

- 프랑스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철도부문에 47억유로를 지원해 승객운송과 화물운송에서 모두 도로 이용을 대체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이 되도록 함
- 특히 가장 밀집된 지역의 도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교통에 9천만유로 지원

2) 기업 경쟁력 강화

□ 2021년 100억유로를 포함해 프랑스 활성화 계획 기간 동안 200억유로의 생산세(impôts de production) 인하

- 프랑스의 생산세는 기업의 생산 요소(급여, 투자, 생산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산업 분야에서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였기 때문에 생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인하
 - 기업부가가치 부담금(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 CVAE) 납부 대상 기업에 대해 납부세액 절반 감액에 총 72억유로
 - 약 3만 2천개 기업의 산업 시설에 대한 부동산세(Taxe Foncière sur les Propriétés Bâties: TFPB)와 기업토지세(Composée de la 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 CFE) 감면에 각각 17억 5천만유로와 15억유로
 - 지역경제 기여금(Contribution Economique Territoriale: CET) 납부 대상 기업의 세율을 3%에서 2%로 인하
- 생산세 인하의 효과로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음

□ 기업활동의 재개를 위한 지원

- 대출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발전을 도모함
 - 프랑스 경제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한 펀드에 대해 1억 5천만유로의 대출을 보증
- 프랑스 국영 투자은행(BPI France)의 보증기금 강화를 위해 2021년 3억 2,700만유로, 2022년 1억 3,700만유로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대출 접근을 용이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무역시장 활동 재개를 지원하고 2018~2019년의 수출 호조를 이어가기 위해 2020~2022년의 복구 계획 기간 동안 2억 4,700만유로 지원

□ 프랑스 경제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탄력성을 지원

- 민간 R&D 부문의 고용 유지를 위해 2021년부터 총 3억유로 투입
- 중소기업의 생산 장비 디지털화 및 현대화에 총 3억 8,500만유로 지원
 - 또한 미래산업 기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함

3) 사회적 포용성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인 부분실업제도(Chômage partiel(activité partielle))*를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보존할 수 있었고, 관련 정책을 계속 시행할 예정

* 부분실업이란,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일정 급여를 보장(세전 급여의 70%)하도록 하는 제도

- 기존의 부분실업제도가 일시적인 활동 감소에 대한 지원이었던 데 반해, 장기적 부분 활동계획(d'Activité Partielle de Longue Durée: APLD)을 도입해 부분실업에 대한 소득 보전이 최대 24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함
- 부분실업제도의 총예상비용은 2021년 66억유로로, 전체 재원 중 44억유로는 정부가, 22억 유로는 실업보험기금(Unedic)이 부담함

□ 고용지원은 2017년부터 정부의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이었고 코로나19 이후 더욱 중요해졌으며, 특히 청년의 고용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함

- 부분 고용 상태의 청년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고용기금(Fonds National pour l'Emploi: FNE)을 통한 10억유로 지원
 - 22만명의 청년들에 대해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훈련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 견습과정(d'apprentissage)에 있는 청년 및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의 고용을 위한 지원에 총 20억유로 지원
-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7억 5천만유로의 보조금 지급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저소득 가구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신학기 수당⁶⁶⁾을 약 100유로 인상
 - 6~10세 학생에 대해 368.84유로에서 469.97유로로 인상
 - 11~14세 학생에 대해 389.19유로에서 490.39유로로 인상
 - 15~18세 학생에 대해 402.67유로에서 503.91유로로 인상
-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수용시설 건설 등에 1억유로 지원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 2021년 4억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해 지역 내 산업 육성을 강화
-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2억 5천만유로를 지원

나. 공공재정 관리 개선

□ 세제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2021년 7개의 세금을 폐지함

- 2019년부터 저수익 세금을 없애는 다년간의 프로그램을 시작해 현재까지 46개의 세금이 폐지되었고, 2021년에는 7개의 소규모 세금을 추가적으로 폐지함⁶⁷⁾
- 또한 여러 세금 관리를 단순화하고 조세의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

□ 예산의 명확성을 강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녹색예산을 예산안에 포함함

66) l'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저소득층의 학비 충당을 위한 지원 제도

67) 기름 및 윤활제(huiles et préparations lubrifiantes)에 적용되는 오염활동에 대한 세금(taxe générale sur les activités polluantes: TGAP), 선상 카지노(casinos flottants)에 대한 세금, 트럭 운전 기사가 사용하는 무선 주파수에 대한 세금 등이 포함됨

- 에너지 서비스 관련 지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전환 특별 할당 계정을 2021년에 폐지하고 관련 지출을 일반회계에 포함시킴
- 예산안에 포함된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녹색예산이 처음으로 예산안의 부록으로 포함됨

〈참고 III-2〉 녹색 예산(budget vert)

- 2021년 예산안은 친환경 예산안으로 환경 영향에 따른 등급 평가를 제시함
 - 녹색 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Paris Collaborative On Green Budgeting)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자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됨
 - 기후 변화 대응,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위험 대비, 수자원 관리, 순환경제 및 폐기물, 오염 방지, 생물 다양성 및 보호 등 총 6가지 환경 목표와 관련하여 2021년 예산안에 담긴 정책들의 등급을 제시함
 - 2021년 예산안에서 6가지 환경 목표 중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적어도 불리하지 않은 지출은 381억유로로 나타나며, 재생에너지 개발(69억유로)이 포함됨
 - 2021년 예산안에서 한 가지 이상의 환경 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다른 환경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혼합비용은 47억유로로 나타나며, 운송·철도와 관련한 지출을 포함함
 - 한 가지 이상의 환경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용은 100억유로로 나타나며, 에너지 소비에 대한 세금 면제 또는 감면(51억유로)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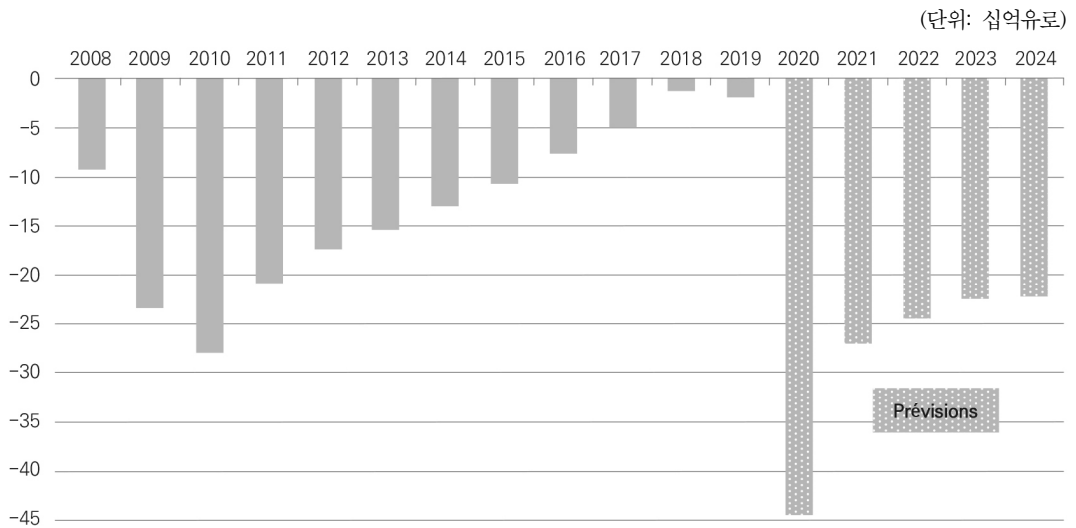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사회보장 부문의 재정이 보건위기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어 2020년 재정적자는 444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도에 대한 예측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 건강 상황에 대한 변화와 경제 회복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회보장 부문의 수입은 위기 이전의 예측 수준보다 낮을 수 있고, 지출은 위기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
 - 사회보장 부문의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예상되어, 2024년까지 200억유로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의료 관계자들과의 공공의료 부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담화에서 도출된 약속의 이행 사항이 포함됨
 - 병원 직원의 급여 재평가로 2020~2023년 동안 의료보험지출 목표(ONDAM)⁶⁸⁾가 88억유로 증가
 -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제외한 의료보험지출 목표(ONDAM)는 2021년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보건 및 의료 관련 공공시설 복구 계획에 190억유로를 투자할 계획
 - 향후 2년 동안 원격진료 개발에 대한 지원
- 사회보장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지출 관리정책은 재정 균형을 다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회보장 부문 재정적자가 2010년 280억유로에서 2019년 19억유로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20년 444억유로로 크게 증가함

68) Objectif National des Dépenses d'Assurance Maladie: 1996년 지출 통제를 위해 제정된 제도로, 차년도 건강보험 지출 최대한도를 의미

- 재정균형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 위기를 극복하고 프랑스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함
- 2021년 예산안의 강력한 경기 회복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2019년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하고, 이후 사회보장 관련 지출 통제 경로에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임

[그림 III-3] 사회보장 부문 총재정수지 추이



주: 2020~2024년은 전망치

자료: 프랑스 재무부, *PLFSS 2021: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1*, p.45

IV. 영 국⁶⁹⁾

□ FY2021-22: 2021년 4월 ~ 2022년 3월

□ 출처: HM Treasury, *Budget 2021*, 2021.3.

HM Treasury, Budget Speech 2021, 2021.3.3.

HM Treasury, Budget 2021: What you need to know, 2021.3.3.

HM Treasury, Budget 2021 sets path for recovery, 2021.3.3.

HM Treasury, Budget Speech 2021(Oral statement to Parliament), 2021.3.3.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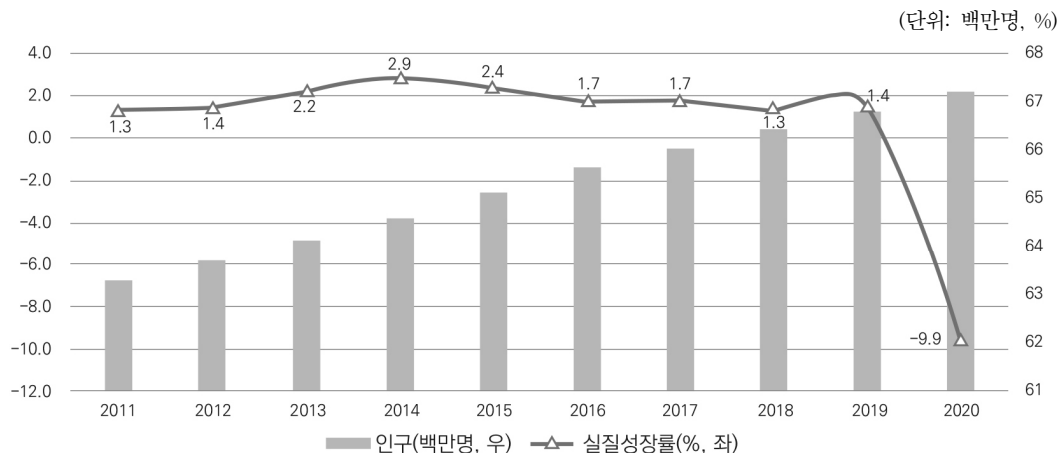
□ 환율: 1파운드 = 약 1,513.05원(2020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20년 경상GDP 2조 9,501억 달러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2020년 기준 54.6%[한국 77.0%(2019년 잠정치 기준)]

□ 인구: 6,720만명(2020년 기준)

□ 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21.3.29.

69) 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검색일자: 2021.3.29.) 기준. 경제규모, 수출입의 대GDP 비율, 인구, GDP는 OECD 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21.3.29.) 기준

[요약]

□ 경제·재정 전망

- (경제 전망)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정부 지원이 계속됨에 따라 영국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2021년 GDP 성장률은 4%로 전망)
- (재정 전망) FY2021-22에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은 10.3%로 전년 대비 하락,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는 107.4%로 전년 대비 상승할 전망

□ (예산기조) 재정정책은 전망기간 동안 부양적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며, 이번 예산안의 추가 조치도 FY2022-23까지 경제를 계속 부양할 예정

□ (수입·지출) FY2021-22의 경상수입은 전년보다 330억파운드 증가한 8,193억파운드 (GDP의 36.2%), 총관리지출(TME)은 전년보다 876억파운드 감소한 1조 533억파운드 (GDP의 46.5%)로 전망

□ (정책 방향) 2021 예산안은 ① 영국 국민의 일자리 및 생계 보호, ② 공공재정 강화, ③ 투자 주도의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둠

□ 예산안의 주요 정책 결정

- (일자리 및 생계 보호) 고용유지 보조금, 자영업자 소득지원, 특정 부문의 조세 감면 등 기존 코로나19 관련 지원 연장 및 대출, 보조금 등 신규 지원 도입, 백신공급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추가 투자 등
- (공공재정 강화) 경제 회복이 견고하게 진행된다면 재정 정상화 조치가 필요하여 법인 세율 인상(2023년 4월), 소득세 기본공제액 및 고세율 과세 기준 금액 동결(2022-23년-2025-26년) 등을 추진 예정
- (투자 주도의 경제 회복) 신규 투자 공제제도, 인프라 은행 등 민간투자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와 혁신·R&D 기업 스케일업 지원, 지역 발전을 위한 자금, 녹색 산업 투자, 자유무역항 개설 등
 - 또한 새로운 성장 계획(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growth)으로 역량, 인프라, 혁신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
2020.2.12.	FY2019-20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2020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0.3.11.	2020 예산안(Budget 2020) 발표	
2020.3.11.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 전망(2020년 3월) 발표	
2020.5.4.	FY2020-21 중앙정부 본세출예산안 발표	
2020.7.8.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창출·보호 계획 (A Plan for Jobs 2020) 발표	2020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20.7.14.	예산책임청(OBR), 2020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표	
2020.7.21.	FY2018-19 결산보고서 발표	
2020.9.24.	일자리 보호와 기업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 계획[겨울 경제 계획 (Winter Economy Plan)] 발표	
2020.11.18.	‘10대 녹색 산업 혁명 계획(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발표	
2020.11.25.	2020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2020) 발표	
2021.2.22.	FY2020-21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2021년 3월 재정동향
2021.3.3.	2021 예산안(Budget 2021) 발표	
2021.3.3.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 전망(2021년 3월) 발표	

영국 재무부는 당초 2020년 가을로 예정되었던 예산안 발표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하여 2021년 3월 3일에 Budget 2021을 발표함
 이하 내용은 재무부의 예산안(Budget 2021)과 예산책임청의 경제·재정 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 바람

1 경제 및 재정 전망⁷⁰⁾

가. 경제 전망

〈표 IV-1〉 주요 경제 전망

(단위: %, 전년 대비 % 변화, 백만명)

구분	실적	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실질GDP 성장률	1.4	-9.9	4.0	7.3	1.7	1.6	1.7
(2020년 11월 전망 대비 변화, %p)	0.2	1.4	-1.5	0.7	-0.6	-0.1	0.0
- 가계소비	1.1	-11.0	2.9	11.1	1.2	1.8	1.3
- 일반정부소비	4.0	-5.7	12.0	1.4	0.8	2.3	2.1
- 기업투자	1.1	-10.7	-2.2	16.6	3.0	-2.3	5.1
- 일반정부투자	4.0	3.8	17.8	4.2	1.9	1.4	1.2
- 순수출 ¹⁾	-0.1	0.7	-3.6	-0.4	0.3	0.0	-0.1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1.8	0.9	1.5	1.8	1.9	1.9	2.0
고용(백만명)	32.8	32.7	32.3	32.4	32.8	33.1	33.2
평균 임금 상승률	3.0	1.1	1.9	2.7	2.2	2.8	3.5
실업률(LFS)(%)	3.8	4.5	5.6	5.9	5.1	4.5	4.4

주: 1)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3., Table 1.1; Table 2.11에서 일부 발췌

□ (경제성장률 전망) 예산책임청(OBR)은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정부지원이 계속됨에 따라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표 IV-1〉 참고)

70)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0*, 2020.3.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영국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2020년 연간 GDP 성장률은 -9.9%로 300년 만에 가장 큰 하락세가 나타남
- 2021년 영국의 GDP는 4%의 성장이 예상되며 백신공급과 공공보건 제한 조치 완화로 2020년 11월 전망의 예상시점보다 6개월 이른 2022년 2분기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
 - 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봉쇄기간 동안 축적된 가계저축이 줄어들며 소비가 반등
 - 브렉시트 결과의 불확실성 완화, 중기 전망에 대한 신뢰(confidence) 상승, 예산안의 자본공제 한시적 확대 조치 등은 기업투자 회복을 뒷받침할 전망
 - 예산안에서 발표된 조치들은 단기적으로 일자리 보호, 기업지원, 생산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OBR의 11월 전망 이후 발표된 조치들과 예산안에서 발표된 조치들은 2021년 봄과 여름에 GDP를 약 0.75% 제고할 전망
- (실업률 전망) 2021년 실업률은 전년(4.5%)보다 상승한 5.6%로 전망되며, 특히 2021년 말 6.5%로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고용유지보조금제도 연장 등에 힘입어 2020년 11월 전망에서 예상한 최고 실업률 수준 (7.5%)보다는 낮은 수준임
 - 이후 실업률은 전망기간 동안 점차 하락하여 2024년 말 4.4%를 기록할 전망
- (물가 상승률 전망) 2021년과 2022년 CPI 인플레이션은 각각 1.5%, 1.8%로 통화정책위원회 (MPC)의 2% 목표치를 다소 하회할 전망이다
 - 실업률 증가로 인한 임금 상승세 둔화의 영향이 유가 상승의 영향보다 우세
- (주요 리스크) 팬데믹과 경제의 향후 추이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
 - 효과가 높은 백신의 빠른 공급, 신규 치료법 개발, 누적 가계저축의 감소 속도 증가 등은 경제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음
 - 반면, 백신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내성이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중·단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재정 전망

□ 재정수지 전망

- (공공부문 순차입) 경제 재개 및 긴급 재정지원 종료에 따라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public sector net borrowing)은 FY2020-21에 16.9%에서 FY2021-22에 10.3%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여전히 금융위기 시기보다 높은 수준임(그림 IV-1) 참고
 - 코로나19로 인해 FY2020-21의 정부차입은 3,550억파운드로 기록적인 규모로 나타났으나, 이는 2020년 11월 전망치보다는 390억파운드 낮은 수준임
 - FY2021-22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연장, 기업투자를 위한 한시적인 조세지원 정책으로 이후 정부차입은 2020년 11월 전망치보다 더욱 서서히 감소할 전망
- (경상예산수지) 예산책임청은 GDP 대비 경상예산적자(Public sector current budget deficit)가 전망기간 동안 하락하여 전망기간 마지막 연도(FY2025-26)에 거의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표 IV-2〉 참고)
 - GDP 대비 경상예산적자 비율은 FY2020-21에 13.3%, FY2021-22에 7.6%로 예상
 - 이후 경상예산적자 비율이 FY2023-24에 0.6%, FY2025-26에 0%에 근접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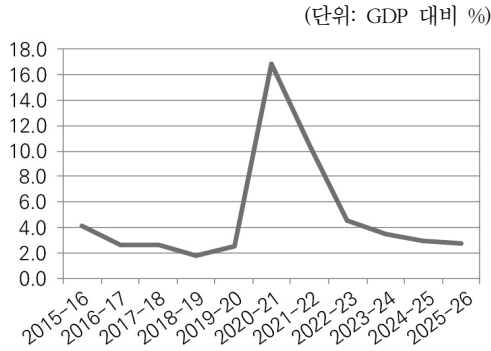
□ 국가채무 전망

- (공공부문 순채무) FY2021-22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public sector net debt) 비율은 107.4%로 전년(100.2%) 대비 상승할 전망(그림 IV-2) 참고
 -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FY2023-24에 109.7%까지 증가하여 FY1958-5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후에는 기초 채무⁷¹⁾ 감소와 중앙은행 TFS⁷²⁾의 대출상환 등의 영향으로 감소할 전망
 - GDP 대비 기초 채무 비율은 FY2023-24에 97.1%로 정점을 기록할 전망이다. 예산안에서 제시된 재정 복원을 위한 조처에 힘입어 전망기간 마지막 2개 연도에는 하락할 전망
 - 전망기간의 채무 증가(현금 기준)는 대부분은 순차입 증가에서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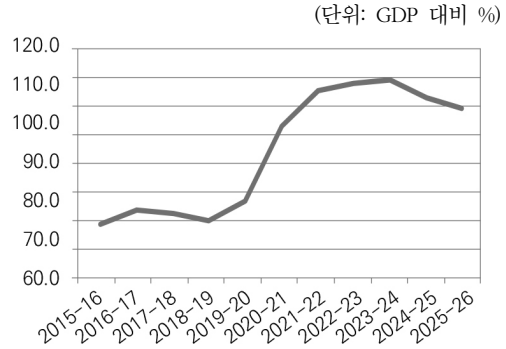
71) underlying debt (excluding the Bank of England)

72) Term Funding Scheme: 중앙은행의 대출제도

[그림 IV-1] 공공부문 순차입 전망



[그림 IV-2] 공공부문 순채무 전망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3., Chart 1.10; Chart 3.8 일부 수정

〈표 IV-2〉 주요 재정 총량 전망

(단위: GDP 대비 %, %)

구분	실적	전망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세입·세출							
공공부문 경상수입	37.2	37.5	36.2	37.3	38.4	39.0	39.1
총관리지출(TME)	39.8	54.4	46.5	41.8	41.9	41.9	41.9
공공부문 경상지출	35.6	48.2	41.3	36.5	36.5	36.6	36.6
공공부문 순투자	1.9	3.6	2.7	2.8	2.9	2.8	2.7
감가상각	2.3	2.6	2.5	2.5	2.5	2.5	2.5
2020 예산에서 제시한 재정 목표							
경상예산적자	0.6	13.3	7.6	1.7	0.6	0.1	0.0
공공부문순투자	1.9	3.6	2.7	2.8	2.9	2.8	2.7
세입 대비 채무이자 비율(%)	3.5	2.6	2.5	2.3	2.4	2.5	2.5
기존에 법제화된 재정 목표							
공공부문 순차입	2.6	16.9	10.3	4.5	3.5	2.9	2.8
공공부문 경기조정 순차입	2.6	16.5	9.7	4.2	3.3	2.8	2.7
공공부문 순채무 ¹⁾	84.4	100.2	107.4	109.0	109.7	106.2	103.8
안정성장협약(SGP) 기준							
일반정부 적자 ²⁾	2.8	17.1	10.6	4.5	3.5	3.1	3.1
경기조정 재정적자	2.9	16.6	10.0	4.2	3.4	3.0	3.0
일반정부 채무 ³⁾	84.4	107.6	107.2	107.8	109.3	110.0	110.4

주: 1) 3월 말 기준 채무, GDP는 3월 말에 증심화

2) 일반정부 순차입(마스트리히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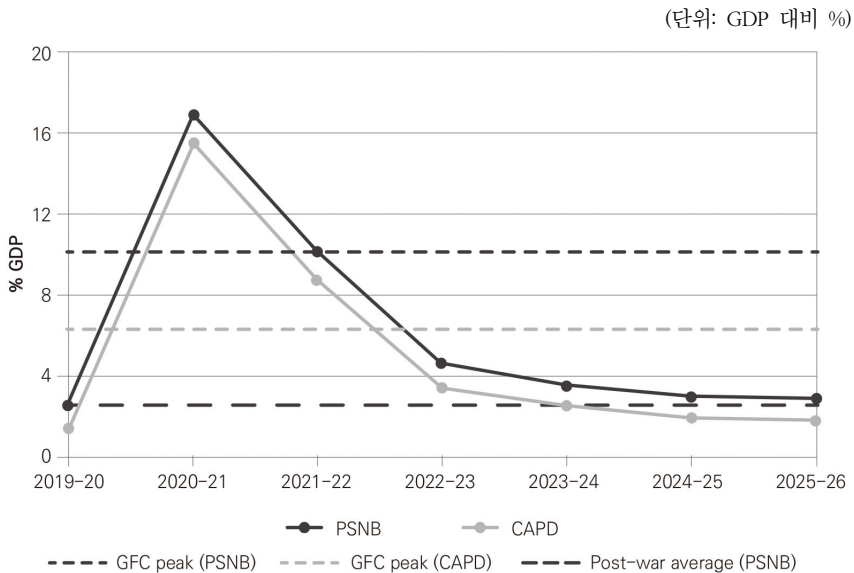
3) 일반정부 총채무(마스트리히트 기준), 회계연도 GDP 사용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3., Table 1.2; Table 3.34에서 일부 발췌

2 예산기조 및 정책 방향

- (재정기조) 재정정책은 전망기간⁷³⁾ 동안 부양적(supportive) 기조가 유지될 전망⁷⁴⁾
 -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부문 순차입(PSNB)과 경기조정 기초재정적자(CAPD)로 재정기조 측정([그림 IV-3] 참고) 시, 특히 FY2020-21과 FY2021-22에 금융위기보다 더 부양적인 모습을 보이며 재정정책이 GDP 수준을 높이도록 지원함
 - － 이후 공공부문 순차입이 하락하지만 여전히 전쟁 이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임

[그림 IV-3] 재정기조(fiscal stance)



자료: HM Treasury, Budget 2021, 2021.3., Chart 1.4.

- － 2020 예산을 포함해 현 정부가 발표한 정책 조치는 전반적으로 FY2023-24까지 상당히 부양적(materially supportive)이며, 이번 예산안의 추가 조치도 FY2022-23까지 경제를 계속 부양한다는 설명임

73) FY2020-21 ~ FY2025-26

74) "Fiscal policy remains supportive across the forecast."(HM Treasury, Budget 2021, 2021., p.17)

-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고용유지 보조금 및 자영업자 소득지원 제도 연장, 기타 한시적 조세 감면 연장, 자본공제 인상 등 예산안에서 FY2021-22에 재정정책 확대(loosen)를 위한 약 600억파운드 규모의 계획을 발표함⁷⁵⁾
 - 또한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소득세 기본공제액 동결, 부처별 경상지출 한도 하향 조정 등 FY2023-24부터 재정정책 축소(tighten)를 위한 계획도 발표⁷⁶⁾
- (정책 방향) 리시 수낙 재무부 장관은 2021 예산안에서 ① 영국 국민의 일자리 및 생계 보호, ② 공공재정 강화, ③ 투자 주도의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둔 650억파운드 규모의 지원 계획을 제시함
- * 각 정책 방향별 세부 정책은 '3. 예산안 주요 내용'에 제시됨
- (영국 국민의 일자리 및 생계 보호) 경제 재개 계획을 반영해 기존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연장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국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계속받을 수 있도록 백신공급 및 공공서비스에 대해 추가로 투자
 - (공공재정 강화) 코로나19 제한 조치 완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기업, 일자리, 국민의 생계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경제 회복이 견고하게(durably) 진행되면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투자 주도의 경제 회복) 영국 전역에서의 투자와 기회를 확산시켜 기업의 성장을 돕고 역량, 자본,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
 - 이처럼 경제 보호, 회복 지원, 공공재정 복원을 위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영국 전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며, 대외 지향적 · 저탄소 · 하이테크 경제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로를 추구

75) "In the Budget, the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loosen fiscal policy by almost £60 billion in 2021-22."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 p.38)

76) "From 2023-24, the Government plans to tighten fiscal policy by increasing the corporation tax rate, freezing the income tax personal allowance and higher-rate threshold, and lowering day-to-day departmental spending limits."(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 p.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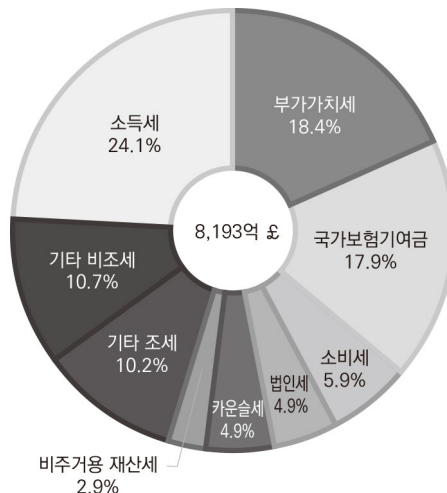
3 예산안 주요 내용

가. 수입 및 지출 규모 전망

1) 수입 전망

- FY2021-22의 공공부문 경상수입(Public Sector Current Receipts)은 8,193억파운드로 전년보다 4.2%(330억파운드)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는 FY2019-20의 규모를 하회하는 수준임(〈표 IV-3〉 참고)
 - 경상수입 증가가 GDP 회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FY2021-22의 GDP 대비 공공부문 경상수입 비율은 전년(37.5%) 대비 감소한 36.2%로 예상됨
 - 주로 한시적 자본공제 도입, 접객업 부문 VAT 감면 연장, 비주거용 재산세율(소매·접객업 등)과 부동산 거래 인지세 감면 연장 등의 비용이 반영됨
 - 세목별 규모는 FY2021-22에 소득세 약 1,980억파운드(24.1%), 부가가치세 약 1,510억파운드(18.4%), 국가보험기여금 약 1,470억파운드(17.9%), 소비세 약 480억파운드(5.9%), 법인세 약 400억파운드(4.9%) 등으로 전망됨(그림 IV-4) 참고)

[그림 IV-4] FY2021-22 공공부문 경상수입



주: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HM Treasury, *Budget 2021*, 2021.3., Chart 2를 참고하여 작성

- 한시적 조세 인하 조치의 종료, 법인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FY2022-23부터 경상수입이 GDP 증가보다 빠르게 늘어나 FY2025-26의 GDP 대비 경상수입 비율은 39.1%로 FY1984-8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

〈표 IV-3〉 경상수입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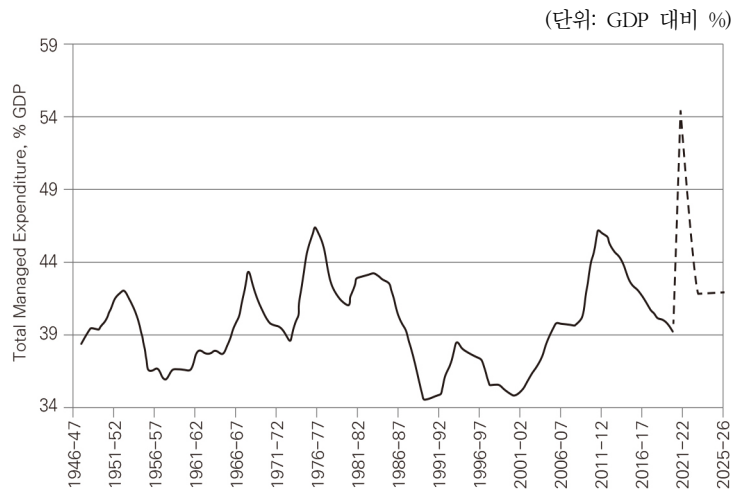
구분	실적	전망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소득세	193.6	194.8	198.2	208.7	220.0	233.2	248.2
국민보험기여금(NICs)	145.0	143.8	146.8	152.6	157.4	163.6	170.2
부가가치세	133.8	119.9	127.9	145.6	149.7	155.1	159.2
법인세	48.4	45.5	40.3	48.8	71.3	81.7	85.3
석유세	-0.4	-0.3	-0.2	-0.2	-0.2	-0.2	-0.2
연료세	27.6	21.5	26.0	29.2	30.1	30.6	31.2
비주거용 재산세	31.0	18.1	23.8	31.6	33.8	34.5	35.0
지방세(Council tax)	36.3	38.1	39.9	41.2	42.6	44.1	45.6
VAT 환급(refunds)	19.0	21.5	22.8	22.7	23.7	24.8	26.2
자본이득세	9.8	10.1	8.7	10.7	12.2	13.2	14.4
상속세	5.1	5.2	6.0	5.8	5.7	6.1	6.6
부동산취득세	12.5	9.6	12.3	14.5	15.1	16.2	17.3
주식취득세	3.6	3.5	3.4	3.3	3.4	3.6	3.7
담배세	9.7	9.0	9.6	9.4	9.3	9.1	9.1
주세	11.5	12.7	12.4	12.7	13.1	13.8	14.3
항공여객세	3.7	0.6	1.3	2.0	3.1	4.3	4.4
보험료세	6.5	6.3	6.5	6.7	6.8	6.9	7.1
기후변화세	2.1	1.7	2.1	2.2	2.3	2.3	2.4
은행세(Bank levy)	2.5	1.9	1.0	1.0	1.0	1.0	1.0
은행특별세(Bank surcharge)	1.5	1.2	1.2	1.3	1.3	1.4	1.4
견습세(Apprenticeship Levy)	2.8	2.9	2.9	3.0	3.1	3.2	3.4
청량음료산업세(설탕세)	0.3	0.3	0.3	0.3	0.3	0.3	0.3
디지털서비스세	0.0	0.3	0.4	0.5	0.6	0.7	0.7
기타 국세(HMRC taxes)	7.3	6.7	7.0	7.5	7.6	7.7	7.9
자동차소비세	6.8	6.9	7.0	7.1	7.2	7.3	7.5
면허료 수입	3.3	3.8	3.8	3.8	3.9	3.9	3.9
환경부담금	8.0	9.5	10.2	10.0	10.6	10.8	11.2
EU ETS 경매세	1.6	1.1	1.3	1.2	1.2	1.2	1.3
기타 조세	10.2	8.0	8.8	9.5	9.8	9.7	9.8
국민계정 조세수입	743.0	704.2	731.6	792.8	846.1	890.0	928.2
EU 분담금 공제	-3.2	-2.1	-	-	-	-	-
이자 및 배당	26.5	23.5	25.1	26.4	28.4	30.8	33.3
총운영수지	57.0	56.5	58.7	62.2	66.2	69.6	72.5
기타수입	4.8	4.1	3.9	4.0	4.0	3.7	3.9
총경상수입	828.2	786.3	819.3	885.4	944.7	994.2	1,037.8
(GDP 대비 %)	(37.2)	(37.5)	(36.2)	(37.3)	(38.4)	(39.0)	(39.1)
2020년 3월 전망 대비 변화분	-11.2	-86.6	-91.4	-63.8	-39.9	-28.0	-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3, Table 3.2; Table 3.4; Table 3.5.

2) 지출 전망

- (총관리지출⁷⁷⁾) GDP 대비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 비율은 FY2020-21에 54.4%로 전쟁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후, 코로나19 관련 지출 감소와 GDP 회복에 따라 급등세가 완화되어 FY2021-22에 46.5%, FY2022-23에 41.8%로 하락할 전망(그림 IV-5) 참고)
 - * FY2020-21~FY2025-26 기간 총관리지출의 연간 실질 증가율은 약 1.5%로 전망됨

[그림 IV-5] GDP 대비 총관리지출(TME) 비율 추이



주: 실선은 실적치, 점선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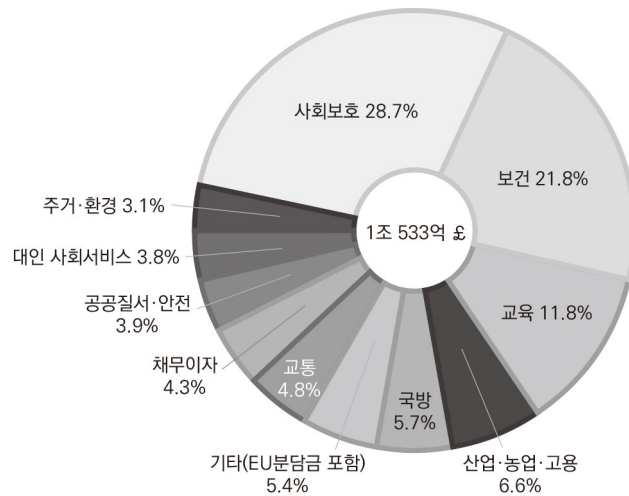
자료: HM Treasury, *Budget 2021*, 2021.3., Chart 1.10.

- FY2020-21의 총관리지출은 부처별 자원이출(특히 보건 관련) 및 복지지출의 대규모 증가와 바이러스 관련 지원 도입으로 전년 대비 약 2,560억파운드(29%)의 기록적 증가가 나타남
- FY2021-22의 총관리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약 876억파운드 감소한 1조 533억파운드(GDP의 46.5%)로 전망됨(〈표 IV-4〉 참고)
 - 이는 2020년 3월 전망치보다 759억파운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추가 부처별 지출(2020년 지출 검토 반영), 2021년 예산안의 고용유지 보조금 및 자영업자 소득지원 연장과 신규 회복대출 도입 등으로 인한 상승과 채무이자 감소 등 하향 요인을 반영

77)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 TME)은 공공부문 경상지출(Public Sector Current Expenditure: PSCE)과 공공부문 총투자(Public Sector Gross Investment: PSGI)로 구성

- FY2021-22 공공부문 경상지출은 전년보다 771억파운드 감소한 1조 116억파운드, 공공 부문 총투자는 106억파운드 감소한 1,294억 파운드를 기록할 전망
- FY2021-22의 기능별 총관리지출 규모는 사회보호(약 3,020억파운드, 28.7%), 보건(약 2,300억파운드, 21.8%), 교육(약 1,240억파운드, 11.8%)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6] 참고)
- 전년 예산안 대비 보건(19.2%→21.8%)과 산업·농업·고용(3.2%→6.6%)의 비중 상승

[그림 IV-6] FY2021-22 공공부문 기능별 지출(총관리지출 기준)



주: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HM Treasury, *Budget 2021*, 2021.3, Chart 1을 참고하여 작성

〈표 IV-4〉 예산안의 총관리지출(TME) 계획

(단위: 십억파운드, %)

구분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공공부문 경상지출	790.8	1,011.6	934.5	866.3	898.2	933.1	971.7
자원 AME(Resource AME)	410.0	459.9	430.0	420.6	434.2	449.9	468.1
자원 DEL(감가상각 제외) ¹⁾ (Resource DEL excluding depreciation)	345.2	503.3	453.0	393.4	409.6	426.7	445.0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제외한 자원 DEL(감가상각 제외)	343.0	362.7	385.0	393.4	409.6	426.7	445.0
코로나19 관련 자금	2.2	140.6	68.0	-	-	-	-
감가상각 (Ring-fenced depreciation)	35.6	48.5	51.5	52.3	54.4	56.4	58.6
공공부문 총투자	94.4	129.4	118.8	126.1	131.8	135.6	139.8
자본 AME(Capital AME)	24.0	29.2	18.4	18.8	22.7	22.7	22.5
자본 DEL(Capital DEL)	70.4	100.2	100.4	107.3	109.1	112.8	117.4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제외한 자본 DEL	70.4	91.6	99.8	107.3	109.1	112.8	117.4
코로나19 관련 자금	0.0	8.6	0.6	-	-	-	-
총관리지출 (GDP 대비 %)	885.2 (39.8)	1,140.9 (54.4)	1,053.3 (46.5)	992.3 (41.8)	1,030.1 (41.9)	1,068.7 (41.9)	1,111.5 (41.9)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제외한 총 DEL	413.4	454.3	484.8	500.7	518.8	539.6	562.3

주: 1) 감가상각(Ring-fenced depreciation)을 제외한 자원 DEL은 자원예산 내에서 재무부가 통제하는 대상이며, 자본 DEL은 자본예산 내에서 재무부가 통제하는 대상임

자료: HM Treasury, *Budget 2021*, 2021.3., Table 1.9에서 일부 발췌

나. 2021 예산안의 주요 정책 결정

□ 재무부는 2021년 예산안에서 ① 영국 국민의 일자리 및 생계 보호, ② 공공재정 강화, ③ 투자 주도의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둔 계획을 발표함

- 2021 예산안에서 제시된 FY2020-21과 FY2021-22에 대한 추가 지원의 규모는 약 650억 파운드 수준임
 - * 2020 예산에서 발표한 조치를 포함해 FY2020-21과 FY2021-22의 지원금액 합계는 4,070억 파운드로 추계
- (정책 결정의 재정적 영향) 2021 예산안의 주요 정책 결정이 재정공공부문 순차입(PSNB)에 미치는 영향은 FY2021-22에 588억 6,500만파운드로 추계됨

- 예산안의 주요 정책 결정 중 FY2026-26까지 공공부문 순차입(PSNB)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비용 및 수입은 <표 IV-5>와 같음
- FY2021-22에 주요 지출정책 결정은 347억 7천만파운드 지출 확대, 조세정책 결정은 240억 9,500만파운드 세입 감소효과가 예상됨

<표 IV-5> 2021 예산안 주요 정책의 재정적 영향

(단위: 백만파운드)

정책 내용	분류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일자리 및 생계 보호							
코로나 바이러스 고용유지보조금 연장 (2021.9.까지)	지출	0	-6,945	0	0	0	0
자영업자 소득지원 연장	지출	-55	-12,760	+1,650	0	0	0
Restart Grant 및 기타 추가 제한 조치 보조금	지출	0	-5,005	0	0	0	0
비주거용 재산세의 100% 감면(3개월) 및 한도 내 66% 감면(9개월)	조세	+135	-6,835	+135	-35	0	0
접객, 숙박 등에 대한 VAT 일부 감면 연장 (2021.9.30.까지 5%, 2022.3.31.까지 12.5%)	조세	0	-4,720	0	0	0	0
신규 납부제도를 통한 이연 VAT 분할 납부	조세	-80	0	0	0	0	0
부동산 거래 인지세 비과세 구간 유지 (2021.6.30.까지 £50만, 2022.3.31.까지 £25만)	조세	-255	-1,350	*	*	-5	0
연료세 동결(2021-22년)	조세	0	-795	-885	-910	-925	-945
주세 동결(2021-22년)	조세	-45	-315	-320	-325	-340	-350
청년(16~24세) 연수생 지원 확대	지출	0	-100	-50	0	0	0
통합급여의 표준수당 인상(£20) 6개월 연장	지출	0	-2,240	0	0	0	0
근로세액공제 수급자 보조금(£500)	지출	0	-765	-20	0	0	0
통합급여의 최소 소득기준 재도입 3개월 연기	지출	0	-25	-60	-5	0	0
통합급여 초과 소득기준(£2,500) 추가 1년 동결	지출	0	-110	0	0	0	0
통합급여/주택수당의 Shared Accommodation Rate 적용 면제(일부 대상) 조기 도입	지출	0	-10	-10	-5	0	0
법정병가수당 환급제도 연장	지출	0	-35	0	0	0	0
코로나19: 국세청 감면	조세	0	-105	-5	*	*	*

〈표 IV-5〉의 계속

(단위: 백만파운드)

정책 내용	분류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투자 주도의 경제 회복							
신규 장비 투자 시 130% 자본 공제	조세	-1,735	-12,255	-12,695	-2,395	+2,090	+2,780
결손금 소급공제 3년 연장(£200만 이내)	조세	-840	-205	+580	+325	+160	+80
중소기업에 신규 경영관리 프로그램 제공	지출	0	-60	-75	-85	0	0
중소기업에 생산성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	지출	0	-50	-115	-130	0	0
공공재정 강화							
법인세율 인상(2023.4.부터)	조세	-5	+20	+2,390	+11,900	+16,250	+17,200
2021-22년 수준으로 소득세 기본공제액 및 고세율 과세 기준 금액 유지(~2025-26년)	조세	0	*	+1,555	+3,655	+5,790	+8,180
VAT 등록 기준(£85,000) 유지(~2023-24년)	조세	0	0	+55	+125	+135	+165
상속세 비과세 한도 2020-21년 수준 유지(~2025-26년)	조세	0	+15	+70	+165	+290	+445
연금지출 평생공제액 현 수준 유지(~2025-26년)	조세	-10	+80	+150	+215	+255	+300
자본이득세 연간 면제금액(£12,300) 유지(~2025-26년)	조세	0	*	+5	+10	+20	+30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시스템							
북아일랜드 주택행정부 법인세 면제	조세	0	-20	-10	-10	-10	-10
EU 이자·로열티 지침 폐지	조세	0	+10	+10	+10	+5	0
Red Diesel ⁷⁸⁾ 사용 제한의 추가 예외	조세	0	0	-80	-85	-100	-110
대형 화물차 소비세 동결(2021-22년)	조세	0	-5	-5	-5	-5	-5
대형 화물차 도로 이용세 추가 12개월 유예(2021.8.부터) 및 세율 동결	조세	0	-140	-75	-5	-5	-5
탄소가격지원(CPS): 2022-23년 세율 동결	조세	0	0	-5	-10	-10	-5
골재세 동결(2021-22년)	조세	0	-10	-15	-15	-15	-15
채납·환급 이자 조정/조세 패널티 개혁	조세	0	0	+5	+90	+155	+155
VAT: 매출 관련 전자 기록 위조예 대응	조세	*	+5	+20	+20	+20	+20
OECD 의무보고 규정	조세	0	0	*	+5	+5	+5
국세청: 납세 순응을 위한 투자	조세	-55	-500	-460	+110	+750	+1,310
국세청: 디지털 인프라 투자	지출	0	-30	-25	-15	-5	*
노동연금부: 납세 순응을 위한 투자	지출	0	-10	+190	+235	+250	+250
금융 거래							
금융거래 및 보증 변화의 공공부문 순차입 영향	지출	-2,690	-945	+280	+365	+410	+435

78) 레드 디젤(red diesel)은 도로용 차량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를 지칭함

〈표 IV-5〉의 계속

(단위: 백만파운드)

정책 내용	분류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기존에 발표된 정책							
코로나 바이러스 고용유지보조금 연장(2021.4.까지)	지출	0	-2,665	0	0	0	0
R&D PAYE Cap: 업데이트	지출	0	*	-20	-80	-105	-115
비주거용 재산세: 공제제도 변화	조세	-160	-30	0	0	0	0
영국 배출권 거래제도	조세	0	+15	+50	+35	+15	0
VAT: Tour Operators Margin Scheme ⁷⁹⁾	조세	-5	-30	-45	-70	-100	-105
VAT: 중고차 마진 과세 폐지 취소	조세	*	-5	-5	-5	-5	-5
VAT: VAT(Treatment of Transactions) Order 1992 폐지	조세	0	+5	+15	+15	+15	+15
신고 납부제도: 패널티 완화	조세	-105	+100	*	*	*	0
코로나19: 자전거 통근 관련 조세감면 제도의 조건 완화	조세	-5	*	0	0	0	0
국제청: 조세채무 추적을 위한 추가 재원	조세	-55	*	0	0	0	0
사회보장 조정 관련 영국-EU 미래 관계 협정	지출	*	*	+5	+5	+5	+5
자본화 지침(capitalisation direction) ⁸⁰⁾ 을 통한 지역 당국에 대한 예외적 지원	지출	-60	-55	+30	+30	+30	+30
정책 결정 합계	-	-6,010	-58,865	-7,785	+13,105	+25,025	+29,735
지출정책 결정 합계	-	-2,765	-34,770	+215	+345	+720	+875
조세정책 결정 합계	-	-3,245	-24,095	-8,005	+12,760	+24,305	+28,860
[메모] 자원 DEL: OBR의 최근 디플레이터 (2.1%)를 반영한 실질 증가율 가정 유지	-	0	0	+3,975	+3,520	+3,875	+4,160

주: 1. 추계는 OBR의 최근 경제·재정 결정 요인을 반영

2. 조세와 지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영향의 상대적 크기를 기준으로 조세정책과 지출정책을 구분

3. 별표(*)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의미

4. 조세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세입이 감소함을 의미하며, 지출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

자료: HM Treasury, *Budget 2021*, 2021.3., Table 2.1. 재인용

1) 영국 국민의 일자리 및 생계 보호

□ 2021 예산안에서 코로나19 제한 조치 완화를 반영한 경제적 지원 연장방안을 제시함

- 일자리 보호와 생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우선순위임

79) 여행, 숙박 등을 매입 및 재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Tour Operators Margin Scheme를 활용하여 VAT를 계산함

80) 정부가 예외적으로 지방 당국이 수익 비용(revenue cost)을 자본 비용(capital cost)처럼 처리하는 것을 허용

□ 생계 지원

- (소득 지원) 코로나19 고용유지보조금 및 자영업자 소득지원 연장
 - 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보조금을 2021년 9월까지 5개월 추가 연장
 - 근로자는 코로나19로 근무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해 현재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음
 - 고용주는 4~6월 기간에 국가보험료 및 연금 부담금만 부담하고 경제가 재개되면 7월 10%, 8월과 9월에 각각 20%씩 임금지원금의 일부를 부담
 -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를 연장해 4차 및 5차 보조금을 지급
 - (4차 보조금, 2~4월) 소득 보조 비율 80%(3개월 최대 7,500파운드)를 적용하며, 2019-20년의 신규 자영업자(약 60만명)도 보조금 수급이 가능해짐
 - (5차 보조금, 5~9월) 매출(turnover)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3개월 평균 이익(trading profit)의 80%(최대 7,500파운드), 30% 미만 감소한 경우 30%(최대 2,850파운드)를 지원
- (복지) 통합 급여(Universal Credit) 표준 수당(Standard Allowance)의 한시적 인상(주당 20파운드) 적용을 6개월 연장하고,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청구자에게 6개월 추가 지원을 위한 일회성 보조금(500파운드)을 지급
 - 또한 자영업자 통합급여 수급자에 대한 한시적인 최소 소득기준⁸¹⁾ 적용 중단을 7월 말까지 추가 연장
- (주거) 2021년 4월에 신규 모기지 보증제도를 도입해 주택 취득을 지원하고, 부동산 거래 인지세(Stamp Duty Land Tax) 인하 조치를 연장해 주택시장 지원
 - 5%의 보증금으로 최대 60만파운드(주택 가격)의 모기지를 제공하도록 새로운 모기지 보증제도 도입(2022년 12월까지 한시적 조치)
 - 부동산 거래 인지세 비과세 구간의 한시적 확대 조치를 연장
 - 비과세 구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 50만파운드, 2021년 9월 30일까지 25만파운드로 확대 적용한 후 2021년 10월 1일부터 종전 12만 5천파운드로 축소

81) 자영업자의 수입이 최소 소득기준(Minimum Income Floor) 이상이면 실제 소득을, 미만이면 최소 소득기준을 바탕으로 통합급여액을 계산함. 최소 소득기준은 동일 연령대가 받는 최저임금에 근로 가능 시간을 곱하여 계산됨

- (일자리 지원) 일자리 지원 계획(Plan for Jobs⁸²)의 일환으로 연수생 및 견습생에 대한 지원 확대
 - (연수생(traineeship) 지원) 1억 2,600만파운드의 신규 자금을 통해 2021-22년에 16~24세 청년(추가 4만명)에게 양질의 현장 실습(work placement) 및 훈련을 지원
 - 또한 연수생에게 현장 실습(work experience)을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인당 1천 파운드의 자금 지원
 - (견습직(apprenticeship) 신규 고용 지원금 연장·인상)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견습생 신규 고용 시 고용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인상(1,500→3천파운드/인)
 - (신규 “flexi-job” 견습제도) 2021년 7월부터 700만파운드의 자금을 도입하여 서로 다른 고용주와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창작 산업 등) 시에도 견습제도를 통해 높은 수준의 장기 훈련을 제공
-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을 지원
 - (코로나19 백신보급) 잉글랜드의 백신 보급을 위해 2021-22년에 16억 5천만파운드의 자금 할당
 - (학습 부진 해결)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발표한 10억파운드 규모의 catch-up 패키지에 이어 7억파운드의 추가 자금을 마련
 - 초·중등학교에 대한 일회성 지원금(Recovery Premium), 개인 교습 프로그램 확대, 조기 언어교육 지원 등
 - 이 외에도 군인자선단체의 디지털 및 데이터 전략개발 지원, 재향군인 정신건강 지원, 가정 학대 해결 등을 위한 지원 계획 발표

82) 정부는 2020년 7월에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창출·보호 계획(A Plan for Jobs 2020)을 발표한 바 있음

□ 기업 및 산업 지원

- (신규 회복 대출(Recovery Loan Scheme)) 2021년 4월 6일부터 기존 정부 대출 보증제도⁸³⁾를 대체하는 신규 회복 대출제도 도입
 -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기관에 2만 5천~1천만파운드의 대출에 대한 80%의 정부 보증 제공
- (50억파운드의 신규 기업 보조금(Restart Grant))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사업을 안전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비필수 소매업에 최대 6천파운드, 접객, 숙박, 레저, 퍼스널 케어, 헬스장 등 사업장에 최대 1만 8천파운드의 보조금 지원
 - 또한 지역 당국이 재량적으로 관련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4억 2,500만 파운드의 추가 자금 지원
- (비주거용 재산세(business rates) 감면 연장) 소매, 접객, 레저 사업장 대한 비주거용 재산세 감면을 추가 연장하여 4~6월은 100% 감면, 7월~2022년 3월은 66%⁸⁴⁾ 감면을 적용
 - 잉글랜드 내 75만개의 소매, 접객, 레저 사업장이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조세 감면으로 인한 지역 당국의 세수 손실은 정부가 보전
- (VAT 감면 연장) 관광·접객 부문의 15만개 사업체와 240만개의 일자리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 동 부문에서 공급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VAT 세율 감면 조치를 추가로 연장
 - 해당 부문의 VAT 세율을 9월 말까지 5%, 이후 6개월 간 12.5%로 적용
 - * 일반 VAT 세율은 20%임
- 기타 산업 지원
 - 공항·지상 운영 지원 프로그램⁸⁵⁾ 6개월 추가 운영(최대 400만파운드)
 - 문화회복기금 지원 연장, 영화·TV 프로그램 제작지원 연장, 스포츠 회복 기금 등 예술·문화·스포츠 기관 지원에 7억파운드 자금 지원 등

83) 기존 정부 대출 보증제도는 2021년 3월 말 종료 예정이며 현재(예산안 발표일)까지 약 730억파운드의 대출을 지원함

84) 2021년 1월 5일까지 사업장 폐쇄가 필요한 기업은 최대 200만파운드, 기타 사업장은 최대 10만 5천파운드 한도

85) 여행 제한 조치기간 동안 공항 및 지상 운영 관련 고정 비용을 지원

- 이 외에도 신규 납부제도를 통한 이연 VAT 분할 납부, 중소기업의 법정병가수당 환급제도 연장,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 한시적 확대(1→3년, 최대 200만파운드) 등의 계획 발표
 - 또한 고용유지 지원금, 자영업자 소득지원 등 코로나19 지원 패키지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제청 직원으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TF)에 1억파운드를 투자

2) 공공재정 강화

- 영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서 회복되면 정부는 공공재정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채무 수준을 통제해야 함
 - 이는 정부가 우수한 공공 서비스에 계속 투자하고, 미래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회복력을 유지하며, 기업과 국민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는 데 중요함
- (소득세)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Income tax personal allowance)과 고세율 과세 기준 금액(higher rate threshold)을 FY2021-22 수준으로 2026년 4월까지 유지
 - 당초 계획⁸⁶⁾대로 FY2021-22의 소득세 기본공제액과 고세율 과세 기준 금액은 물가 상승률(CPI)에 맞춰 각각 1만 2,570파운드, 5만 270파운드로 인상하지만, 이후 기간부터 2026년 4월까지 이 수준을 유지
- 기타 개인 조세
 - (상속세) 상속세 비과세 한도를 2020-21년 수준(32만 5천파운드)으로 2026년 4월까지 유지
 -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 연간 면제 금액을 현재 수준(1만 2,300파운드, 개인 기준)으로 2026년 4월까지 유지
 - (국가보험기여금(NIC)) 국가보험기여금(NIC)의 소득 상한 기준을 2021-22년 수준(5만 270파운드)으로 2026년 4월까지 유지
 - (연금 및 저축 조세) 연금 저축 평생공제액을 2026년 4월까지 현 수준(107만 3,100파운드) 유지, 2021-22년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간 납입 한도 유지(2만파운드) 등

86) 2018 예산안에서 2021-22년부터 기본공제액과 고세율 과세 기준 금액을 CPI를 반영해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법인세) 세수 증대 수요와 조세 시스템의 국제 경쟁력 유지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법인세 기본 세율을 현행 19%에서 25%로 인상
 - 재무부 장관은 팬데믹 극복을 위해 기업에 약 1천억파운드 이상의 지원을 제공한바, 이들에게 회복에 기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공정하고 필요하다고 언급
 - 다만 정부는 인상된 세율이 여전히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을 2023년 4월 전까지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
 - 법인세 인상으로 은행특별세(Bank Surcharge)를 합산한 은행 과세가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어 은행특별세 세율(현행 8%)에 대한 검토도 추진
 - 수익 25만파운드 이상 기업에 법인세율을 25%로 적용하되 수익 5만파운드 이하 기업(영업기업의 약 70%)에는 '소기업 세율(Small Profits Rate)'을 신설해 19%의 세율을 적용
 - 또한 수익 5만~25만파운드 사이의 기업은 한계 공제(Marginal Relief)를 도입하여 실효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임
- (부가가치세) 기업에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VAT 등록 기준액(8만 5천파운드)을 2022년 4월부터 추가 2년간 유지
- (조세회피 대응) 체납 이자·과태료 제도 개선, 매출 관련 전자기록 위조 대응 등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신규 조치를 통해 FY2025-26까지 22억파운드 확보
 - 또한 국세청에 IT 시스템, 인력 보강 등 2021-22년에 추가 1억 8천만파운드를 투자하여 2025-26년까지 16억파운드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

3) 투자 주도의 경제 회복

- 정부는 투자 중심의 회복을 위한 여건 조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혁신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기업의 디지털 및 경영 능력을 제고하여 새로운 기회 제공

- 고성장 혁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이들 기업이 인재, 아이디어, 자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수출 기업의 효율적 경쟁을 위해 정부가 올해 말까지 수출 전략을 검토할 예정
- 예산안과 함께 새로운 성장 계획('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growth')*을 발표하여 역량, 인프라, 혁신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
 - * 성장계획의 주요 내용은 '4. 주요 재정정책'에서 요약함

□ 민간투자 제고를 위한 주요 조치

- (신규 투자 공제제도(super-deduction))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규 플랜트·장비 투자 시⁸⁷⁾ 첫 해에 130%의 자본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투자를 촉진
 - 특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자산⁸⁸⁾에 대해서는 50%의 공제혜택 적용
- (영국 인프라 은행(UK Infrastructure Bank)) 기후변화 및 지역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프라 은행이 민간 및 지방 당국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 인프라 은행은 120억파운드의 주식·채권 자본(equity and debt capital)을 운영하고 최대 100억파운드의 보증 발행
 -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민간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방 당국의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출 제공(국채금리+60bp)
 - 프로젝트 개발·시행 관련 자문 제공

□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 (녹색 국채(green gilt)) 탄소 배출 순제로 달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최소 150억파운드 녹색채권을 올해 여름부터 발행 예정
- (에너지 혁신) 에너지 혁신 관련 지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약속에 따라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기술 개발, biomass feedstock 프로그램 지원 등 탄소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발표

87) 기존 연간 감가공제율(writing down allowance)은 18%임

88) 기존 연간 감가공제율은 6%임

□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지원

- ‘Help to Grow: Digital’을 통해 10만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지원 (바우처, 무료 자문 등)
- ‘Help to Grow: Management’를 통해 3년간 3만개 중소기업에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제공 (12주간 90%의 보조금 지원)

□ 과학 및 기술 혁명 주도

- (코로나19 백신) 잉글랜드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의 코로나19 백신검사 역량 강화, 변종 바이러스 백신 개발·연구 지원
- (Future Fund: Breakthrough) 혁신·R&D 중심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정부-민간 공동투자 자금인 ‘Future Fund: Breakthrough’(3억 7,500만파운드 규모) 도입
- (인재 유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기존 비자제도 개선, 신규 비자제도 도입 등 이민 시스템을 현대화
- R&D 조세 감면 검토 추진

□ 지역 균형 발전

- (Levelling Up Fund) Levelling Up Fund에 대한 48억파운드 규모의 투자설명서를 발표 하였으며 타운 센터 및 변화가 재개발, 지역 교통 프로젝트, 문화·유산 자산 등 영국 전역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에 투자 예정
- (City and Growth Deals) 향후 5년간 지역 경제 우선순위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8,450만파운드의 자금 지원(스코틀랜드 3개, 웨일즈 3개)
- (Town Deal) 잉글랜드 내 45개 Town Deal을 위해 10억파운드 이상을 확정하였으며 지역 성장 전략 개발·이행,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지역 회복 등 지역의 타운 발전을 지원
- (자유무역항(freeport) 개설) 영국 전역에 자유무역항을 개설해 투자, 무역, 고용 제고
- 잉글랜드 내 8개소 개설(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해당 행정부와 논의 추진)

- 자유무역항의 특별 경제 구역에서 조세 감면, 간소화된 세관 혜택, 광범위한 정부 지원을 제공
- 이 외에도 지역의 인프라 개선 및 경제성장을 위한 각종 기금⁸⁹⁾ 지원과 지역 교통 프로젝트 투자 등 제시

4 주요 재정정책

가. 예산안의 중기 경제·재정 전략⁹⁰⁾

- 이번 예산안은 영국 전역에서의 투자 촉진과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조치를 포함하며 공공재정 강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 예산책임청이 올해 하반기 경제의 강한 반등을 전망함에 따라 예산안에서 제시된 정책 조치들은 중기적으로 경제 회복을 지원함
 - 예산안의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가 회복되면 차입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임
 - 또한 정부는 채무가 지속가능한 경로에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러한 정부의 접근방식은 저금리 상황의 기회와 리스크 간 균형을 유지하여, 공공재정을 지속가능한 경로에 두는 동시에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자본투자를 위한 차입에 저금리의 이점을 활용함
 - 정부는 자산과 부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는 등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대차대조표 강화할 것임

89) UK Community Renewal Fund, Community Ownership Fund 등

90) 이하 내용은 Budget 2021에 포함된 'Medium-term economic and fiscal strategy'(pp.23~30)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 성장을 위한 투자

- 투자는 정부 경제·재정 전략의 주요 부분 중 하나로,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투자가 모두 필요함
- (공공투자 증대) 정부가 미래 경제 구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함에 따라 영국 전역의 수준을 높이고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투자가 필요함
 - 정부는 2020 지출검토(Spending Review)에서 FY2021-22에 1천억파운드의 자본 투자를 발표하였고, 학교, 병원 등 특정 자본 프로그램에 대한 다년도 자금을 배정함
- (중장기 민간투자 지원) 정부는 공공투자 제고뿐만 아니라 중장기 민간부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음
 - 정부는 역량(skill), 인프라, 혁신 분야 대규모 투자를 위한 경제 계획을 발표하여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을 설정함
 - 예산안에는 이러한 비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됨
 - 중소기업의 디지털·경영관리 향상 지원, 영국 인프라 은행 운영, 혁신·R&D 중심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자금 등 혁신적 고성장 기업을 지원

□ 지속가능한 공공재정

- 높은 채무의 리스크를 고려할 때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고 이는 재정의 회복력을 구축해 정부가 가장 필요할 때 가계와 경제를 지원할 수 있게 함
 - 코로나19 영향과 정부 대응으로 인한 차입과 채무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고 부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현재 금리가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급격한 상승 리스크도 존재
 - 경제가 견고하게 회복되면 영국이 이러한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재정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
 - 미래의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력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함
- 정부는 중기적으로 공공재정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수한 공공서비스에 자금지원을 지속하는 공정한 방법은 최고 소득의 가계가 이에 더 많이 기여하고,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의 보답으로 기여하는 것임
 - 소득세 기본공제액과 고세율 과세 기준 금액을 유지하는 것은 세후 소득(take home pay)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사람이 없음을 의미
 - 2023년에 기업 이윤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할 예정
- 예산안은 미래의 조세 변화를 사전에 예고하여 개인과 기업에 확실성을 제공
- 재정정책은 점진적으로 조정되며 부양적(historically supportive) 기조를 유지
- 예산책임청의 전망에 의하면 예산안에서 제시된 재정 복원 조치로 인해 공공재정 중기 전망이 지속가능한 경로로 돌아올 것임
 - 전망기간 동안 공공부문 순투자는 GDP의 2.9% 수준(평균)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상예 산적지는 하락해 FY2025-26에 9억파운드를 기록할 전망
 - 공공부문 경기조정 순차입은 FY2025-26에 GDP의 2.7%로 하락
 - 기초 채무는 FY2023-24에 GDP의 97.1%에 도달한 후 남은 전망기간 동안 하락
 - 예산책임청은 기초 채무의 안정화가 전적으로 정부 정책 조치의 영향에서 기인한다고 평가

나. 성장을 위한 투자 계획 -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growth'

- (개요) 2021 예산안과 함께 정부는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growth*' 보고서를 발표하여 인프라, 역량, 혁신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새로운 성장 계획을 제시함
-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growth*'의 주요 내용⁹¹⁾
 - (경제적 배경) 경제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성장 계획은 영국의 강점을 구축하 고 약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91) HM Treasury,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growth*, 2021.3.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uild-back-better-our-plan-for-growth>,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 바람

-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위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함
 - 일자리는 중요한 경제적 우선순위로 정부는 ‘일자리 지원 계획(A Plan for Jobs)’을 통해 고용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의 적응력과 회복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기술 혁신, 새로운 무역 관계 등과 관련한 경제 변화로 향후 몇 개월간 이는 더욱 중요해질 것임
- 정부는 2017년 ‘산업 전략(Industrial Strategy)’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이후 많은 변화가 진행되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신규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상황임
- 경제성장은 고용과 생산성 증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영국은 고용을 다시 제고하고 생산성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영국은 다른 국가와의 생산성 격차, 지역 간 생산성 격차,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증가 속도 둔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중점 투자 분야(three core pillars of growth)) 정부의 이번 성장 계획은 인프라, 역량, 혁신, 세 가지 투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 ① 인프라(Infrastructure)
 - 통신, 도로, 철도, 도시에 기록적인 투자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을 부양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성 개선을 추진
 - Levelling Up Fund,⁹²⁾ Shared Prosperity Fund,⁹³⁾ Towns Fund,⁹⁴⁾ High Street Fund⁹⁵⁾를 통해 영국 전역의 인프라 투자를 제고

92) 타운 센터, 변화가 재생, 지역 교통 프로젝트, 문화 유산 등의 인프라에 투자

93) EU 탈퇴 이후 EU의 구조기금을 통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Shared Prosperity Fund를 마련할 예정

94) 영국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 재생, 역량 및 중소기업 지원 공간 확보, 지역 교통 및 네트워크 개선 등 타운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임

95) 변화가(High Streets)의 재개발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 ‘10대 녹색 산업 혁명 계획’⁹⁶⁾하에 120억파운드의 자금투자를 통해 탄소 배출 순 제로 달성을 지원
 - 신규 인프라 은행(UK Infrastructure Bank)을 통한 투자지원으로 민간투자를 진작시켜 탄소 순배출 제로로의 전환과 영국의 균형 발전 지원을 촉진
- ② 역량(Skills)
- 직업교육(Further Education) 개선에 추가 투자, 기업 수요를 반영한 16세 이상 기술 교육 시스템 개혁 등 양질의 훈련을 통한 생산성 제고 지원
 - ‘Lifetime Skills Guarantee’를 도입해 무료로 Level 3 코스를 이수할 수 있도록 평생 교육 지원, 고용주 주도 역량 훈련 제공, ‘Lifelong Loan Entitlement’⁹⁷⁾ 도입
 - 견습제도의 질적 향상, 고용주를 위한 견습제 시스템 개선 등
- ③ 혁신(Innovation)
- 향후 고성장, 지속가능, 안전한 영국 경제를 이룰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을 지원·장려
 - 고성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연금기금 개선,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지원 지속 (British Patient Capital⁹⁸⁾ 프로그램 등), 신규 ‘Future Fund: Breakthrough’⁹⁹⁾ 등 혁신 촉진을 위한 자금 조달 지원
 -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 시스템 개발
 -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 제고 및 고성장·혁신 영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신규 제도(Help to Grow: Management,¹⁰⁰⁾ Help to Grow: Digital¹⁰¹⁾)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 지원

96) 정부는 2020년 11월, 녹색산업 혁명을 위해 해상 풍력, 수소, 원자력, 전기차, 대중교통·자전거·도보, 무공해 항공기 및 선박, 주택 및 공공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 탄소 포집, 자연 환경 보호·복원, 혁신 및 녹색 금융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을 발표함

97)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편해 2025년부터 고등 기술 과정에 대해 대학 학위과정 대출과 동등한 대출을 제공

98)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 성장과 글로벌화에 필요한 장기 투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99) 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성장 혁신 기업에 민간 투자자들이 정부와 공동투자를 하도록 장려

100) 영국 전역의 중소기업에 경영대학원의 커리큘럼과 사례 연구, 멘토링 등 경영관리 프로그램 제공

101) 중소기업이 생산성 제고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시간·비용을 절감하도록 소프트웨어 비용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료 자문도 제공

- 정부는 국민의 우선순위(영국 전역의 균형 발전, ‘Net Zero’ 사회로 전환, ‘Global Britain’ 비전 지원)를 달성하도록 성장을 추진할 예정
 - ① 영국 전역의 균형 발전(Level up the whole of the UK)
 - 지역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재생 지원
 - 모든 지역(region and nation)에 하나 이상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만든다는 장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City and Growth Deals,¹⁰²⁾ 시내·도시 교통 인프라 투자 지속
 - 디지털·교통 연결성 제고, 잉글랜드 북부에 인프라 은행 설립, 공무원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영국 전역에서 일자리와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전국에 자유무역항을 개설하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간 해상, 항공, 지상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를 추진하는 등 연합(Union)을 강화
 - ② 탄소 순배출 제로 사회로의 전환(Support the transition to Net Zero)
 - Net Zero 분야에 투자하여 경제성장 및 일자리 기회 창출(해상 풍력부문 6만개, 탄소 포집·사용·저장 분야 5만개, 산업 클러스터 내 수소 분야 8천개 등 일자리 지원)
 - 현재의 Net Zero 산업을 성장시키고 신규 Net Zero 산업을 장려(업계와 협력, 저탄소 수소 생산 용량 5GW 목표, 탄소 포집·저장을 활용해 2030년까지 연간 10Mt의 탄소 포집, 2030년에 신규 가솔린·디젤 자동차 판매 종료)
 - ③ ‘Global Britain’ 비전 지원(Support our vision for Global Britain)
 - G7, COP26 등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우선순위 문제의 국제적 이행 제고
 - 자유·공정 무역 관련 롤모델 확대(다자간 시스템 및 WTO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특혜 협정과 양자 무역 협정을 활용해 영국 기업의 교역 기회 확대)
 - 성장 계획 및 분야별 우선순위와 수출기업 지원을 연계한 신규 수출 전략 개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무역 허브 개설, 영국 수출금융청(UK Export Finance)의 대출 여력 확대 등

102) 지역 분권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 도시와 계약을 체결함. 고용, 기업 지원, 주택, 교통, 투자 등에 대해 각 도시에 유연성과 권한을 부여

다. 재정준칙¹⁰³⁾

1) 현행 재정준칙과 개정 추진 경과

□ 현행 재정준칙(법제화된 재정준칙)

- 현재 유효한 재정준칙은 ‘예산책임헌장-2016년 가을 업데이트¹⁰⁴⁾’를 바탕으로 함
 - (Fiscal Policy Objective) 다음 의회 회기에 최대한 빨리 공공재정 균형을 달성
 - (Fiscal Mandate) GDP 대비 공공부문 경기 조정 순차입을 FY2020-21까지 2% 미만으로 감축
 - (Supplementary Target)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이 FY2020-21에 하락
 - (Welfare Cap) FY2021-22의 복지지출이 재무부가 2016 Autumn Statement에서 사전에 정한 한도와 마진을 하회(예산책임헌장 2016 업데이트 기준)
 - * 재무부는 새 의회 회기의 첫 재정 행사(또는 이전)에 복지지출 한도 수준과 경로, 적용 연도를 설정하며, 최근에는 2020 예산안에서 신규 복지지출 한도를 설정함
- 현행 재정준칙(Fiscal Mandate과 Supplementary Target)은 2021년 3월 말에 만료되지만 정부는 아직 이를 대체할 재정 목표를 결정하지 않음¹⁰⁵⁾

□ 재정준칙 개정 계획

- (최근 경과) 정부는 2020 예산안에서 신규 재정준칙(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추가 검토 후 2020년 가을에 새로운 예산책임헌장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2020 예산안의 재정준칙(안)은 새로운 경상예산 기준, 공공부문 순투자 기준, 세입 대비 채무이자 비율 기준¹⁰⁶⁾을 포함

103)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3., pp.173~179.

HM Treasury, *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autumn 2016 update*, 2017.1.

HM Treasury, *Budget 2021*, 2021.3.

104) 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autumn 2016 update

105)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3., p.176.

106) 경상예산은 5년 전망기간 중 세 번째 연도까지 적어도 균형을 달성

공공부문 순투자의 5년 전망기간 평균이 GDP 대비 3%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

세입 대비 채무이자 비율이 6%를 계속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정부는 GDP 대비 채무비율을 감축하도록

조치 마련

- (2021 예산안의 계획) 정부는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며 향후에 불확실성이 더욱 완화되면 연말쯤 신규 재정준칙을 제시할 예정임을 밝힘
- 2021 예산안에서 ‘현재의 불확실성 수준은 새로운 중기 재정준칙을 설정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님을 의미하며 많은 국가들이 재정준칙을 유예하고 있다’고 설명함

2) 정부 재정 목표(fiscal target)에 대한 성과 분석¹⁰⁷⁾

□ (현행 재정준칙 기준) 예산책임청은 현재 유효한 재정준칙의 모든 기준들이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표 IV-6〉 참고)

* 예산책임청은 현 정책하에서 정부가 재정준칙을 달성할 가능성이 50%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음

- FY2020-21의 GDP 대비 경기조정 순차입 비율이 16.5%로 2% 기준을 상회하며 공공부문 순채무도 GDP 대비 15.8% 늘어날 전망
- FY2025-26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은 2021년 3월 전망 기준으로 2.8% 적자가 예상되나 예산안에서 발표된 조세 증가의 영향으로 목표와의 마진(차이)은 2020년 11월 전망(3.9%)보다 감소

〈표 IV-6〉 예산책임청의 재정준칙 달성 여부 평가(2021년 3월 전망 기준)

(단위: GDP 대비 %, 십억파운드)

구분	예산책임청의 분석 기준	전망	미진	달성 여부
Fiscal Policy Objective	FY2025-26 ¹⁾ 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	2.8	-2.8	×
Fiscal Mandate	FY2020-21의 GDP 대비 공공부문 경기조정 순차입 비율(%)	16.5	-14.5	×
Supplementary Target	FY2020-21의 전년 대비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 변화(%)	15.8	-15.8	×
Welfare Cap	FY2024-25의 복지지출 금액(십억파운드)	127.9	-3.1	×

주: 1) 예산책임청은 예산책임현장의 ‘다음 의회 회기’를 FY2025-26으로 해석하여 분석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3.; Table 4.1에서 일부 발췌

107)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3., pp.173~179

- (2021 및 2020 예산안에 제시된 재정 총량 목표 분석) 예산책임청은 경상예산적자, 기초 순채무, 채무이자, 공공부문 순투자의 지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기준선 전망과 비교해 2021 예산안이 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판별함
- (분석 대상) 네 가지 재정 총량 지표
 - 아직 공식적인 재정 목표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예산책임청은 재무부 장관이 중기에 경상예산을 거의 균형으로, 공공부문 기초(underlying) 순채무를 안정화하도록 예산안 결정을 조정(calibrate)했다고 언급¹⁰⁸⁾
 - 이 외에도 2020 예산안의 재정준칙(안)은 GDP 대비 공공부문 순투자의 한도(3%)와 세입 대비 채무이자 비율 한도(6%)를 포함하고 있음
 - (분석 결과) 2021 예산안에서 발표된 중기의 조세 인상과 지출 계획 감축은 FY2025-26에 경상예산적자를 줄이고 공공부문 기초 순채무가 전년 대비 하락하도록 하는 데 충분함 (<표 IV-7> 참고)
 - (경상예산적자) 예산안의 정책 조치가 없다면 GDP 대비 경상예산적자 비율은 1.4%로 예상되나, 예산안의 중기 조세 인상과 지출 감축으로 경상예산적자는 이에 비해 362억과운드 감소한 9억과운드(GDP의 0.03%)로 전망됨
 - (기초 순채무) GDP 대비 기초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비율은 FY2023-24까지 계속 상승하고 이후 FY2024-25와 FY2025-26에 소폭 감소
 - (채무이자) 세입 대비 채무이자 비율은 전망기간 동안 6% 기준보다 낮게 유지
 - (공공부문 순투자) 이번 예산안에서 중기 자본지출 계획을 변경하지 않아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순투자는 GDP의 3% 아래로 유지

108) 2020 예산안의 재정준칙(안)과 비교해 경상예산적자 기준의 경우 지표는 유지되지만 전망기간 중 세 번째 연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와는 차이가 있고, 채무 기준은 headline 순채무(중앙은행의 영향 포함)에서 기초 순채무(중앙은행의 불규칙한 영향 제외)로 초점이 이동

〈표 IV-7〉 주요 목표 재정 지표

(단위: GDP 대비 %, %)

구분		실적	전망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경상예산적자	2021.3. 기준선 전망	0,6	13,1	5,3	1,7	1,4	1,4	1,4
	2021.3. 전망	0,6	13,3	7,6	1,7	0,6	0,1	0,0*
기초 순채무 변화	2021.3. 기준선 전망	4,2	12,7	2,9	2,2	1,7	1,2	1,2
	2021.3. 전망	4,2	12,7	5,1	2,2	1,1	-0,0	-0,2
세입 대비 채무이자 비율	2021.3. 기준선 전망	3,5	2,6	2,4	2,2	2,4	2,5	2,6
	2021.3. 전망	3,5	2,6	2,5	2,3	2,4	2,5	2,5
공공부문 순투자	2021.3. 기준선 전망	1,9	3,5	2,7	2,8	2,9	2,8	2,8
	2021.3. 전망	1,9	3,6	2,7	2,8	2,9	2,8	2,7

주: 1. 기준선 전망은 예산안 조치를 반영하기 전의 기준임

2. 기초 순채무 변화는 공공부문 기초 순채무(중앙은행 영향 제외)의 전년 대비 변화를 의미

3. 별표(*)의 경상예산적자 규모는 9억파운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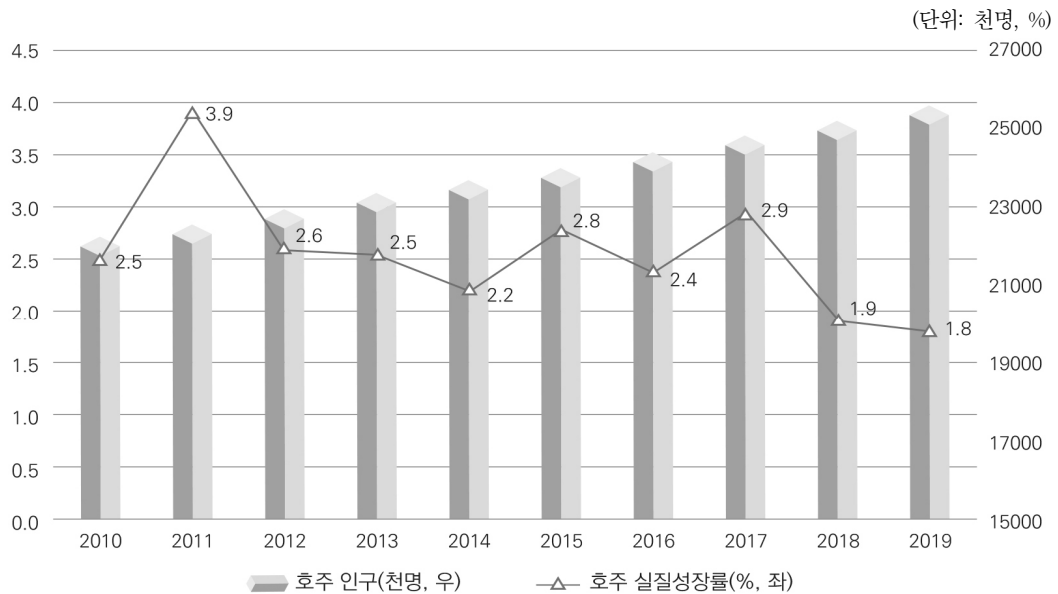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1*, 2021.3, Table 4.3에서 일부 발췌

V. 호 주

□ FY2020-21: 2020년 7월 ~ 2021년 6월

□ 출처

- Budget Paper No.1 ~ No.2 2020-21, The Treasury, 2020.10.6.
- Budget Overview, The Treasury, 2019.10.5.
- 환율: 1호주달러 = 약 822.26원(2018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8년 경상GDP 1조 3,421억 달러(우리나라 0.62배 수준)
2019년 경상GDP 1조 3,891억 달러(추정치)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2018년 기준 45.7%(우리나라 2018년 기준 78.7%)
- 인구: 2,499만명(2018년), 2,537만명(2019년 추정치)
- 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20.10.12.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2020-21년 코로나19의 대유행과 대규모의 산불 사태로 인해 1.5%의 GDP 감소가 전망되나, 규제 완화와 경제활동의 회복, 그리고 노동시장 개선으로 2021-22년 4%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재정 전망) 1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에서 재정 균형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 가계와 기업에 대한 큰 규모의 재정적 지원 추진

- (예산기조)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대응(Response)하고 회복(Recovery)하기 위해
① 세금 감면, ② 교통 인프라 창출, ③ 직업훈련 지원, ④ 코로나19에 대한 의약 지원책을 통한 경제 회복 및 성장을 추진

□ 예산안 내용

- (수입) 2020-21년 일반정부 현금주의 세입(tax receipts)은 전년 대비 1.7% 감소한 4,246억호주달러, 총수취(total receipts)는 1.2% 감소한 4,638억호주달러로 전망
- (지출) 2020-21년 일반정부 발생주의 지출(expenses)은 전년 대비 15.3% 증가한 6,703억 3천만호주달러(GDP 대비 34.4%)로 편성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디지털 경제, 여성 경제 안정 제공 및 취업 준비생 전문화 교육 등을 통한 위기 극복 및 민간 주도 성장 지원
- (복지) 보육지원,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위한 1차 진료시스템 강화, 노인복지 강화를 통한 사회 및 경제 회복
- (재정건전화) 코로나19 추가 감염 사태, 보건 및 경제 대응책을 위해 의료보험, 복지지출 인프라, 고등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재정지출의 유연성 추구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호주는 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파괴적인 대규모 산불로 인해 1.5%의 GDP 감소가 전망되나 규제 완화와 경제활동의 회복, 그리고 노동시장 개선으로 2021-22년 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경제) 2020년 상반기 주요 경제지표는 큰 규모로 하락했지만 2/4분기 후반 경제활동 개선이 이루어졌음
 - 봉쇄 조치 완화와 정책지원으로 2021년 실질 국내총생산이 4% 성장하고, 실업률은 2020년 4/4분기 8%를 정점으로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함
 - 1946년 이후 순 해외인구 유입이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상당히 느린 인구 증가는 경제 회복에 부담이 될 것임(2020-21년 0.2%, 2021-22년 0.4%)
 - (고용)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시장 악화는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 등 활동 규제가 완화된 이후 회복세를 보임
 - 총근로시간은 3~5월 사이 10.4% 감소했고 이후 절반 정도 회복함
 -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극심한 고통을 겪은 여성층과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키기 수단(Jobkeeper payment) 등 정책을 시행
 - 여성의 경우 이러한 정책을 통해 5~8월 27만명이 복직했으나, 청년층의 고용 수준은 3월보다 5~8월 기간에 7.8% 낮은 수준임
 - 실업률은 2020년 4/4분기 최고치인 8%에 이를 것으로 보이나, 경제활동 회복에 맞춰 2022년 2/4분기 6%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물가) 수요 약화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가계지원 정책으로 인해 물가는 큰 하락을 보임
 - 가전용품과 청소용품 등 가정 필수품의 높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 약화와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부의 무상 보육 서비스 지원으로 인한 보육 서비스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물가는 2020년 2/4분기 1.9%의 하락세를 보임

- 하지만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보육 지원정책 종료와 관리가격 상승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2021년 2/4분기 1.75%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세계적 유가 하락과 운송수요의 감소에 기인해 연료가격은 급격한 하락을 보임
 - (리스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대내외 경제 위축으로 불확실성 정도가 평소보다 높은 수준임
 -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으로 2020년 상반기 대내외적 경제활동과 고용이 큰 규모로 하락함
 - 호주에서는 보건 및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예방적 행동(precautionary behaviour)*을 증가시켰고, 여행 제한과 봉쇄 조치 등이 경제행위 및 이동성을 제약하여 2020년 2/4분기 실질GDP는 7% 감소함
- * 예방적 행동(precautionary behaviour)은 위험 상황이 닥쳐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위로, 호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고용을 축소하거나 지출을 줄이는 예방적 행동이 증가해 2020년 상반기 실질GDP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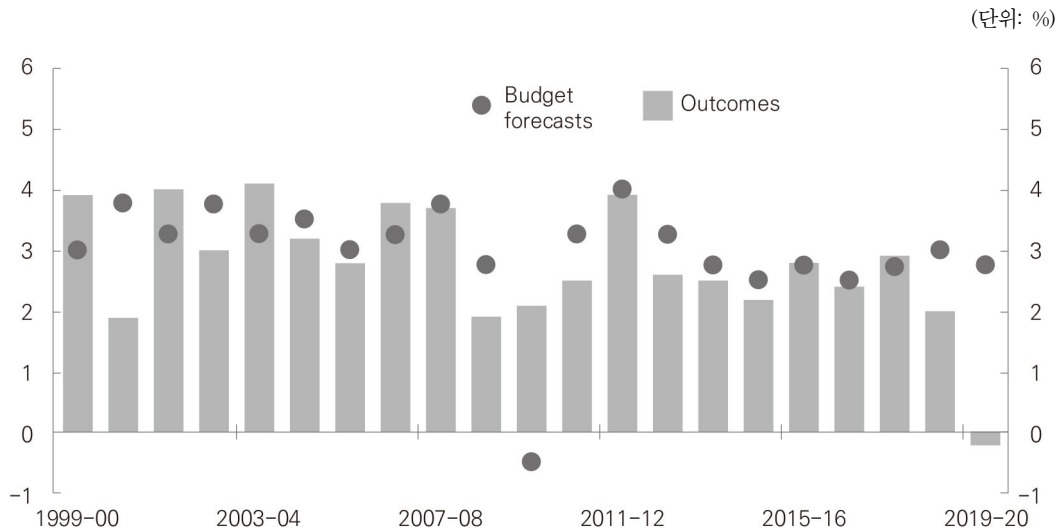
〈표 V-1〉 주요 경제변수 전망

(단위: %)

구분	실적	전망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실질GDP 성장률	-0.2	-1.5	4.75	2.75	3
고용 성장률	-4.3	2.75	1.75	1	1.75
실업률	7.0	7.25	6.5	6	5.5
소비자물가지수	-0.3	1.75	1.5	1.75	2
임금물가지수	1.8	1.25	1.5	2	2.25
명목GDP 성장률	1.7	-1.75	3.25	4.5	5

주: 실질GDP 성장률은 연평균 증가율, 고용 성장률·소비자물가지수·임금물가지수는 2사분기(June Quarter) 기준 연간 증가율, 실업률은 2사분기(June Quarter) 기준
 자료: 호주 연방정부, Budget Paper No.1 2020-21, 2020.10.6.

[그림 V-1] 예산안 예측치 및 실질GDP 성장률



주: Budget forecasts는 당해 연도 예산안에 제시된 GDP 성장률 예측치, Outcome은 2020년 2사분기(June Quarter) 국가 회계 기준

자료: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0-21, Paper No.1, 2019.4.2., statement 8-chart 1. 8-5.

나. 재정 전망

- 1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에서 재정 균형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 가계와 기업에 대한 큰 규모의 재정적 지원 추진
- (재정수입) 코로나19의 지원책으로서 세금 감면을 시행해 2020-21년 재정수입(revenue)은 4,724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4,863억호주달러) 감소했으며, 2021-22년까지 감소세를 유지한 후, 2023-24년에 5,381억호주달러 수준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할 전망
 -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2020-21년 재정수입은 GDP 대비 24.3%로 전년 대비(24.5%) 0.2%p 감소했고 2023-24년까지 24.4%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재정지출) 2020-21년 재정지출(expenses)은 6,703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5,785억호주달러) 크게 상승했으며, 이후 감소해 2023-24년에 5,966억호주달러 수준으로 GDP 대비 지출이 감소할 전망
 -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2020-21년 재정지출은 GDP 대비 34.4%로 전년 대비(29.2%) 5.2%p 증가했고, 2023-24년까지 27.1%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

- (재정수지) 2020-21년에 2,224억호주달러(현금주의), 2,057억호주달러(발생주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며 2023-24년까지 693억호주달러(발생주의)까지 적자 폭을 줄일 전망
 -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2020-21년 GDP의 10.6% 수준의 적자가 예상되고 2023-24년까지 GDP의 3.1% 수준으로 적자를 줄일 전망
- (채무) 코로나19 대응책에 기인해 순채무¹⁰⁹⁾는 2020-21년 7,032억호주달러로 추정되고 2023-24년까지 9,662억호주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2020-21년 순채무는 GDP 대비 36.1%로 추정되고 2023-24년까지 43.8%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총채무¹¹⁰⁾도 2020-21년 44.8%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23-24년 51.6%에 도달할 전망

〈표 V-2〉 예산 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구분	실적	추정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수취(Receipts) ¹⁾	469.4	463.8	451.9	482.6	526.4
GDP 대비 비율	23.7	23.8	22.5	23.0	23.9
지급(Payments) ¹⁾	549.6	677.4	563.9	570.5	593.3
GDP 대비 비율	27.7	34.8	28.0	27.2	26.9
순미래기금수익(Net Future Fund earnings)	5.0	na	na	na	na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²⁾	-85.3	-213.7	-112.0	-87.9	-66.9
GDP 대비 비율	-4.3	-11.0	-5.6	-4.2	-3.0
재정수입(Revenue) ³⁾	486.3	472.4	464.1	491.4	538.1
GDP 대비 비율	24.5	24.3	23.1	23.4	24.4
재정지출(Expenses) ³⁾	578.5	670.3	567.5	574.9	596.6
GDP 대비 비율	29.2	34.4	28.2	27.4	27.1
순영업수지(Net operating balance)	-92.3	-197.9	-103.4	-83.5	-58.5
GDP 대비 비율	-4.7	-10.2	-5.1	-4.0	-2.7
순자본투자(Net capital investment)	4.0	7.8	9.9	11.0	10.8
재정수지(Fiscal balance) ⁴⁾	-96.3	-205.7	-113.3	-94.5	-69.3
GDP 대비 비율	-4.9	-10.6	-5.6	-4.5	-3.1

주: 1) 현금주의 기준

2) 현금주의 기준. 예산수지=수취-지급, 2019-20년은 미래기금(Future Fund) 순예산수익 추가 차감

3) 발생주의 기준

4) 발생주의 기준.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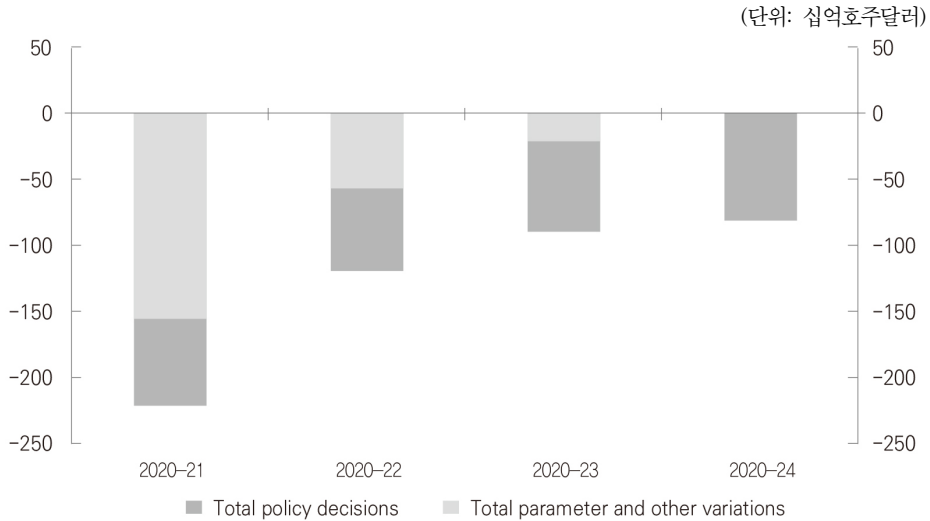
자료: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0-21, Overview, 2020.10.6.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0-21, Paper No.1, 2020.10.6., statement 3-table 2.

109) 부채(예금, 정부채권(시장가), 대출 및 기타 차입금)에서 자산(현금 및 예금, 선급금, 투자, 대출 및 출자 금액)을 차감

110) 정부채권(액면가)

[그림 V-2] 정책 요인과 기타 변수에 따른 예산수지 추정량



주: Total policy decisions는 정부 정책 요인이 예산수지에 미치는 영향, Total parameter and other variations는 정부 정책 요인 외의 요인이 예산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함
 자료: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0-21, Paper No.1, 2019,10,6., statement 3-chart 1.

- (재정 전략)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및 재정 전망의 변화로 개정된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정의 유지를 목표로 함
- 2019-20년 MYEFO에 제시된 재정 전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서 재정 흑자가 증가할 것으로 상정한 전략이었음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추가적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개정된 전략은 코로나19 경제 회복 계획과 중기 재정 전략의 두 단계로 운영되며, 민간 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코로나19 경제 회복 계획은 실업률을 빠르게 낮추는 것을 목표로 실업률이 6% 이하가 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임
 - 중기 재정 전략은 GDP 대비 총부채와 순부채 비중의 안정화와 강력한 경제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함

2 예산기조

- (예산기조)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대응(Response)하고 회복(Recovery)하기 위해 세금 감면, 고용 창출 등을 통한 경제 회복 및 성장을 목표로 함
 - (세금 감면) 경제 회복을 위해 2020-21년 저·중소득층 소득세 감면에 더해 내년 125억호주달러의 감면을 포함한 추가적인 178억호주달러의 개인소득세 감면을 예정임

〈표 V-3〉 저·중소득층 세금 감면

(단위: 호주달러, %)

구분	2017-18		2020-21	
	납세액	납세액	변화분	변화율
과세소득				
40,000	4,947	3,887	-1,060	-21.4
60,000	12,147	9,987	-2,160	-14.8
80,000	19,147	16,987	-2,160	-11.3
100,000	26,632	24,187	-2,445	-9.2
120,000	34,432	31,687	-2,745	-8.0
140,000	42,232	39,667	-2,565	-6.1
160,000	50,032	47,467	-2,565	-5.1
180,000	57,832	55,267	-2,565	-4.4
200,000	67,232	64,667	-2,565	-3.8

자료: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0-21, Overview, 2020.10.6.

- 추가적 세금 감면을 통해 2017-18년에 비해 2020-21년에 1,160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이고 이를 통해 GDP는 2020-21년 35억호주달러, 2021-22년 90억호주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경기부양 효과를 통해 5만개의 일자리를 2021-22년까지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조세조약망(Tax treaty network)을 현대화해 이중과세 철폐, 국가 간 과세권 정착, 외국인 투자 및 숙련 근로자 유치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함

- 재배치된 피고용자에 대한 재교육 활동 관련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를 면제해 노동자들의 재교육 및 재배치를 도움
 - *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제공한 임금 외의 혜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와 구분됨(자료: 호주 조세국)
- 2만여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공제, 소득세율 완화, 자본 이득세 완화 등 최대 10종류의 사업세를 감면(Small business tax concessions)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비즈니스 활성화를 도모
- (인프라 투자) 교통 인프라 건설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향후 4년간 140억호주달러를 인프라 프로젝트에 신규 및 추가 투자하고 4만개의 일자리를 추가 지원할 예정
 - 향후 10년 동안 교통 인프라 투자를 1천억호주달러에서 1,100억호주달러로 확대 투입 예정
 - 착공 준비 단계의 프로젝트(Shovel-ready project)에 대해 2020년 5월에 발표된 20억호주달러에 30억호주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지방 도로 및 지역사회 인프라 프로그램에 대해 5억호주달러와 1만개의 일자리를 향후 2년간 지원할 예정
- (직업교육·훈련) 40억호주달러의 일자리 창출 고용 공제(JobMaker Hiring Credit)를 제공
 - 기업에 45만여명(16세에서 35세)에 대한 직원고용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음
 - 견습생 임금보조금 부양책(Boosting Apprenticeships Wage Subsidy)을 통해 최대 10만명의 견습생과 교육생을 지원하기 위해 12억호주달러를 추가로 투자
-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 보건 분야에 2020-21년 938억호주달러까지 확대 지원하고, 교육 분야 내 학교 지출에 2020년 218억호주달러 투입하고, 2030년까지 10년간 총 3,100억호주달러를 투입할 예정
- (코로나19 대응방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백신과 노약자 보호 지원책을 제공
 - 코로나19 관련 호주 연방정부는 의료 분야에 49억호주달러를 투자해 호주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11억호주달러를 병원에 지원하고 있음

- 호주인들이 전 세계 백신 후보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제 COVAX 퍼실리티 (COVAX Facility)¹¹¹⁾ 가입에 1억 2,300만호주달러를 투자함
- 원격진료에 1억 1,200만호주달러를 지원하고 노인요양에 16억호주달러를 지원해 코로나19 팬데믹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 도모

〈표 V-4〉 주요 지출 계획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호주달러)

주요 지출 계획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총계
구직자 지급 연장 (JobKeeper Payment extension)	-15,600	-	-	-	-15,600
인프라 투자-주 및 지역 (Infrastructure Investment-states and territories)	-653	-1,834	-2,349	-1,908	-6,744
일자리 창출 고용 공제 (JobMaker Hiring Credit)	-850	-2,900	-250	-	-4,000
추가 경제 지원금 (Further economic support payments)	-2,512	-43	-3	-	-2,558
연소자 및 고령자 돌봄 (Ageing and Aged Care)	-716	-390	-438	-485	-2,029
인프라 투자-도로 안전 및 개량 (Infrastructure Investment-road safety and Upgrades)	-1,003	-1,001	-1	-1	-2,008
코로나19 백신과 소모품 접근성 (Access to COVID-19 vaccines and consumables)	-1,165	-704	-	-	-1,870
제조업 현대화 (Modern Manufacturing Strategy)	-79	-454	-587	-389	-1,510
견습생 임금보조금 인상 (Boosting Apprenticeships wage subsidy)	-409	-822	9	7	-1,214
병원지원-지속 사업 (Supporting our hospitals-continuation)	-1,103	-	-	-	-1,103
연구 패키지 (Research Package)	-1,040	-38	89	-78	-1,067
의료보험 및 의약품 접근성 보장 (Guaranteeing Medicare and access to medicines-extension)	-1,040	-1,040
국가 수도 격자망 구축-물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 접근 (National Water grid-investing in a long-term approach to water infrastructure)	-21	-202	-326	-481	-1,031
지방 도로 및 지역 사회 기반 시설 프로그램-지속 사업 (Local Roads and Community Infrastructure Program-extension)	-500	-500	-	-	-1,000
고용 서비스 (Employment Services)	276	240	253	158	927

자료: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0-21, Overview, The Treasury, 2020.10.6.

111) COVAX 퍼실리티(COVAX Facility)는 2021년 말까지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 목표로 세계보건기구, 감염병혁신연합, 세계백신면역연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외교부 보도자료, 「코백스 퍼실리티 (COVAX Facility) 우호그룹 성명 공동발표」, 2020.9.21.,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0473, 검색일자 2020.12.18.)

〈표 V-5〉 주요 수입 계획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호주달러)

주요 수입 계획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총계
투자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임시 총액 지출 (Temporary full expensing to support investment and jobs)	-1,500	-11,400	-18,100	4300	-26,700
개인소득세 개선 및 저·중소득층 소득세 상계제 유지 (Bringing forward the Personal Income Tax Plan and retaining the low and middle income tax offset)	-6,940	-16,870	5,730	250	-17,830
현금 흐름 지원을 위한 일시적 손실 이월 (Temporary loss carry-back to support cash flow)	-2	-3,121	-2,271	540	-4,854
연구 개발세 인센티브-호주 경제 회복 지원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Incentive-supporting Australia's economic recovery)	-310	-450	-590	-650	-2,000
이민 프로그램-2020-21 계획 단계 (Migration Program-2020-21 planning levels)	-70	-85	-115	-117	388
소기업 매출 문턱 높이기 (Increase the small business entity turnover threshold)	-	-25	-55	-25	-105

자료: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0-21, Overview, The Treasury, 2020.10.6.

3 예산안 내용

가. 수입

- 2020-21년 일반정부 현금주의 세입(tax receipts)은 전년 대비 1.7% 감소한 4,246억호주달러, 총수취(total receipts)는 1.2% 감소한 4,638억호주달러로 전망
 - 2019-20년 반기 경제 및 재정 전망(MYEFO)과 비교해 현금주의 세입은 2020-21년에 550억 호주달러 감소
 - GDP 대비 세입은 2019-20년과 2020-21년은 18.7%에서 유지되었으나, 2021-22년 17.3%, 2022-23년 17.8% 수준으로 2020-21년 대비 감소가 예상됨
 -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은 세입이 2023-24년 18.8% 수준으로 상승할 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재정수입 대비 비중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각각 47.0%, 18.3%, 13.3%로 세원의 대부분(78.6%)을 차지
- 2020-21년 발생주의 재정수입(revenue)은 전년 대비 2.9% 감소한 4,724억호주달러로 전망
 - 2019-20년 MYEFO와 비교해 발생주의 재정수입은 2020-21년에 548억 2,600만호주달러 감소하고, 2021-22년은 875억 9천만호주달러, 2022-23년은 757억 9,500만호주달러 감소함
- 주요 세목별 수입 변화는 다음과 같음
 - (개인소득세) 고용지표 및 평균 소득의 하락 예측과 개인소득세 계획 등을 반영하여, 2019-20년 MYEFO와 비교해 향후 4년간 130억호주달러 하향 조정
 - 변화율을 추정하면 2020-21년 2.0% 감소하고, 2023-24년까지 향후 4년간 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열심히 일하는 호주인에 대한 세금 감면: 개인소득세 계획’을 통해 기존 81억호주달러의 세금 감면혜택을 바탕으로 2020-21년에는 개인소득세 계획의 2단계 감세를 시행하며, 저·중소득층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일회성 추가 혜택도 시행해 178억호주달러의 세금 감면을 예정

- (법인세)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채광 이익 증가를 전망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정책 (JobMaker Plan)과 같은 정책적 영향을 고려하면 2019-20년 MYEFO와 비교해 2020-21년 법인세는 122억호주달러 하향 조정, 향후 4년간 932억호주달러 하향 조정
 - 법인세 하향 조정으로 2019-20년 MYEFO 대비 2020-21년 예산안에서 법인세는 0.3% 감소
 - 향후 4년 전망은 2019-20년 MYEFO와 비교해 932억호주달러 하향 조정되었으나, 2020-21년 예산안에서 법인세는 향후 4년 평균 2.2%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 (부가세) 건강 및 여행 부문의 규제에 따른 서비스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2019-20년 MYEFO 대비 78억호주달러 하향 조정하고 향후 4년간 212억호주달러 하향 조정
 - 하향 조정을 통해 2019-20년 MYEFO 대비 2020-21년 예산안에서 부가세는 0.5% 감소하고, 향후 4년간 평균 5.3%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V-6〉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수입 전망 변화 비교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추정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19-20 MYEFO 수입(a)	527,267	551,662	567,195	*
변동(b-a)	-54,826	-87,590	-75,795	*
2020-21 예산안 수입(b)	472,442	464,072	491,400	538,100

주: 발생주의 기준, *는 데이터 없음

자료: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0-21, Paper No.1, 2020.10.6., statement 5-table 8.

〈표 V-7〉 2020-21년 예산안 재정수입 규모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2020-21		증감	
	MYEFO(a)	예산안(b)	금액(b-a)	비율
조세수입(Taxation Revenue)	490,036	113,583	-12,433	-9.9
소득세(Income taxation revenue)	364,020	321,330	-42,690	-11.7
개인소득세(Total individuals and other withholding tax)	247,700	222,200	-25,500	-10.3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s tax)	4,250	3,880	-370	-8.7
법인세(Company tax)	97,700	86,200	-11,500	-11.8
연금세(Superannuation funds)	13,210	8,180	-5,030	-38.1
석유세(Petroleum resource rent tax)	1,160	870	-290	-25.0
간접세(Indirect taxation revenue)	126,016	113,583	-12,433	-9.9
부가세(Goods and services tax)	69,790	62,970	-6,820	-9.8
주류세(Wine equalisation tax)	1,150	1,060	-90	-7.8
고급자동차세(Luxury car tax)	680	540	-140	-20.6
소비세 및 관세(Total excise and customs duty)	43,950	41,600	-2,350	-5.3
주요 은행세(Major bank levy)	1,660	1,670	10	0.6
농업세(Agricultural levies)	540	481	-59	-10.9
기타 간접세(Other taxes)	8,246	5,262	-2,984	-36.2
세의수입(Non-taxation revenue)	37,231	37,529	298	0.8
재정수입(Total Revenue)	527,267	472,442	-54,826	-10.4

주: 발생주의 기준

자료: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0-21, Paper No.1, 2020.10.6., statement 5-table 9.

〈표 V-8〉 2020-21년 예산안 세목별 재정수입 규모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실적	추정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조세수입(Taxation Revenue)	447,526	434,913	424,797	454,348	499,247
소득세(Income taxation revenue)	329,058	321,330	304,130	326,950	365,990
개인소득세 (Total individuals and other withholding tax)	229,731	222,200	213,600	239,500	253,500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s tax)	3,939	3,880	3,860	4,030	4,270
법인세(Company tax)	87,846	86,200	73,000	69,100	93,900
연금세(Superannuation funds)	6,621	8,180	12,770	13,420	13,420
석유세(Petroleum resource rent tax)	921	870	900	900	900
간접세(Indirect taxation revenue)	118,467	113,583	120,667	127,398	133,257
부가세(Goods and services tax)	65,287	62,970	67,720	72,560	76,560
주류세(Wine equalisation tax)	1,040	1,060	1,020	1,050	1,080
고급자동차세(Luxury car tax)	632	540	540	560	580
소비세 및 관세(Total excise and customs duty)	42,622	41,600	42,470	43,020	44,380
주요 은행세(Major bank levy)	1,639	1,670	1,720	1,770	1,820
농업세(Agricultural levies)	469	481	496	516	528
기타 간접세(Other taxes)	6,778	5,262	6,702	7,922	8,309
세외수입(Non-taxation revenue)	38,751	37,529	39,274	37,053	38,853
판매수입(Sales of goods and services revenue)	14,789	15,874	17,161	17,811	18,988
이자 및 출자수입(Interest and dividend revenue)	12,055	10,601	11,462	8,562	9,903
기타 세외수입(Other sources of non-taxation revenue)	11,907	11,054	10,651	10,680	9,962
재정수입(Total Revenue)	487,277	472,442	464,071	491,401	538,100

주: 발생주의 기준

자료: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0-21, Paper No.1, 2020.10.6., statement 10-note 3-6.

나. 지출

- 2020-21년 일반정부 발생주의 지출(expenses)은 전년 대비 15.3% 증가한 6,703억 3천만 호주달러(GDP 대비 34.4%)로 편성
 - 교통·통신 분야가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78.4%)을 보였고 농림·임업·수산 분야(51.4%), 기타 경제 분야(49.6%) 순으로 증가율이 높음
 -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가 전체의 3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로 기타 경제 분야가 14.6%, 기타 분야¹¹²⁾가 14.4%를 차지함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보건, 경제, 고용 분야에 많은 대응책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20-21년 지출은 GDP 대비 34.4% 수준이나 2021-22년 28.2%까지 감소하고, 향후 GDP 성장 회복과 지출 감소를 통해 2023-24년까지 27.1%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
- 정부지출은 2020-21년 약 54.2%를 차지하는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 교육 분야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주요 기능별 지출 변화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일반 공공서비스) 2020-21년에서 2023-24년까지의 지출 감소는 퇴직연금(superannuation) 계산 기준이 상이한 것에 주로 기인
 - 2020-21년까지는 퇴직연금 계산에 장기 국채 이자율을 사용했으나(2019-20년 기준 연 1.0~1.7%), 앞으로는 퇴직연금 장기 비용 보고서를 작성하는 계리사의 기준 할인율인 5%에 기초해 연금을 계산
 - (국방) 2020-21년에서 2023-24년까지의 지출 증가는 2016년 국방백서의 계획 및 2020년 군사구조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반영
 - (교육) 2020-21년에서 2023-24년까지의 지출 증가는 주로 학교 개선 패키지(Quality Schools Package)에 따라 시행된 학교 지원과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 방법론¹¹³⁾에 따른 비정부 학교(non-government school) 지원 증가를 반영

112) 공공채무 이자 지출, 주·준주·지방 정부 보조, 예비비 등

113)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 방법론(Socio-Economic Status Score Methodology)은 각 학교의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소득, 교육 및 직업 특성에 따라 모든 비정부 학교의 상대적 순위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금을 결정

- (보건) 2019-20년에서 2020-21년까지의 지출 증가는 주로 코로나19에 따른 공중보건 대응에 기인, 2020-21년에서 2023-24년까지의 지출 증가는 공립병원(의료활동 증가) 및 의료 서비스 혜택 증가(고부가 품목 사용 증가)를 위한 주 정부 지원에 기인
- (사회보장 및 복지) 2019-20년에서 2020-21년까지 지출 증가는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일시적 경제 대응책 지원과 실업 감소 및 경기회복 추정에 기인, 경제 회복에 따른 2021-22년부터 2022-23까지 지출 감소, 2023-24년 지출 증가는 노령 연금 및 시설·자택 요양 증가를 반영
-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2019-20년에서 2020-21년까지의 증가는 한시적 주거 건설 프로그램(time-limited HomeBuilder program)¹¹⁴⁾과 도시 및 지역 개발 조치를 반영, 2021-22년부터 2023-24년까지의 지출 감소는 주거 건설 프로그램의 완료와 도시 및 지역 개발 조치 완료 예정을 반영
- (교통·통신) 2019-20년에서 2023-24년까지의 지출 증가는 주로 기존 도로 및 철도 부설에 대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비용을 반영
- (기타 경제부문) 2019-20년에서 2020-21년까지의 지출 증가는 주로 구직자 지원 및 고용주 현금 흐름 지원 등 정부의 한시적 코로나19 경제지원 패키지를 반영, 경제 회복을 반영하여 2021-22년에서 2023-24년까지는 지출 감소
- (기타 목적) 2019-20년에서 2023-24년까지의 지출 증가는 주로 주 및 준주¹¹⁵⁾에 대한 일반 수입 보조금¹¹⁶⁾ 증가와 긴급 대응을 위한 예비비의 보수적 편성에 기인

114) 한시적 주거 건설프로그램(time-limited HomeBuilder program)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건축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집을 신축하거나 리노베이션하는 경우 무과세 지원금을 지원하는 한시적 프로그램임(호주 재무부, HomeBuilder -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20.6.4.,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20-06/HomeBuilder_Frequently_asked_questions.pdf, 검색일자 2020.12.18.)

115) 호주는 크게 6개 주(state; 뉴사우스웨일즈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테즈메이니아주)와 2개 준주(territory; 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노던준주)로 구성됨

116) 호주 연방정부가 각 주 및 준주에 지급하는 일반 세입 지원

〈표 V-9〉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전망 변화 비교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추정		
	2020-21	2021-22	2022-23
2019-20 MYEFO 지출(a)	515,123	533,833	555,589
변동(b-a)	155,207	33,658	19,318
2020-21 예산안 지출(b)	670,330	567,491	574,907

자료: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0-21, Paper No.1, 2020.10.6., statement 6-table 2.

〈표 V-10〉 2020-21년 예산안 기능별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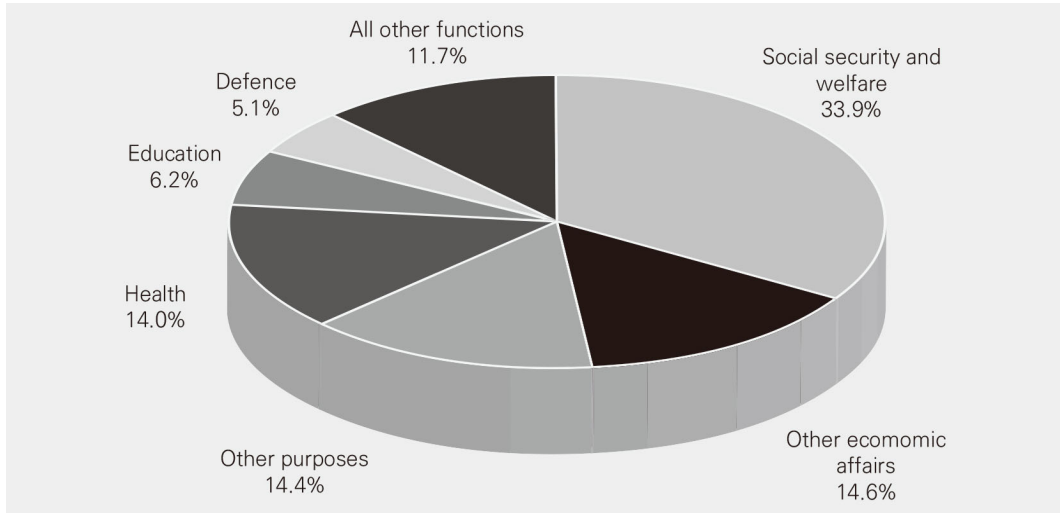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실적	추정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일반 공공서비스	29,472	31,764	24,412	23,840	24,327
국방	33,187	34,415	35,382	37,120	38,996
공공질서 및 안전	6,388	6,212	5,802	5,597	5,514
교육	39,885	41,742	41,512	42,095	43,349
보건	87,023	93,771	90,313	93,819	97,532
사회보장 및 복지	196,119	227,529	201,730	201,562	205,480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5,332	7,086	5,713	5,172	4,794
여가 및 문화	3,971	4,364	4,000	3,836	3,900
연료 및 에너지	7,892	8,771	8,603	9,021	9,511
농림·임업·수산	2,584	3,913	3,880	3,182	2,871
광업·제조·건설	2,819	3,306	3,696	4,026	4,112
교통·통신	7,321	13,060	14,453	15,054	15,158
기타 경제부문	65,494	97,948	14,281	10,311	9,795
기타	91,062	96,449	113,711	120,271	131,278
총액	578,549	670,330	567,491	574,907	596,619

자료: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0-21, Paper No.1, 2020.10.6., statement 6-table 3.

[그림 V-3] 2020-21년 예산안 기능별 지출

(단위: %)



자료: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0-21, Paper No.1, 2020.10.6., statement 6-Chart 2.

〈표 V-11〉 2020-21년 상위 20개 지출 프로그램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프로그램 ¹⁾	분류	실적 2019~20	추정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 (Economic Response to the Coronavirus) ²⁾	기타 경제부문	55,179	82,477	2,900	250	0
주와 준주에 대한 수입 보조금 (Revenue assistance to the States and Territories)	기타	62,027	61,926	68,034	72,807	76,721
노령 인구 소득지원 (Income Support for Seniors)	사회보장·복지	50,104	53,549	51,425	53,089	54,977
구직자 소득지원 (Job seeker income support)	사회보장·복지	20,128	34,095	17,302	14,095	13,023
의료급여(Medical Benefits)	보건	24,881	28,248	28,146	29,505	31,041
주립병원 지원 (Assistance to the States for public hospitals)	보건	22,560	23,607	25,192	26,651	28,241
국가장애보험계획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사회보장·복지	18,676	23,431	25,448	25,615	25,706
노인요양 서비스 (Aged care services)	사회보장·복지	19,757	21,849	23,032	24,500	25,851
가족 세제 혜택 (Family Tax Benefit)	사회보장·복지	18,333	19,405	18,208	18,012	18,102
장애인 소득지원 (Income Support for People with Disability)	사회보장·복지	17,781	18,506	17,328	17,329	17,940
의약품 혜택, 서비스 및 공급 (Pharmaceutical benefits, Service and Supply)	보건	13,432	13,716	13,648	13,986	14,306
사립학교 국가 지원 (Non-government schools National Support)	교육	13,918	12,844	14,657	15,450	16,132
간병인 소득지원 (Income Support for carers)	사회보장·복지	9,375	10,102	9,777	10,139	10,625
군인연금 혜택 (Defence Force Superannuation Benefits)	국방	9,786	9,894	7,547	7,814	8,235
공립학교 지원 (Government schools National Support)	교육	8,387	9,067	9,748	10,447	11,027
탁아보조금 (Child Care Subsidy)	사회보장·복지	7,921	8,978	9,331	9,843	10,292

〈표 V-11〉의 계속

구분		실적	추정			
프로그램 ¹⁾	분류		2019~20	2020~21	2021~22	2022~23
공공연금 혜택 (Public sector superannuation Benefits) ³⁾	기타, 일반공공서비스	8,513	8,264	9,108	9,231	9,320
유류세 공제 계획 (Fuel Tax Credits Scheme)	연료 · 에너지	7,343	7,838	7,925	8,380	8,947
군사 능력 (Army capabilities)	국방	7,298	7,820	8,253	8,374	8,961
공군 능력 (Air Force capabilities)	국방	6,652	7,553	7,759	8,326	8,766
상위 20 지출 프로그램 합계		402,051	463,170	374,767	383,843	398,214
기타 프로그램		176,498	207,160	192,725	191,064	198,405
총지출		578,549	670,330	567,491	574,907	596,619

주: 1) 해당 프로그램 내의 기관 간 거래는 제외

2) 동 사업은 구직자 지급 연장, 견습생 임금보조금 인상, 일자리 창출 고용 공제 사업의 합

3) 동 사업은 연금의 명목 이자와 발생주의 비용의 합

자료: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0-21, Paper No.1, 2020.10.6., statement 6-Table 3.1.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 (기업)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이양을 준비
 - 1,150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약 350만개 기업(호주 기업의 99% 이상)에 비광산 기업에 대한 감가상각자산 투자액의 80%를 포함한 2천억호주달러 규모의 한시적 세제 혜택을 제공
 - 이미 지원된 58억호주달러를 포함해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해 주와 준주 간 직업 면허 및 등록상호 인정 자동화, 규제 및 신용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친환경 및 디지털화 농업에 대한 투자 및 세금 감면책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회복 도모
 - 2030년까지 호주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45억호주달러를 초고속 광대역 통신(Ultra-fast broadband)을 가정과 기업에 설치하는 데 투자하고, 2,920만호주달러를 5G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 디지털 신원 확인 및 가상회의 활성화, 영연방 기관 디지털 서비스 현대화를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웹사이트 디자인, 마케팅 및 교육 등 디지털 솔루션 프로그램에 2,470만 호주달러를 지원
 - 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핀테크 분야에 대한 오스트레이드(호주 무역투자대표부) 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육성
 - 농업 수출을 촉진하고 가뭄, 산불,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3억 2,800만호주달러를 투자하고 농산물 수출업 디지털화에 2억 2,200만호주달러를 지원, 무역 창구 단일화에 2,860만호주달러를 투자해 현대화된 무역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 (직업교육·훈련) 재교육 및 전문성 향상 교육을 통해 취업 준비생의 전문화를 돕고 여성의 경제적 안정 지원
 - 일자리 창출 계획의 일환으로 10억호주달러의 일자리 훈련(JobTrainer) 펀드를 조성해 학교 퇴학자를 포함한 취업준비생 청년들의 전문성 향상 교육과 재교육을 돕고 34만 700개의 훈련시설을 지원

- 견습생과 훈련생을 지원하는 28억호주달러의 임금 보조금 외에 견습생 지원 보조금으로 임금 보조금을 분기당 최대 7천호주달러 지원해 10만명의 신규 견습생과 교육생 지원
 -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2억 9,600만호주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구직자들의 개별적 지원을 위한 1억 8,300만호주달러, 전문화된 지원을 위한 2,190만호주달러를 투자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소득 잠재력 향상과 경제적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 2020 여성경제안보선언을 발표하고 2억 4,440만호주달러를 취업, 직장 내 여성 지원, 가족 생활 지원 등을 포함한 패키지에 투자
 - 이 패키지를 통해 Women@Work Plan*에 5천만호주달러를 투자하고, Respect @Work Council 프로그램, ParentsNext 프로그램** 등을 지원
 - * Women@Work Plan은 여성에 대한 공학 및 수학(STEM) 교육을 지원하고, 남성 중심 산업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증가시키기 위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임
 - ** Respect@Work Council 프로그램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ParentsNext 프로그램은 유급 육아휴직 지원 프로그램임
- (인프라 투자) 교통, 제조업, 연구개발, 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기 부양 효과 극대화
- 브리즈번 내륙 철도, 웨스턴 시드니 인터내셔널(낸사버드 월턴) 공항을 포함한 10년의 교통 인프라 투자 파이프라인의 일부로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향후 4년간 140억호주달러를 신규 및 가속화된 인프라 프로젝트에 추가로 투자해 4만개의 일자리 창출
 - 도로안전 사업에 대한 미사용 자금은 과거 재원 할당 실적에 따라 주와 준주에 재할당해 효율적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경기 부양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함
 - 제조업 및 R&D 분야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일자리 창출
 - 국방, 우주, 식료품, 청정에너지, 의료제품, 자원 및 광물 관련 제조업 분야의 근대화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13억호주달러를 투자
 - 지난 3년간 이루어진 제조업 5천만호주달러의 제조업 현대화 기금 1회차 투자에 이어 2회차 투자를 통해 5,280만호주달러를 중소 제조업체에 투자

- 소액(2천만호주달러 미만)의 R&D 분야는 세금 상계액을 늘리고 연간 세금 환급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해 제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일자리를 창출
- 매너리스 링크¹¹⁷⁾ 에너지 커넥트 프로젝트¹¹⁸⁾ VNI 웨스트¹¹⁹⁾ 등 송전 프로젝트 가속화를 위해 2억 5천만호주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전기료를 낮추고 4천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 19억호주달러 규모의 패키지가 지원하는 제1차 저배출 기술 성명서를 발표해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고, 5,290만호주달러를 지원해 천연가스 허브를 만들어 효율적인 운송시장을 제공, 2억 570만호주달러 규모의 연료 보안 계획으로 육상 디젤 저장규모를 40% 증가시켜 연료산업의 일자리 보호 및 창출

나. 복지

- (교육) 코로나19 팬데믹에 취약한 아동의 보육 지원과 청년교육 과정에 대한 투자
 -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을 겪은 아동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1억 4,600만호주달러를 투자해 가정환경이 안 좋은 학생들과 졸업생 지원
 - 2020년 9월 27일 전국적인 전환 패키지(Transition Package) 협정 종료에 따라 빅토리아주 보육 서비스 기금을 확대
 - 2021년 1월 31일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입의 25% 수준을 보장하고 보육 서비스 피고용자에 대한 요금 수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동결, 고용 보장
 - 취약계층 청년의 교육성과 개선을 위해 2030년 말까지 3,099억호주달러를 학교에 투자할 계획
 - 연간 학교 지원금을 2020년 218억호주달러, 2030년에는 340억호주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계획
 - 2021년 말까지 4억 5,320만호주달러를 투자해 어린이들을 위한 주당 15시간의 유치원 교육을 지원

117) 태즈매니아 지역과 빅토리아 지역의 송전 해저 케이블 건설 사업

118) 남호주 지역과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 케이블 건설 사업

119) 빅토리아 지역과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 사업

- (보건·의료)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에 투자하고 원격 진료 및 1차 진료 시스템과 정신 건강 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
 - 호주인의 코로나19 예방과 진단을 위한 의료 지원에 49억호주달러를 투자하고, 32억호주달러를 국립의료비축기구에 투자해 최전방 의료 인력을 위한 7,600만개 이상의 마스크와 보호장비를 보급
 -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지역별 대응을 위해 투자 및 지원
 - 주와 준주의 지역별 병원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11억호주달러를 지원
 - 호주 대학의 코로나19 백신 연구 개발에 600만호주달러, 옥스퍼드 대학교와 퀸즐랜드 대학교의 백신 개발에 17억호주달러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COVAX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300만호주달러를 투자
 - 1억 1,200만호주달러를 원격진료 지원에 투자해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 추가 자금 1억 4,800만호주달러를 제공해 모든 호주인들이 최대 10회의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1차 진료 시스템에 1억 7,100만호주달러를 지원하고 이 중 7억 5,000만호주달러 이상을 코로나19 진단과 환자 관리를 위한 150개의 호흡기 클리닉 확대 운영에 지원
- (노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노인과 요양보호사를 지원하고 연금제도 변화를 통해 노인 보호 강화
 -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노인요양에 16억호주달러 지원, 노인요양 근로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 비용 2억 4,500만호주달러, 노인요양보호사 인력 유지 지원금 2억 510만호주달러를 포함해 총 7억 4,630만호주달러 지원
 - 94억호주달러를 지원해 2021년 3월까지 연금수급자, 사회보장 및 기타 수혜자에 1인당 750호주달러의 경제 지원금을 지급하고, 26억호주달러를 지원해 2021년 3월까지 1인당 250호주달러 추가 지원
 - 노후자금 계정 제도 변화를 통해 노후 안정 강화

- 직장 이직 시 기존 직장에서 적립하던 노후자금 계정 외에 새로운 노후자금 계정이 생성되던 제도에서 하나의 노후자금 계정을 이직 후 유지하도록 제도 변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수수료와 보험료 감소
- 세금 산정 시 사회보장급여의 소득 인정 비율을 감소시켜 0.25~2.25%만 소득으로 간주, 이를 통해 소득지원 대상자에게 약 8억 7,600만호주달러 추가 지급 효과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막기 위해 지원금 수령자와 해고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2019-20년 1만호주달러의 연금을 임시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1만호주달러를 추가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재정건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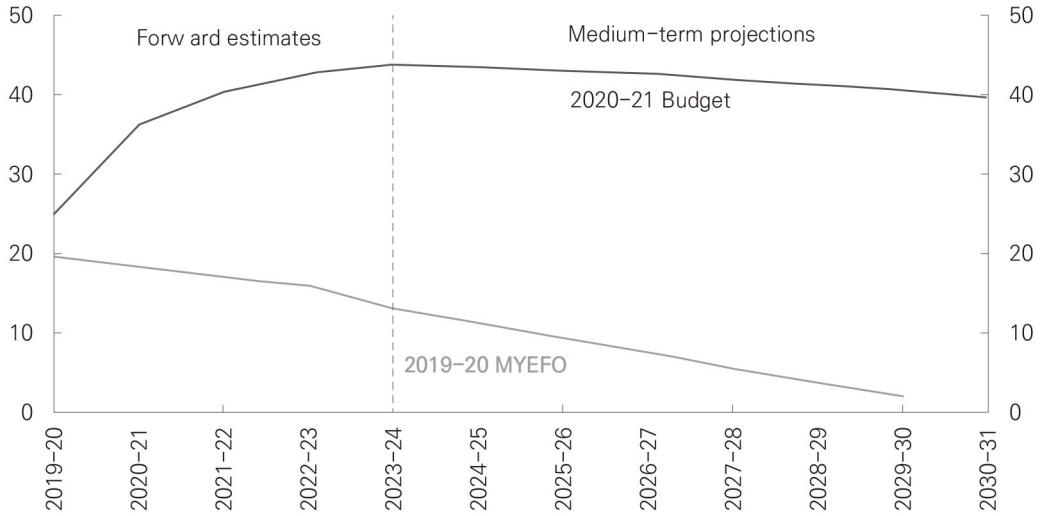
- 2020-21년에 GDP의 11% 수준인 2,137억호주달러 재정 적자가 예상되나 2023-24년까지 GDP의 3% 수준으로 적자 폭을 감소시킬 예정
 - 호주 경제에 대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부터 완충 작용을 하기 위해 경제 회복과 민간 주도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을 늘림
 - 이와 동시에 세입은 2019-20년 MYEFO에 비해 2020-21년 552억호주달러 감소하고, 2023-24년까지 2,835억호주달러 감소시켜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세부담을 완화함
 - 코로나19의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인해 GDP 대비 순채무¹²⁰⁾는 2023-24년에 43.8% (9,961억호주달러) 고점 이후 2029-30년 40.6%수준까지 완만하게 감소할 전망
 - 이는 2029-30년 순채무가 소멸할 것이라고 분석한 2019-20년 MYEFO의 결과와 대비됨
 - GDP 대비 총채무¹²¹⁾도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2019-20년 MYEFO의 결과와 달리, 점차 증가하다 55% 선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추정

120) 부채(예금, 정부채권(시장가), 대출 및 기타 차입금)에서 자산(현금 및 예금, 선급금, 투자, 대출 및 출자 금액)을 차감

121) 정부채권(액면가)

[그림 V-4] 순채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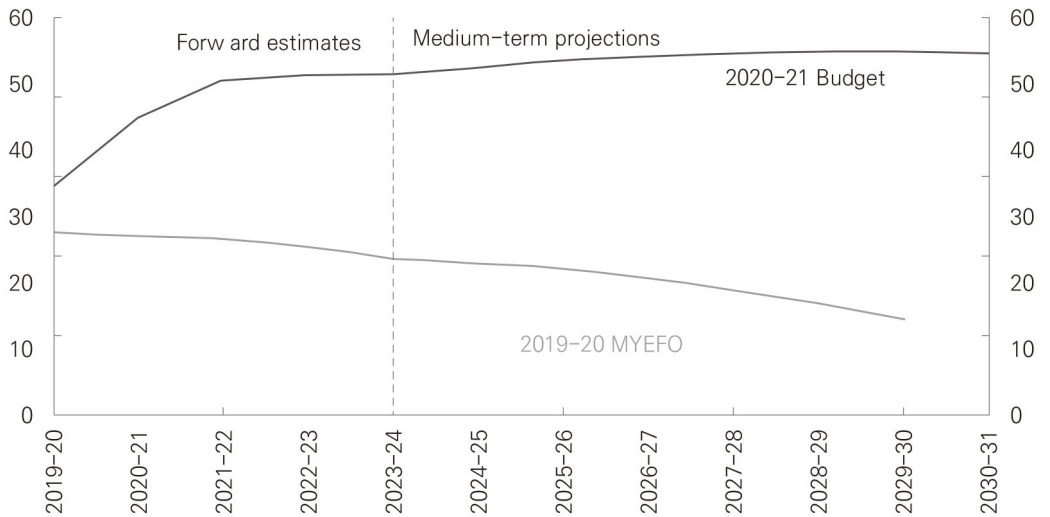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0-21, Paper No.1, 2020.10.6., statement 3-Chart 9.

[그림 V-5] 총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0-21, Paper No.1, 2020.10.6., statement 3-Chart 8.

- 정부는 코로나19 추가 감염사태, 보건 및 경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을 고려해 재정지출을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
 - 의약품에 대한 의료보험제도인 의약효용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에 신약품을 추가하고 월별 재검토를 통해 1,830만호주달러의 비용을 절감
 - 복지지출 인프라 전환(Welfare Payment Infrastructure Transformation) 프로그램 - tranche four*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재고함으로써 2020-21년부터 4년간 3억 1,740만호주달러의 비용 절감
 - * 복지지출 인프라 전환(Welfare Payment Infrastructure Transformation) 프로그램 - tranche four는 노령 인구 및 가족에 대한 복지지출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전화를 통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임
 - 대학 재정 지원과 농촌 등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환경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을 개선해 고등교육 시스템을 강화
 - 과학, 교육학, 간호, 농업, 수학 등 우선순위 영역의 교육비에 대한 학생 분담금 감소, 대학의 지역 연계 강화, 소비자물가 지수를 반영한 보조금 제도 개선 등을 포함
 - 기존 국가 경쟁력 보조금 프로그램 기금 등을 활용하고, 제도를 개선해 2020-21년부터 4년간 4,380만호주달러의 비용을 절감

VI. 캐나다

※ 2020년 캐나다 예산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며, 2020년 11월 30일 발표된 '2020년 가을 경제 성명'이 이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

□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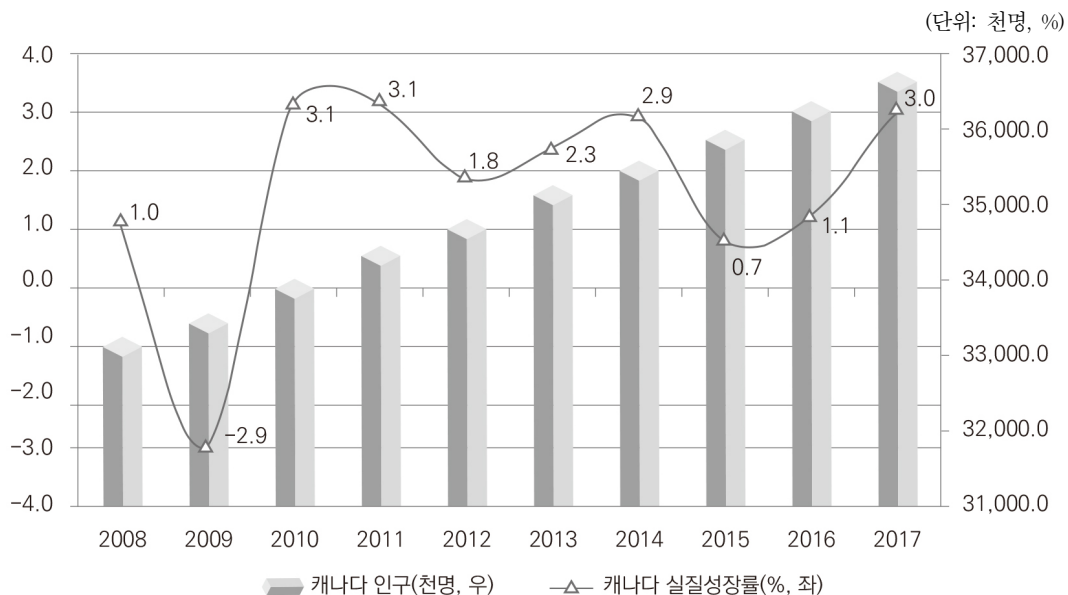
○ Budget 2020, 2020.1.30.

□ 환율: 1캐나다달러 = 879.88원(2019년 평균)

□ 경제규모: 2019년 경상 GDP 1조 7,364억 달러

□ 인구: 2019년 약 3,759만명

□ 실질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0, 검색일자: 2020.12.11.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2020년 실질 및 명목 GDP 성장률은 각각 5.8%, -5.5%,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은 각각 9.7%, 0.7%로 전망
- (재정 전망) FY2020-21 재정적자는 3,816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7.5%)로 전망되며, FY2020-21 GDP 대비 누적 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 비율은 50.7% 수준으로 전망
- (정책기조) '코로나19 대응', '대유행 기간 자국민 지원', '더 나은 기반 구축', '신중한 재정계획'에 대한 4개 주제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을 포함

□ 세입 및 세출

- (세입) FY2020-21 총세입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전년 대비 580억캐나다달러 감소한 2754억(GDP 대비 12.6%)으로 예상
- (세출) FY2020-21 총세출은 코로나19 위기로 전년 대비 2,829억캐나다달러 증가한 6,214억(GDP 대비 28.5%)으로 예상

□ 주요 경제 및 재정 정책

-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대응을 목표로 백신 개발, 원주민 및 취약계층 지원, 의료 용품 지원, 그리고 국제적 공조 강화에 대한 정책 제시
- (대유행 기간 자국민 지원)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국민을 지원하기 소득 지원, 아동 및 노인 지원, 세금 및 노동시장 지원, 임대 지원, 기업 지원 실시
- (더 나은 기반 구축) 향후 3년 동안 1천억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불황으로부터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 이행
- (신중한 재정계획) 한시적인 부양책 철회 및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정책의 경로(fiscal path)로 복귀를 위한 정책 실시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실질GDP 성장률) 2020년 실질GDP 성장률은 2020년 경제 및 재정 현황(Economic and Fiscal Snapshot 2020, 2020.8.24., 이하 EFS) 전망 대비 1.0%p 하향 조정된 -5.8%로 전망
 - 2021년 성장률은 4.8%로 예상되나 조사시점이 2차 확산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실제 보다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음
- (명목GDP 성장률) 2020년 명목GDP 성장률은 2020년 EFS 전망 대비 1.7%p 하향 조정된 -5.5%로 전망
- (실업률) 2020년 실업률은 2020년 EFS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된 9.7%로 전망
 - 실업률은 2020년 5월 13.7%로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2년 초쯤이면 고용이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
- (물가 상승률) 202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EFS 전망 대비 0.2%p 상향 조정된 0.7%로 전망
 - 물가 상승률의 상향 조정은 유가 상승에 기인하며, 앞으로 매년 약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표 VI-1〉 캐나다 경제 전망

(단위 :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0-25
실질GDP 성장률	Budget 2019	1.6	1.7	1.9	1.9			
	2020 EFS ¹⁾	-6.8	5.5					
	2020 FES	-5.8	4.8	3.2	2.3	2.1	1.9	1.4
명목GDP 성장률	Budget 2019	3.5	3.7	3.9	4.0			
	2020 EFS	-7.2	7.9					
	2020 FES	-5.5	6.9	5.3	4.4	4.3	4.0	3.2
실업률	Budget 2019	5.9	6.0	6.0	5.9			
	2020 EFS	9.8	7.8					
	2020 FES	9.7	8.1	7.0	6.3	6.0	6.0	7.2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Budget 2019	2.0	1.9	2.0	2.0			
	2020 EFS	0.5	2.0					
	2020 FES	0.7	1.7	1.9	2.0	2.1	2.1	1.7

주: 1) Economic and Fiscal Snapshot 2020, 2020.8.24.

자료: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20*, 2020.11.30., Table A1.1에서 일부 발췌

나. 재정 전망

- (개요) 정부는 바이러스가 통제되면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회복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금부터 향후 3년 동안 GDP의 3~4%인 1천억캐나다달러를 투자할 예정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보건 및 경제 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가 정해질 것이며, 아직까지 재정계획(fiscal framework)에 공식으로 포함되지는 않음
- (재정수지) FY2020-21 재정적자는 3,816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7.5%)이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FY2025-26에는 249억캐나다달러(GDP 대비 -0.9%)를 기록할 전망
- (총세입) FY2020-21 총세입은 전년 대비 587억캐나다달러 감소한 2,754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총세출) FY2020-21 총세출은 전년 대비 2,787억캐나다달러 증가한 6,416억캐나다달러 규모로 전망
 - FY2020-21 프로그램 지출은 6,214억캐나다달러, 이자지출은 202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연방채무) GDP 대비 누적 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¹²²⁾ 비율은 FY2020-21에는 50.7%(1조 1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5-26 49.6%(1조 3억캐나다달러)로 전망

〈표 VI-2〉 캐나다 재정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구분	2019~20	Projection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총수입	334.1	275.4	335.9	357.8	377.3	398.5	417.3
총지출 ¹⁾	362.9	641.6	441.5	396.4	410.1	423.4	438.4
프로그램지출	338.5	621.4	421.2	373.9	384.4	392.9	404.0
이자지출	24.4	20.2	20.3	22.4	25.7	30.5	34.3
재정수지 ²⁾	-39.4	-381.6	-121.2	-50.7	-43.3	-30.9	-24.9
연방채무 ³⁾	721.4	1,107.4	1,228.5	1,279.3	1,322.6	1,353.4	1,378.3
GDP 대비 비중(%)							
총수입	14.5	12.6	14.4	14.6	14.7	14.9	15.0
프로그램지출	14.6	28.5	18.1	15.2	15.0	14.7	14.5
이자지출	1.1	0.9	0.9	0.9	1.0	1.1	1.2
재정수지	-1.7	-17.5	-5.2	-2.1	-1.7	-1.2	-0.9
연방채무	31.2	50.7	52.6	52.1	51.6	50.6	49.6

주: 1) Total expenses, excluding net actuarial losses

2) Budgetary balance before stimulus

3) Federal debt before planned stimulus

자료: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20*, 2020.11.30., Table A1.5에서 일부 발췌

다. 정책기조

- ‘코로나19 대응’, ‘대유행 기간 자국민 지원’, ‘더 나은 기반 구축’, ‘신중한 재정계획’에 대한 4개 주제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을 제시

122) 공식채무지표로 누적 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를 사용하며, 연방채무는 이자지급채무와 외상매입 등을 포함한 부채에서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출

- ‘코로나19 대응(Fighting 코로나19)’ 및 ‘대유행 기간 자국민 지원(Supporting Canadians through the Pandemic)’을 주제로, 정부는 바이러스로부터 캐나다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
 - 캐나다 정부는 2021년까지 자국민과 기업들에 확실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가장 취약한 계층 및 부문에 초점을 맞춰 유연하고 기민하게 실시
 - 2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 회복 지원금(CRSB), 회복 부양 보조금(CRCB), 경제 복구 지원금(CRB) 등 새로운 지원¹²³⁾을 제공
- ‘더 나은 기반 구축: 코로나19 경기 침체 극복 계획(Building Back Better: A Plan to Conquer the 코로나19 Recession)’을 주제로,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불황으로부터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 이행
 - 정부는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이면서, 동시에 혁신적이고 탄력적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향후 3년간 GDP의 3~4%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실시
 - 코로나19 여파를 보다 크게 받은 여성, 청년, 원주민, 흑인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고안될 것이며, 여기에는 사회기반시설 강화 조치도 포함될 것
- ‘신중한 재정계획(A Prudent Fiscal Plan)’을 주제로, 한시적인 부양책 철회 및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정책의 경로(fiscal path)로 복귀를 위한 정책 실시
 - 정부는 과거 불황기로부터 얻은 교훈을 자양분으로 삼아,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재정지원을 지속
 - 모든 전자상거래에 연방 상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와 통합판매세(Harmonized Services Tax: HST)가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등 경기안정화의 핵심인 세금의 공평 부담을 위한 정책 고안 및 실시

123) 코로나19로 시행된 캐나다 긴급 재난지원 프로그램(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이 9월 26일에 종료되면서 새롭게 적용되는 고용보험 프로그램(EI)이 시행됨. 그러나 고용보험 프로그램에 지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 및 정부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연방정부는 고용보험 프로그램 외에 3가지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 상세 내용은 본고 p.171 이하 제2장에서 확인 가능

2 2020년 예산안 및 경제·재정 정책

가. 세입

- FY2020-21 총세입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전년 대비 580억캐나다달러 감소한 2,754억(GDP 대비 12.6%)으로 예상
 - (조세수입) FY2019-20 조세수입은 2,810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2.2%), FY2020-21 조세 수입은 2,550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1.7%)로 예상
 - － (개인소득세) 세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소득세는 바이러스로 인한 가계소득 위축으로 FY2020-21에 1,621억캐나다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법인세)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FY2020-21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21.8% 감소하여 392억캐나다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경기 회복으로 FY2021-22 법인세는 443억캐나다달러로 예상되며, 이후 연평균 8.2%의 성장률이 전망되나 위기 이전 수준 회복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
 - － (재화 및 용역세) FY2020-21 재화 및 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전년 대비 8% 감소한 후, FY2021-22에는 389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예정
 - 과세 대상 소비 전망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6.3%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관세)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 및 의료용품에 대한 관세 면제로 FY2019-20 관세수입(Customs import duties)은 49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0-21 37억캐나다달러로 감소한 후 FY2021-22에 44억캐나다달러로 다시 반등할 전망
 - 향후 5년간 관세 수입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연평균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기타 소비세) FY2020-21 기타 소비세는 수요 위축으로 감소하여, 108억캐나다달러(7.4%)에 이를 것으로 예상
 - － 그러나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FY2021-22에는 119억캐나다달러(10.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2%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고용보험) FY2020-21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 EI) 수입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215억캐나다달러로 예상되며, 향후 노동시장 개선¹²⁴⁾으로 연평균 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타 세입) FY2020-21 기타 세입은 전년 대비 336억캐나다달러 감소한 -53억캐나다달러, FY2021-22는 253억캐나다달러로 전망

〈표 VI-3〉 세입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구분	2019-20	Projection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총소득세(A)	227.1	211.1	226.5	237.8	250.5	263.9	277.5
개인소득세	167.6	162.1	172.1	179.3	187.5	196.1	205.7
법인세	50.1	39.2	44.3	48.4	52.7	57.3	60.8
비거주자소득세	9.5	9.9	10.0	10.1	10.3	10.5	11.0
총소비세(B)	53.9	43.8	55.2	58.7	61.2	63.4	65.7
재화 및 용역세	37.4	29.4	38.9	41.9	44.0	45.8	47.7
관세	4.9	3.7	4.4	4.7	4.9	5.3	5.6
기타 소비세	11.6	10.8	11.9	12.1	12.3	12.4	12.5
총조세수입(C=A+B)	281.0	255.0	281.7	296.5	311.7	327.3	343.2
고용보험(D)	22.2	21.5	23.0	24.3	26.4	28.5	30.1
기타 세입(E)	28.3	-5.3	25.3	29.3	31.7	35.1	36.5
총세입(F=C+D+E)	334.1	275.4	335.9	357.8	377.3	398.5	417.3
GDP 대비 비중(%)							
총조세수입	12.2	11.7	12.1	12.1	12.1	12.2	12.3
고용보험	1.0	1.0	1.0	1.0	1.0	1.1	1.1
기타 세입	1.2	-0.2	1.1	1.2	1.2	1.3	1.3
총세입	14.5	12.6	14.4	14.6	14.7	14.9	15.0

자료: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20*, 2020.11.30., Table A1.6에서 일부 발췌

124) 본고 p.176 이하 제3장에서 소개될 예정인, 긴급 임금보조금(CEWS), 경제복지지원금(CRB), 긴급 사업자금 대출금(CEBA), 지역구제 및 회복기금(RRRF) 등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효과로 볼 수 있음

나. 세출

- FY2020-21 총세출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전년 대비 2,829억캐나다달러 증가한 6,214억캐나다달러(GDP 대비 28.5%)로 예상
 -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FY2020-21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 지출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2,903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1,293억캐나다달러(FY2025-26)로 다시 감소할 전망
 - － (노인지원) 노인지원 지출은 FY2020-21 595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노인인구 전망 증가에 기인하여 향후 774억캐나다달러(FY2025-26)까지 증가할 전망
 - － (고용보험) FY2020-21 고용보험 지출은 위기로 인한 실업률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454억캐나다달러 증가한 672억캐나다달러로 예상
 - 노동시장이 개선되어 FY2023-24까지 234억캐나다달러로 감소할 전망
 - － (아동지원) FY2020-21 아동복지급여(Canada Child Benefits: CCB)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4.4% 증가한 279억캐나다달러로 예상
 - － FY2021-22 아동복지급여 지출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 증가를 반영하여 연평균 1.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정부부문 간 주요 이전지출¹²⁵⁾) FY2020-21 정부부문 간 주요 이전지출은 전년 대비 25.9% 증가하여 997억캐나다달러로 예상되며 FY2025-26에는 949억캐나다달러까지 증가할 전망
 - － (캐나다 보건지출) FY2020-21 캐나다 보건지출(Canada Health Transfer: CHT)은 419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5-26 511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보건지출은 명목GDP 성장률의 3년 이동 평균(Moving Average: MA)에 따라 증가하며 매년 최소 3% 증가 보장
 - － (사회보장지출) 사회보장지출(Canada Social Transfer: CST)¹²⁶⁾은 FY2020-21 150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5-26 174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125) 중앙정부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지출분으로 교부금 성격을 가짐

126) 매년 3% 증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 (홈케어 및 정신 보건) 홈케어 및 정신 보건 지원금은 FY2020-21 13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12억캐나다달러로 감소한 후 안정될 전망
 - (직접 프로그램 지출¹²⁷⁾) FY2020-21 직접프로그램지출은 3,125억캐나다달러로 15.3% 증가한 후, FY2025-26에는 1,798억캐나다달러로 감소할 전망
 - (부처 이전지출경비) 부처 이전지출경비는 FY2020-21 1,110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5-26 623억캐나다달러로 감소할 전망
 - (운영비용) 운영비용은 FY2020-21 1,137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까지 1,069억캐나다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연평균 0.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

127) 부처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직접 프로그램 지출로 구분하여 부처에 예산을 배분

〈표 VI-4〉 프로그램 지출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구분	2019~20	Projection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A) (Major Transfers to persons)	107.1	209.3	132.6	116.4	119.4	124.2	129.3
노인지원(Elderly benefits)	56.2	59.5	62.4	65.8	69.4	73.3	77.4
고용보험(EI benefits) ¹⁾	21.8	67.2	32.5	24.7	23.4	23.9	24.4
아동지원(Children's benefits)	24.3	27.9	27.4	26.0	26.5	27.0	27.5
정부부문 간 주요 이전지출(B)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79.2	99.7	82.1	83.9	88.0	91.5	94.9
건강 관련(Canada Health Transfer)	40.9	41.9	43.1	44.4	46.9	49.1	51.1
사회보장 관련(Canada Social Transfer)	14.6	15.0	15.5	15.9	16.4	16.9	17.4
재정균등화 교부금(Equalization)	19.8	20.6	20.9	21.4	22.6	23.6	24.6
준주 교부금(Territorial Formula Financing)	3.9	4.2	4.4	4.6	4.8	4.9	5.0
연료세기금(Gas Tax Fund)	2.2	2.2	2.3	2.3	2.4	2.4	2.5
홈케어 및 정신 보건 (Home care and mental health)	1.1	1.3	1.5	1.2	1.2	1.2	1.2
기타 재정협정(Other Fiscal Arrangements) ²⁾	-3.3	14.6	-5.6	-5.9	-6.2	-6.6	-6.9
직접프로그램지출(C) (Direct Program Expenses)	152.2	312.5	206.5	173.6	177.0	177.2	179.8
긴급임금보조금(Emergency Wage Subsidy)	0.0	83.5	14.1	0.0	0.0	0.0	0.0
기타 이전지출(Other Transfer payments)	54.4	110.0	75.5	59.1	60.7	61.2	62.3
운영비용(Operating expenses) ³⁾	95.2	113.7	110.1	106.9	108.7	108.4	109.9
총프로그램지출(A+B+C) (Total Program Expenses)	338.5	621.4	421.2	373.9	384.4	392.9	404.0
GDP 대비 비중(%)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Major Transfers to persons)	4.6	9.6	5.7	4.7	4.7	4.6	4.7
정부부문 간 주요 이전지출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3.4	4.6	3.5	3.4	3.4	3.4	3.4
직접프로그램지출 (Direct Program Expenses)	6.6	14.3	8.8	7.1	6.9	6.6	6.5
총프로그램지출 (Total Program Expenses)	14.6	28.5	18.1	15.2	15.0	14.7	14.5

주: 1) 일반혜택(regular benefits), 실업급여, 질병급여, 출산 및 육아휴직 수당, 간병급여, 어업급여, 근로 나눔(work-sharing)이 포함됨

2) 퀘벡주에 대한 청소년 회복 수당, 법정 보조금, 2005년 해외협약에 따른 지급금 등을 포함

3) 자본상각비용(capital amortization expenses)을 포함

자료: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20*, 2020.11.30., Table A1.7에서 일부 발췌

3 주요 경제 및 재정정책

가. 코로나19 대응(Fighting 코로나19)

- (백신) 캐나다 민간부문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혁신기금을 통한 최대 7억 9,200만캐나다달러를 지원
 - 백신개발을 위하여 휴먼 건강요법 연구센터(human health therapeutics research center)에 바이오 제조시설을 신설하도록 1억 2,600만캐나다달러 투자
 - 백신의 안전한 보관 및 유통을 위해 FY2020-21에 1억 5천만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필요한 물품 및 설비 확보

- (원주민 지원) 지역 원주민 지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 실시
 - 유콘(Yukon)주, 노스웨스트(Northwest)준주, 누나부트(Nunavut)준주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6,470만캐나다달러를 직접지원
 - 퍼스트네이션(First nations), 이누이트(Inuit), 메티스(Metis) 족에 3억 3,280만캐나다달러를 지원하여 자체 수입 감소분을 상쇄하고 필수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조

- (의료 용품) 연간 7,500만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마스크와 안면 보호대에 대한 상품용역세(GST)를 2020-21년도부터 향후 2년간 일시적으로 폐지
 - 개인보호 장비 및 필수 의료물품 조달을 위해 15억캐나다달러를 추가 할당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추적을 위해 5억 6,540만캐나다달러를 보건청에 지원

- (취약계층 지원) 연방정부는 안전재개협정(safe restart agreement)을 통해 7억 4천만캐나다달러를 주정부와 준주정부에 배정하여 장기요양 대상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해결

- 또한 노년층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와 준주 정부에 10억캐나다달러 규모의 기금투자를 약속하였으며, 이 자금은 세부 지출계획에 따라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하게 배정될 예정
 - 각 지방정부는 세부적인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집행실적을 향후 증명해야 함
- 9,300만캐나다달러를 상담센터(Wellness Together Canada 포함)에 지원하여 자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등 심리방역을 강화
- (국제적 공조) 캐나다는 백신 공동구매 및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박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백신 구매를 지원
 - 캐나다는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DSSI)¹²⁸⁾를 통한 유예금액 57억달러 중 4천만달러의 상환액을 지원

128) 73개 저소득국의 공적채무에 대해 2020년 말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는 정책

〈표 VI-5〉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지출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코로나19 경제대응 계획 공중보건 및 안전	영향 가치 ¹⁾	순 재정 영향(net fiscal impact) (발생주의)						
		2019~ 2020	2020~ 2021	2021~ 2022	2022~ 2023	2023~ 2024	2024~ 2025	2025~ 2026
안전재개협정 (Safe Restart Agreement)	19,909		19,909					
안전한 학교 개학 (Safe Return to Class)	2,000		2,000					
원주민 및 북부 지역사회 지원 (Indigenous and Northern Communities)	2,069		1,697	391				
백신 및 치료제 (Vaccines and Therapeutics)	14,340		7,520	6,530	340	236	131	119
진단 및 추적 (Testing and Contact Tracing)	1,370		779	569	24	5	5	5
개인보호장비 및 의료용품 (PPE and Medical Equipment)	5,352	200	3,331	1,821	170	113	4	4
공공시설 환기 (Ventilation in Public Buildings)	110		30	80	40			
쉼터 내 확산 방지 (Preventing Outbreaks in Shelters)	694		394	299				
자가격리 지원 (Quarantine and Self-Isolation Support)	908		650	256				
장기요양 지원 (Long-Term Care)	1,340		823	516	1			
정신건강 및 가상의료 (Mental Health and Virtual Care)	334		334					
오피오이드 위기 ²⁾ 대응 (Fighting the Opioid Crisis)	66		21	45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캐나다 적십자사 지원 (Support the Canadian Red Cross' Response to 코로나19)	219		135	84	66			
원주민 지역사회 내 공중보건 지원 (Support the Health Response in Indigenous Communities)	1,197		964	218	1	1	1	1
글로벌 사회 기여 (Contributing on the Global Stage)	845		-179	702				
총계	52,520	582	40,414	10,892	682	394	181	168

주: 1) 영향가치(impact value)는 FY2020-21 현금지출 및 유동성 지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 조치에는 FY2019-20 및 FY2021-22 지출도 포함되어 있음

2) 오피오이드 위기란, 주로 북미지역과 일부 유럽지역에서 합성 오피오이드(펜타닐 및 펜타닐 유사체 등) 과량 복용으로 인한 사망 및 내원 사례가 급속히 증가해 해당 국가에서 이를 '위기'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약물 과다 사용에 따른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어 정부는 오피오이드 위기 대응책을 실시

자료: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20*, 2020.11.30., pp. 20~22.

나. 대유행 기간 자국민 지원(Supporting Canadians through the Pandemic)¹²⁹⁾

1) 소득 지원

- (소득지원) 긴급재난지원금(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종료 이후 200만명이 단순 고용보험제도를 신청했으나 여전히 자격을 얻지 못하여 정부는 경제 복구 지원금(Canada Recovery Benefits: CRB)이라는 새로운 소득지원 제도를 구상
 - (경제복구 지원) 자영업자, 실업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입은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약 150만명의 캐나다인들이 신청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근로자 혹은 실업자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 주당 500달러를 최대 26주 동안 받게 됨
 - 소득 감소 증명은 신청기간 2주의 평균 소득이 신청일 이전 12개월의 평균 소득보다 50% 낮을 경우를 기준으로 함^{130), 131), 132)}
 - 혜택은 2021년 9월 25일까지이며, 프로그램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 필수이기 때문에 취업시장과 연계된 상태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 수혜기간 내 연수입이 3만 8천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시 1달러당 50센트를 반환
- (질병회복 지원) 연방정부는 캐나다 질병 회복 지원금(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CRSB)에 11억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이나 다른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최대 2주 동안 주당 500달러를 제공

129) 자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혜택 제공, 기업 보호를 위해 GDP의 19%인 4,070억캐나다달러 투자

130) 예를 들어,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입이 2만 6천캐나다달러인 경우, 이를 52주로 나누면 주당 500캐나다달러의 평균 소득이 산출됨. 따라서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주당 평균소득이 그 절반인 250캐나다달러 이하여야 경제 복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131) 소득은 근로, 즉 고용되어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만 포함하며, 연금, 학자금 용자나 장학금, 고용보험 수당, 코로나19 관련 혜택 수당은 포함되지 않음

132)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하며, 신청과정에서 고용 경력서, 임금 명세서 등 증빙 서류가 요구됨

2) 아동 및 노인 지원

- (아동 및 노인 지원) 캐나다 아동수당(child benefit) 수급 대상자는 자녀당 300캐나다달러, 노인연금(Old Age Security: OAS)은 수급 대상 노인당 최고 300캐나다달러 지원 예정
 - 양육급여(parental benefits)로 주당 최소 500캐나다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한 연장의 경우 주당 300캐나다달러 지원 가능
- (부양지원) 회복 부양 보조금(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s: CRCB)은 12세 미만의 어린이 혹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와 보육시설에 갈 수 없어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에게 최대 26주 동안 주당 500캐나다달러 지급

3) 세금 및 노동시장 지원

- (세금 환급) 1,500만명 이상의 중·저소득층(low- and modest-income)은 상품용역세(GST)에 대한 환급을 가장 높은 세율로 받을 예정
- (노동시장 지원) 시행 중인 긴급 임금보조금(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의 지급률을 65%에서 75%까지 높이고, 기간 또한 2021년 3월 13일까지 연장
 - (고용보험) 실직자는 최소 26주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늘려 대상자가 아니었던 40만명의 여성 또한 지원이 가능해짐

4) 임대지원

- (임대지원) 캐나다 긴급 임대 보조금(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CERS)은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사업체의 임대 지출에 대해 최대 65%의 보조금 지원
 - 2020년 1월과 2월의 평균수익 혹은 신청 월의 2019년도 수익과 신청기간 수익을 비교하여 감소 폭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
 - 두 가지 수익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매출 감소는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지출·납세를 기준으로 함
 - 긴급 임대 보조금 외에, 공중보건 명령에 따라 문을 닫거나 영업활동이 크게 제한된 사업체에 25%의 추가 지원금 제공

5) 기업지원

- (기업지원) 긴급 사업자금 대출금(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을 통해 현재 79만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에 무이자 대출을 제공
 - 최대 지원규모를 4만캐나다달러에서 6만캐나다달러로 확대했으며, 2022년 12월 31일 내로 원금을 상환할 경우 면제금액을 1만캐나다달러에서 2만캐나다달러로 확대
 -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역 구제 및 회복 기금(Regional Relief and Recovery Fund: RRRF)에 5억캐나다달러를 추가로 출연
 -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기업에 100% 정부 보증으로 최대 100만캐나다달러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며 상환기간은 최대 10년
- (부문별 지원) 관광, 호텔, 엔터테인먼트 등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고위험군 신용대출 프로그램(Highly Affected Sectors Credit Availability Program: HASCAP)을 실시 예정
 - (관광부문) 정부는 지역 구제 및 회복 기금을 통해 2,830개의 관광부문 기업에 총 2억 2,200만캐나다달러를 지원
 - 총기금액 중 25% 이상을 지역관광 사업 지원에 배정해 2021년 6월까지 5억캐나다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
 - (항공부문) 연방정부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21개 공항에 2억 2,900만캐나다달러의 추가 임대료 감면과 함께 항공운송 지원을 위한 2억 600만캐나다달러 제공
 - (혁신부문) 혁신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혁신기금(strategic innovation fund)¹³³⁾에 FY2021-22년부터 5년간 2억 5천만 캐나다달러를 투자

133) 미래 산업에서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된 기금으로, 코로나19 위기 이후 백신 후보군, 백신 임상시험, 인공지능, 그리고 바이오 제조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표 VI-6〉 직접지원 지출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코로나19 경제대응 계획 - 직접지원	영향 가치 ¹⁾	순 재정 영향(net fiscal impact) (발생주의)						
		2019- 2020	2020- 2021	2021- 2022	2022- 2023	2023- 2024	2024- 2025	2025- 2026
긴급임금보조금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83,540		83,540	16,185				
고용보험 강화 (Enhancements to Employment Insurance)	9,506		3,129	6,376	709	-1	-1	-1
경제복구지원금 (Canada Recovery Benefits)	23,007		12,672	10,335				
긴급 임대 보조금 및 추가 지원 (Emergency Rent Subsidy and Lockdown Support)	4,360		4,360					
긴급사업자금대출금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13,750		14,558					
지역구제 및 회복기금 (Regional Relief and Recovery Fund)	1,065		1,374	88				
방송 및 예술 분야 근로자 지원 (Support for Workers in the Live Events and Arts Sectors)	322		140	186	4			
항공 분야(Air Sector)	1,028		388	540	227	96	64	1
혁신기업 지원 (Support for Innovative Businesses)	535	-3	413	97	97	10	10	10
일자리 보호(Protecting Jobs)	5,505		5,505					
긴급재난지원금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83,033	6,505	76,528					
긴급학생보조금 (Canada Emergency Student Benefit)	3,010		3,010					
기업지원 (Support for Canada's Businesses)	7,271		6,212	600	279	109	91	53
취약계층 지원 (Helping Vulnerable Canadians)	15,665	108	14,894	631	-30	-30	-30	-30
지역사회봉사협회 (Supporting Community Service Organizations)	699	1	650	25	19	24	18	
기타 직접지원 (Other Direct Support Measures)	3,363		2,930	424	121	87	57	16
총계	269,797	6,611	226,873	34,906	1,121	242	154	-2

주: 1) 영향가치(impact value)는 FY2020-21 현금지출 및 유동성 지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 조치에는 FY2019-20 및 FY2021-22 지출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20*, 2020.11.30., pp.55-60.

〈표 VI-7〉 간접지원 지출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코로나19 경제대응 계획 - 간접지원	영향 가치 ¹⁾	순 재정 영향(net fiscal impact) (발생주의)						
		2019~ 2020	2020~ 2021	2021~ 2022	2022~ 2023	2023~ 2024	2024~ 2025	2025~ 2026
세금 및 수입관세 유예 (Tax and Customs Duty Payment Liquidity Support)	85,050	56	2,938	15	-3	-2		
중소기업 대출지원책 및 기타 신용지원책 (Business Credit Availability Program and Other Credit Liquidity Support)	83,400		6,355	4,689	1,951	555	-273	191
총계	168,400	56	9,273	4,704	1,948	553	-273	191

주: 1) 영향가치(impact value)는 FY2020-21 현금지출 및 유동성 지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 조치에는 FY2019-20 및 FY2021-22 지출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20*, 2020.11.30., p.61.

다. 더 나은 기반 구축: 코로나19 경기 침체 극복 계획

(Building Back Better: A Plan to Conquer the COVID-19 Recession)

1) 계획 개요

-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GDP의 3~4%에 달하는 1천억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경기 회복을 가속화할 예정

2) 상세 계획

- (노동시장) 정부는 노동력개발합의(workforce development agreements)에 15억캐나다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기술훈련 및 고용지원을 제공할 예정
 - (일자리 지원) 정부는 FY2021-22년 하계 일자리 프로그램(Canada summer jobs)에 4억 4,750만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12만개의 일자리 지원 예정
 - (일자리 창출) 향후 2년간 5억 7,530만캐나다달러를 청소년 고용 및 기술 전략(youth employment and skills strategy)에 투자해 4만 5,300개의 일자리 창출

- (교육) 모든 캐나다 가정들이 질 좋은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캐나다 전역에 교육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핵심 투자를 발표
 - (공동의 비전을 위한 통합) 정부,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교육 비전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FY2021-22년부터 5년간 2천만캐나다달러 투자
 - (유아교사 인력 지원) 유아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FY2021-22년 유아교사 인력 유치 및 유지를 위해 4억 2천만캐나다달러 투자
 - (학자금대출 지원) 3억 3,940만캐나다달러에 달하는 2021-22년 연방정부에 대한 상환 이자(interest on repayment)를 면제하여 최대 140만명의 졸업자들을 지원
- (아동지원) 24억캐나다달러를 할당하여 중·저소득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¹³⁴⁾ 1인당 최대 1,200캐나다달러를 한시적으로 지원
 - (아동수당) 캐나다 아동 수당(Canada Child Benefit: CCB) 대상이자, 12만캐나다달러 이하의 순소득을 얻고 있는 가정에 향후 4년에 걸쳐 300캐나다달러의 비과세 혜택 지원
 - 첫 지급은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시행되며, 나머지는 2021년 4월, 7월, 10월 예정
 - 순소득이 12만캐나다달러 이상인 저소득 가정에는 지급되는 보조금의 절반을 지원
- (환경)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토지 및 자원 관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FY2021-22년부터 10년간 최대 6억 3,100만캐나다달러 지원
 - (에너지 효율 개선) 정부는 2020-21년부터 향후 7년간 ‘홈 에너지 레트로핏(home energy retrofit)’ 프로그램에 26억캐나다달러를 투자할 예정
 - (배기가스 저감)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zero emission vehicle)의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천연자원부에 1억 5천만캐나다달러 지원
 - (기후변화 대응) FY2021-22년부터 10년간 총 31억 6천만캐나다달러를 천연자원부에 지원 하여 2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기후변화에 대응

134) 160만가구의 210만명 아이들을 대상으로 함

- (통신망 지원) 모든 캐나다인이 장소를 불문하고 초고속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광대역 기금(universal broadband fund)에 7억 5천만캐나다달러를 추가로 투자
 - 총 투자 규모는 17억 5천만캐나다달러로, FY2020-21년부터 7년간 집행 예정
- (주택부문 지원)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에 BFY2021-22년부터 7년간 120억캐나다달러 지원 예정
 - 임대주택 건설 재정지원 정책(rental construction financing initiative)의 확대를 위해 사용될 계획

(표 VI-8) '더 나은 기반 구축' 지출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코로나19 경제대응 계획 더 나은 기반 구축	2020~ 2021	2021~ 2022	2022~ 2023	2023~ 2024	2024~ 2025	2025~ 2026	합계
포용적 회복 - 직업훈련 (Inclusive Recovery - Training)	1,840	4,185	569	529	576	520	8,219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액션플랜 (Action Plan for Women in the Economy)	0.3	0.6					0.9
유아교육 시스템 지원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System)		509	18	20	19	19	585
아동가구에 대한 즉각적 지원 (Immedi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580	1,775					2,355
청소년을 위한 기회 창출 (Creating Opportunities for Youth)		1,284	58				1,342
광대역 기금 확대 (Accelerating the Universal Broadband Fund)	58	154	165	248	333	263	1,221
농업부문 지원 ¹⁾ (Compensation for Supply-managed Farmers)	1,197	-102	-108	-115	-120	-118	635
구조적 인종차별 철폐 및 공동체 건설 ²⁾ (Fighting Systemic Racism and Building Communities)	4	55	53	24	14	14	164
이민을 통한 경제 활성화 (Growing the Economy through Immigration)		188	170	143	131	132	765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44	69	100	118	128	458
지역사회의 안전화 (Making Communities Safer)		53	109	109	82	82	434
경쟁력 있는 녹색경제 (Competitive, Green Economy)	174	685	782	1,265	1,260	569	4,735
조화(Reconciliation) ³⁾	391	826	267	368	385	267	2,503
순 재정 영향(net fiscal impact)	2,405	5,697	1,618	2,162	2,221	1,356	15,457

주: 1) 농식품 분야의 강력한 성장 및 수출 증대를 위해 FY2020-21년부터 향후 3년간 14억캐나다달러를 추가 지급

2) 인종차별 대상 여성(racialized women), 원주민, 장애인 등 대우행으로 가장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직업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FY2021-22년부터 2년간 2억 7,420만캐나다달러 투자를 제안

3) 캐나다 원주민과 비원주민(non-Indigenous) 주거지역 내 인프라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원주민 지역사회 내 상하수도처리시설, 수은처리시설과 같은 필수 기반시설 건설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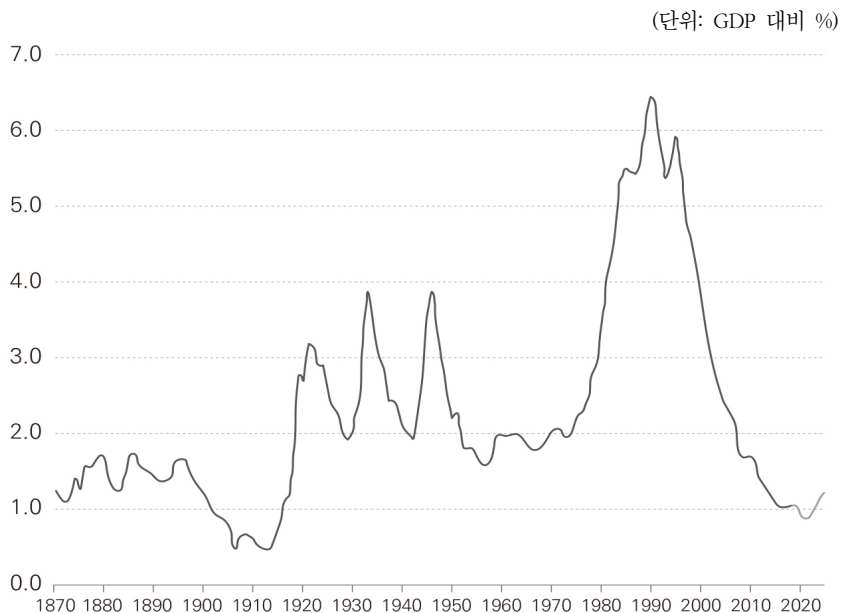
자료: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20*, 2020.11.30., pp.95-96.

라. 신중한 재정계획(A Prudent Fiscal Plan)¹³⁵⁾

1) 채무 전망

- (채무 전망) 연방정부의 GDP 대비 채무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나, FY2020-21년 GDP 대비 이자지출(debt charges)은 1% 미만으로 하락할 전망
 - 이후 FY2025-26년까지 1.2%로 소폭 상승하겠으나, 1세기 만의 최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시장금리) 사상 최저의 시장금리로 기존 부채를 재융자(refinancing)하고 신규부채 또한 발행할 수 있었음
 - 정부는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도록 채무관리전략(debt management strategy)을 수정하였으며, 이는 더 많은 장기부채를 저금리로 발행하기 위함
 - 이번 조치는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

[그림 VI-1] 채무비용 변화(1870~2026년)



자료: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20*, 2020.11.30., p.108.

135) GDP의 19%에 달하는 약 4,070억캐나다달러가 코로나19 대응 및 퇴치를 위해 지출되었으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지출규모로 여겨짐

2) 지방정부 지원

- (준·주정부 지원) 정부는 현재까지 240억캐나다달러가 넘는 예산을 준·준주 정부에 직접 지원했으며, FY2020-21년 총지원금액은 850억캐나다달러 이상
 - (재정 지원) 연방정부는 재정 안정화 프로그램(fiscal stabilization program)을 개혁하여 매년 5% 이상의 비자원 수익 감소¹³⁶⁾를 겪고 있는 주정부에 대한 지원금 확대
 - 이번 개혁을 통해 주정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인당 60캐나다달러에서 FY2020-21에는 170캐나다달러로 증가하며, 향후 지원 한도는 보다 확대될 예정

3) 세계 강화

- (디지털세 부과) 연방정부는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에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할 방침
 -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21-22년을 시작으로 향후 5년에 걸쳐 34억캐나다달러 규모의 디지털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임대업 세금 징수)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반 단기 임대사업에 상품용역세와 통합판매세를 적용할 예정
 - FY2021-22부터 향후 5년에 걸쳐 3억 6천만캐나다달러의 신규 수익 창출 기대
- (조세회피 방지 강화)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억제·예방하기 위하여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에 FY2021-22부터 5년간 6억 6,600만캐나다달러를 추가 지원
 - 이러한 조세회피 방지책으로 향후 5년간 14억캐나다달러의 세수가 회복될 것으로 추산
- (세무조사 강화) 정부는 조세회피, 재산은닉, 자금세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5년간 6억캐나다달러를 투자
 - 외국인 비거주자가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불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세금부과 방안을 준비 중

136) 재정 안정화 프로그램은 가파른 재정 악화의 늪에 빠진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으로, 기계, 항공, 전자와 같은 비자원(non-resource) 부문 수익이 5%, 자원부문 수익이 50% 이상 급락하는 경우 연방정부에 안정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음

〈표 VI-9〉 '신중한 재정계획' 지출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코로나19 경제대응 계획 신중한 재정계획	2020~ 2021	2021~ 2022	2022~ 2023	2023~ 2024	2024~ 2025	2025~ 2026	합계
디지털세 부과 (Fair Tax System for the Digital Economy)	1	-596	-1,283	-1,447	-1,512	-1,692	-6,529
공정과세 및 납세 준수 강화 (Improving Tax Fairness and Strengthening Compliance)	210	-20	-92	-205	-240	-336	-684
채택근무자 세금공제 ¹⁾ (Home Office Expense Deduction)	210						210
순 재정 영향(net fiscal impact)	211	-616	-1,375	-1,652	-1,752	-2,028	-7,214

주: 1) 채택근무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21년 예산 2,100억캐나다달러를 편성하여, 세금공제를 통해 월세, 관리비 등 채택근무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 신청비용이 최대 4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증빙자료 없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도 간소화

자료: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20*, 2020.11.30., p.117.

4) 시나리오별 재정수지 및 연방채무

□ 바이러스 통제 이후,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추가적인 부양책을 실시할 예정

- 〈표 VI-10〉과 같은 4개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으며, 재정부양책의 지출규모, 시기,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중에 있음

〈표 VI-10〉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구분	2020~ 2021	2021~ 2022	2022~ 2023	2023~ 2024	2024~ 2025	2025~ 2026
시나리오 1						
재정부양책(Stimulus)	-	-20	-40	-10	-	-
재정수지(Budgetary Balance)	-398.7	-156.7	-99.6	-61.7	-39.4	-33.4
연방채무(Federal debt) (GDP 대비 %)	51.4	56.0	57.3	57.3	56.5	55.5
시나리오 2						
재정부양책(Stimulus)	-	-25	-30	-15	-	-
재정수지(Budgetary Balance)	-398.7	-161.7	-89.6	-66.7	-39.4	-33.4
연방채무(Federal debt) (GDP 대비 %)	51.4	56.2	57.1	57.3	56.5	55.5
시나리오 3						
재정부양책(Stimulus)	-	-20	-50	-30	-	-
재정수지(Budgetary Balance)	-398.7	-156.7	-109.6	-81.7	-39.4	-33.4
연방채무(Federal debt) (GDP 대비 %)	51.4	56.0	57.7	58.5	57.6	56.6
시나리오 4						
재정부양책(Stimulus)	-	-30	-50	-20	-	-
재정수지(Budgetary Balance)	-398.7	-166.7	-109.6	-71.7	-39.4	-33.4
연방채무(Federal debt) (GDP 대비 %)	51.4	56.4	58.1	58.5	57.6	56.6

주: 각 시나리오는 재정부양책 규모별 공공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예를 들어, 시나리오 1은 총 700억캐나다달러의 재정부양책이 200억, 400억, 100억캐나다달러로 나뉘어 FY2021-22부터 3개년에 걸쳐 실시되는 경우, 집행 이후 재정수지 및 연방채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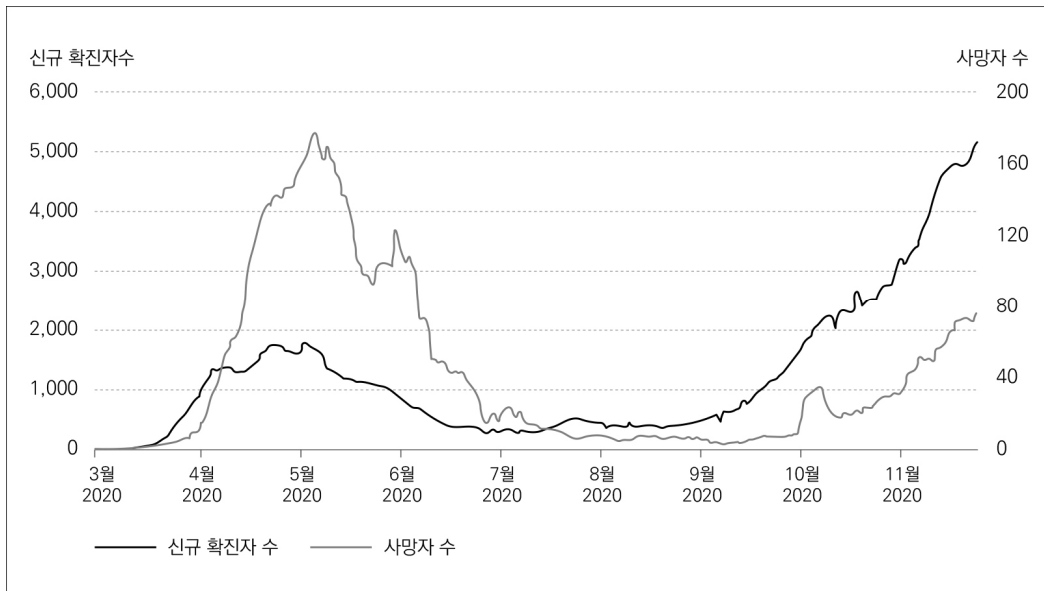
자료: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20*, 2020.11.30., p.105.

4 코로나19 대응

가. 코로나19 현황

[그림 VI-2]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확진자 및 사망자 수

(단위: 명)



자료: 캐나다 재무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20*, 2020.11.30., Chart A1.1에서 발췌

□ (코로나19 현황) 2020년 11월 24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5천명 수준으로 500명 이하였던 지난 8월 대비 10배로 증가

○ 2차 확산 대응에 실패할 경우 12월 말까지 하루 2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

나. 코로나19 지원 현황

□ (대응책) 정부는 2020년 11월 13일 기준,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총 3,220억캐나다달러 규모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520억캐나다달러는 공공의료 강화, 백신·치료제 구입 등에 사용될 전망

-
- (백신) 정부는 약 10억캐나다달러 예산을 투자하여 백신 4억 2,900만회분의 구매권리를 확보했으며, 1억 7천만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월 200만 회분의 국내 백신 생산 능력 또한 확보
 - 7억 9,200만캐나다달러를 엠셀레라(AbCellera) 및 메디카고(Medicago)에 투자하여 백신 개발 자국 기업의 백신 개발을 지원
 - 2억 8,400만캐나다달러를 편성하여 백신접종, 보관 장비 확보
 - (진단) 43억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일일 검사량을 20만 건으로 확대하고, 3,700만캐나다달러를 지원하여 역학조사 강화
 - 11월 기준 신속 진단키트 500만개가 이미 전국으로 배포되는 등 키트 사용이 확대
 -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업체들과도 약 3,800만개의 물량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정책분석 21-02

주요국 예산안 2021

발행	행	2021년 4월 30일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www.kj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디자인 범신	
I S B N	979-11-6655-058-4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주요국 예산안 2021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 www.kipf.re.kr

9 791166 550584 93320
ISBN 979-11-6655-058-4